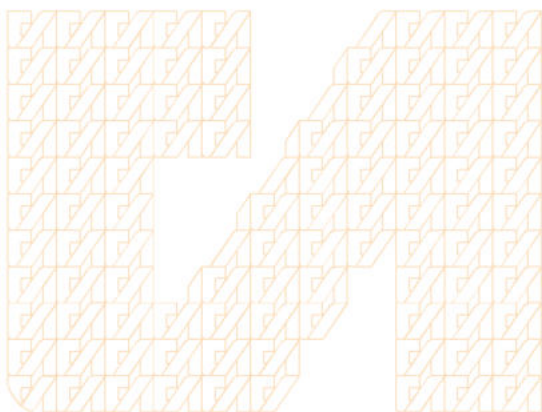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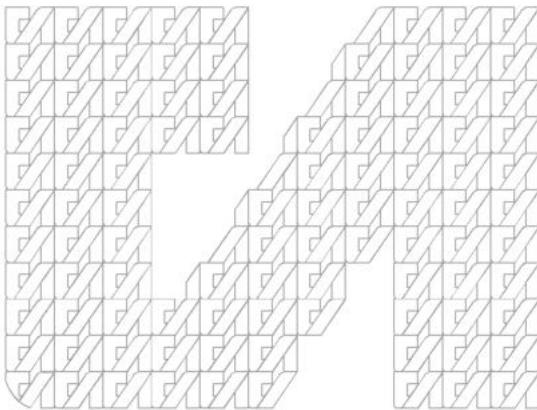
미래전략도시 세종시 이슈와 발전 방향

김성표 외



미래전략도시 세종시 이슈와 발전 방향

김성표 외



연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표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병호 / 혁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범규 / 혁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지남석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안용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이윤희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김흥주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최성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남영식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이재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송양호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이자은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유승규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서환석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희은 / 조사원 • 황지혜 / 조사원

전략연구 2022-04

미래전략도시 세종시 이슈와 발전 방향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전민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세종청사) 30147 세종시 한누리대로 1966(소담동 322)

전화: 044)550-3500 팩스: 044)555-3599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국보문화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구성

■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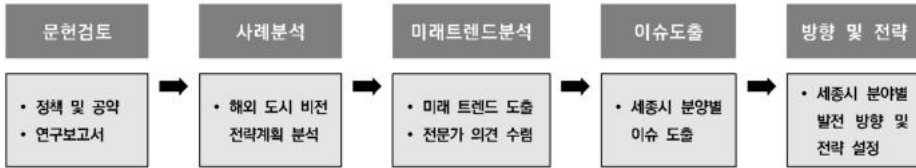
-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국가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 시민 주권 강화, 대중교통 지향, 친환경도시 구축, 여성친화도시 구축, 문화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건설되어 왔음
-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의 분야별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 모색 필요
-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향후 세종시 발전 방향 검토 필요

■ 연구의 목적

- 세종시 분야별 분석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발견
- 향후 10년 동안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분야별 발전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향점 제시

■ 연구의 구성

- 관련 분야 정책과 세종부의 공약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해외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계획을 검토하여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데 참고
- 향후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종시에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
- 분야별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



[그림 이] 연구의 구성

2. 해외 사례

■ 다른 나라의 도시들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와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경제 부문에서는 산업 부문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인접 지역을 고려한 정책 수립, 문화와 창조산업 육성, 농촌 경제 발전 추구, 지식생산과 벤처에 대한 부분도 고려
- 교통 부문에서는 커뮤니티의 연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 교통량 감소 정책,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구
-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서는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 보육시설 확대, 15분 거리 커뮤니티를 추구
- 문화 부문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징적 시설과 문화 개발, 문화 산업과 생태계 조성 지원, 문화유산 자원 보호 추구
- 스마트시티 부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 환경 조성 필요
- 농업 부문에서 스위스의 경우 직접지불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3. 2030 메가트렌드

■ 사회 분야 시사점

- 세종시의 사회 분야 시사점으로는 ‘시민수요 기반의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아동·청소년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비대면 서비스 개발’, ‘ICT 기반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해소 교육’, ‘기술지원정책’, ‘재난 대응형 공간구조’, ‘감염병 대응 의료보건 인프라’가 제시됨
- 기술 분야 시사점으로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시민중심의 활용’ 등이 제시됨

■ 기술 분야 시사점

- 기술 분야 시사점으로 ‘스마트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시민중심의 활용’ 등이 제시됨

■ 경제 분야 시사점

- 경제 분야 시사점으로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활동 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시스템 구축’, ‘서비스 기술과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선도형/혁신형 기업 유치’, ‘특화 산업 발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제시됨

■ 환경 분야 시사점

- 환경 분야 시사점으로는 ‘대중교통 및 친환경자동차 정책 강화’, ‘기후 변화 적응 주류화 추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RE100 실천’, ‘세종형 저탄소 에너지자립 도시 구축’,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저감과 지구 온난화 교육 확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나리오 추진’ 등이 제시됨

■ 정치 분야 시사점

- 정치 분야 시사점으로는 '역내 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연계전략 수립', '종합적 행정수도 기능 구축', '공동체 의식 제고', '시민 참여 활동, 제안 정책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의 활성화' 등이 제시됨

4. 세종시 이슈

■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은 개발 초기보다 감소하고 있어, 행정 기관과 연구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자족 기능 미흡과 높은 상가공실률, 열악한 농촌과 농·식품 산업

- 세종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요 산업군을 선정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요 산업군별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상가공실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공실률이 높고,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공실로 인한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높아 실질적인 대책을 통한 지원 필요하며, 소상공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원 방안과 관련 예산 확충 필요
-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이 낮음. 영세소농의 비중이 전국 보다 높고 농가와 농가인구 비중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남.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가경제와 농촌사회 붕괴에 대응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필요함. 지역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강화와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사업모델을 위해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의 다양성, 소비자의 편리성 고려 필요

■ 대중교통 인프라, 첨단기술의 확장 기반, 광역교통망의 부족

-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지향 도시로 설계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됨
-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 12.8%의 낮은 대중교통 분담율,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 차고지 부족도 이슈로 지적
-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높지만 인프라 접근성은 낮음
- 두루타 서비스의 고도화, 경제적 지속성 확보와 교통취약지역 연관된 민원
- 서클의 권역 확대와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성 확보
- 자율주행서비스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 제도와 체계 부족
- 대전, 청주와의 교통혼잡 증가, 서해안 지역과의 고속도로망 미흡
- 광역철도 등 철도교통수단 부재, 청주공항 접근성, 고속철도 이용 불편

■ 개발행위 증가, 투기적 부동산 거래, 도농 불균형, 행복도시 공간 변화

- 개발행위 증가와 일부 지역 집중, 보전관리지역 비중 증가, 대규모 민간 개발수요 증가할 가능성
- 투기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읍면지역 빈집 및 노후건축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효율 야기: 2020년 기준 빈집 1,457호, 50년 이상 21.7%
- 행복도시 공간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대응 필요: 국회세종이사당 건립에 따른 유관기관 수요 대응,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 간 단절, 세종시로의 도시계획 및 일부 관리 권한 이관에 따른 부담 가중

■ 대기환경 악화, 온실가스 감축, 수질 문제, 물순환 자료의 부재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 우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필요: 지역 맞춤형 탄소 중립 이행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
- 세종시 국가하천 구간 수질·수생태 관리 및 개선 노력 요구: 하수처리 시설 용량 대비 처리량 88%, 하천수질 오염 및 악취 문제, 신규화학물질
- 개발 이전 대비 불투수율을 포함한 물순환 자료가 전무, 개발 과정에 따른 물수지 변화량 추적 필요

■ 조직 특례 권한 미흡, 재정 안정성과 성장성 저조

- 시 특성에 맞는 조직특례 권한 미흡: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추진체계 미흡
-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급증, 취득세 감소, 재정적 특례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의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성장성 저조

■ 1인 가구의 증가, 높은 경력단절 여성 비중,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

- 1인 가구의 증가, 3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앙정부와 시정 공약 중 1인 가구 지원 정책 세부 과제 검토
-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 인력 활용
- 세종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증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서 중앙부처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추진 과정에 참여

■ 부족한 문화 인프라, 미약한 콘텐츠 산업 기반, 문화적 정체성 결여

- 문화 향유를 위한 인프라·콘텐츠 부족: 기반구축 중점에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 지역별 특화 및 연계
- 미약한 콘텐츠 산업 기반: 0.1%~0.3%, 지역대학 관련 학과 존재, 전문 거점기관 부재
- 도시건설 과정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결여: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대왕, 한글, 세종학
-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 부족: 행정수도 위상에 적합한 관광 랜드마크 조성 필요, 금강 활용한 창조적 콘텐츠 발굴

5. 세종시 발전 방향

■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거점과 동북아 중심으로

- 행정수도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직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더하여 사법기관의 이전 추진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시 필요
- 행정수도 이후에 국가 미래전략의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래전략 도시에 대한 깊이 있는 구상과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거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치행정수도의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 구축 필요

■ 자족 기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첨단 ICT 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미디어, 정보보호 산업 분야에 집중 육성
- 소상공인과 상권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함.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로컬 브랜딩 및 골목산업을 육성하여 로컬상권을 강화

해나가고,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쳐야 함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 가야함. 농민 수당 도입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해야 함. 싱싱장터 확대, 공공급식 효율화 및 안정화, 생산과 소비 연계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를 증시하는 관계시장을 형성하는 지역 푸드플랜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인프라 및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주차 수요 및 공급 분석: 각 지역별 주차 공간 파악, 주차면적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 마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차 공간 활성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 통행 패턴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통행패턴, 버스 배차 간격, 정시성 분석
-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환승주차장, 대중교통수단 연계, 승용차 억제 정책)
- 자율주행서비스 관련 지원 제도 강화: 관련 조례 제정, 기술발전지원금 마련 등
-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서비스 제공: 버스요금 무료화(BRT버스 증차, 주차 요금 현실화), 교통신호체계 첨단화(데이터 기반 신호관리)
-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서울-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및 기능 보완, 동서간 고속도로 확충
- 인접도시간 광역도로 확충: 행복도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 광역철도망 건설: KTX 접근성 강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건설 추진
- 광역BRT 확충: 세종-청주, 세종-공주 BRT 등 광역BRT 조기 건설 추진

■ 스마트시티 구축

-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조성: C-ITS 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
- 디지털 트윈 시티 구축: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
-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한 기업 유치, 인력양성, 사이버 보안 훈련장 구축 추진
- 드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드론 상용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도농 불균형 완화

-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방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체크리스-사전협상제-지구단위계획 지침 연동
- 토지거래 관리 시스템 구축: 토지거래 관리 및 모니터링 전략 마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지역별 정체성 확립, 세종미래마을(안)
- 행복도시 공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디어단지 건립,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오픈스페이스 연계를 통한 휴식공간 창출, 랜드마크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환경 서비스 증진

- 지역맞춤형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발생원인 과학적 분석, 시민영향 DB 구축, 대기질-기후변화 대책 수립시 공익을 고려한 우선순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건축물의 제로네이지화, 친환경차량 전환 및 PM 활성화, 친환경에너지원 다변화 및 시민참여, 제로웨이스트 순환경제 선도도시 전략, 탄소흡수원 확대
- 세종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 기능 강화: 댐-하천, 본류-지류 합류부에 대한 관리방향 명확화, 지방하천 제방 보강·신설, 스마트홍수관리

- 하천 환경성 회복과 물복지 로드맵 구축: 지류·지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물환경 통합 모니터링, 세종시 물복지 로드맵 구축

■ 조직 특례 및 재원확보

- 조직 특례 확보 방안: 행정기구 및 정원 특례(조례에 근거를 둔 특례 적용), 인사교류 확대(세종시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특례)
- 재원확보 방안
 - 다른 자치단체와의 제로섬 게임에 대한 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순차적 문제 해결
 - 재정특례 검토: 행복도시 특별회계 증대, 지방교부세 증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선, 균특회계 세종시 비중 확대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모색 및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모색: 청년 1인 가구 통합지원, 1인 가구 고립 예방
- 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 신설 및 운영: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유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확대: 평가 기준 맞춤형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선도적 아동친화도시로의 전략
- 산업단지 내에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시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도모

■ 지역자원, 인프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 문화 향유를 위한 인프라·콘텐츠 개발: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시립 미술관 조성,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
- 유희 공간 및 공실 상가 활용: 읍면지역(근대역사 공간을 활용한 문화 거점), 동지역(공실 상가 활용한 소극장 거리, 콘텐츠 플레이스)
-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설립: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미디어단지와 연계한 콘텐츠 거점기관 설립 추진

- 지속가능한 IP 발굴: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사건 등의 연구와 활용 가능성에 기반한 IP 발굴, 융합콘텐츠 기업 발굴 및 지원
- 한글을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한글문화 체계, 한글문화단지, 한글 교육 국제거점도시, 시민 공감대 형성
-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활용: 시 단위 문화유산 지정(낙화놀이, 가야금산조, 원수산 산신제), 독립운동가 맹의섭 서훈, 일제잔재 청산
- 지역자원의 창조적 활용: 금강을 활용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문화자원 연계(보행교-호수공원-중앙공원-둘레길-은행나무 역사공원)
- ICT 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구현: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

차 례

1장 연구의 개요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11
2장 정부 정책 및 공약 검토	15
1절 탄소중립 시나리오	15
2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3
3절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28
4절 새정부 공약	36
5절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전략과제	40
3장 해외사례 검토	51
1절 시드니	51
2절 오타와	65
3절 웰링턴	77
4절 캔버라	84
5절 쿠리치마	86
6절 워싱턴 D.C.	89
7절 싱가포르	93
8절 스위스	112
9절 시사점	120
4장 미래트렌드 분석 및 전망	127
1절 2030 미래트렌드와 변화 동인	127
2절 메가트렌드 평가 및 시사점	131

5장 분야별 주요 이슈	147
1절 경제산업	147
2절 교통	164
3절 도시계획	176
4절 환경	183
5절 지방행정	192
6절 여성·아동	196
7절 문화	205
6장 발전 방향 및 전략	213
1절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거점과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	213
2절 자족 기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215
3절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서비스 제공	225
4절 스마트시티 구축	234
5절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도농 불균형 완화	236
6절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환경 서비스 증진	242
7절 조직 특례 및 재원확보	252
8절 1인 가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255
9절 지역자원, 인프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258
참고문헌	265

표 차례

[표 1-1] 교통수단 분담률 현황(2019년)	6
[표 2-1] 윤석열 정부공약으로 예상되는 세종의 변화	37
[표 2-2] 자족경제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41
[표 2-3] 문화예술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42
[표 2-4] 의료복지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43
[표 2-5] 교육특구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44
[표 2-6] 한글사랑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44
[표 3-1] 싱가포르 금융보험업 성장률 추이	102
[표 3-2] 싱가포르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추이	105
[표 3-3] 싱가포르 관광업 주요 분야 연간 수입	107
[표 3-4] 스위스 총부가가치(GVA) 비중 추이	112
[표 3-5] 농업구조(2021)	113
[표 3-6] 스위스 직접지불제의 기본 틀	118
[표 3-7] 스위스 농업정책 예산	119
[표 3-8] 스위스 직접지불제 예산(AP 18-21)	119
[표 4-1] 사회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28
[표 4-2] 기술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29
[표 4-3] 경제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29
[표 4-4]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30
[표 4-5]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30
[표 4-6] 사회 분야 중요도 평가	132
[표 4-7] 기술 분야 중요도 평가	133
[표 4-8] 경제 분야 중요도 평가	134
[표 4-9] 환경 분야 중요도 평가	135
[표 4-10] 정치 분야 중요도 평가	136

[표 4-11] 사회 분야 이슈와 시사점	138
[표 4-12] 기술 분야 미래 트렌드	139
[표 4-13] 경제 분야 미래 트렌드	140
[표 4-14] 환경 분야 미래 트렌드	141
[표 4-15] 정치 분야 미래 트렌드	143
[표 5-1] 세종시 식품산업 주요 현황	153
[표 5-2] 역내 건설물량 창출 관련 추진사항	154
[표 5-3] 세종시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155
[표 5-4] 세종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155
[표 5-5] 세종시 경지면적 현황	155
[표 5-6] 세종시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2021)	156
[표 5-7] 세종시 연도별 농촌지역 지역소멸지수	156
[표 5-8]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157
[표 5-9]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158
[표 5-10] 광역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158
[표 5-11] 세종 공공급식 규모 추정('19)	160
[표 5-12] 세종 운영형태별 직거래 현황	161
[표 5-13] 세종 농가 생산 현황	161
[표 5-14] 세종 자급률 현황	162
[표 5-15] 2022년 5월 자동차 등록자료	167
[표 5-16] 세종시 교통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2019년 기준)	175
[표 5-1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규모별 현황	183
[표 5-18] 대기질 현황	184
[표 5-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186
[표 5-20] 미호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달성 여부	187
[표 5-21] 미호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달성 여부	187
[표 5-22] 세종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 수질	188
[표 5-23] 지자체별 물순환계획의 기본방침	190
[표 5-24] 세종시법 특례 주요 내용	192
[표 5-25] 세종특별자치시 기구 및 정원 근거 법령	193

[표 5-26]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인 가구 관련 세부 과제 리스트 ...	197
[표 5-27]	세종시 시정4기 공약 중 1인 가구 지원과 연계성이 높은 세부 과제 ...	198
[표 5-28]	세종시 비경제활동 인구나 그 사유	199
[표 5-29]	세종시 2022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 추진과제리스트	202
[표 5-30]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사업체 수(개소)	206
[표 5-31]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매출액(백만 원)	207
[표 5-32]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종사자 수(명)	207
[표 6-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개요	230
[표 6-2]	대전·세종권 광역BRT 건설 계획	231
[표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건설현황 및 추진계획	232

그림 차례

[그림 1-1] 세종시 인구 순이동자수(2012년-2021년)	4
[그림 1-2] 세종시 인구 순이동자수 비중(2012년-2021년)	5
[그림 1-3]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	6
[그림 1-4] 세종시 읍면지역의 상대적 낙후 여부	7
[그림 1-5] 지역간 불균형 원인	8
[그림 1-6] 상대적 낙후 판단 기준	8
[그림 1-7] 지역경제 성장률	9
[그림 1-8]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10
[그림 1-9] 연구의 구성	11
[그림 2-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내용	22
[그림 2-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과제 구성	26
[그림 2-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비전 및 목표	27
[그림 3-1] 시드니 경제 개발에서 시의 역할	51
[그림 3-2] 녹색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타 국가 조치	63
[그림 3-3] 녹색 경제를 지원하는 시드니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	63
[그림 3-4] 시드니의 녹색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64
[그림 3-5] 오타와의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75
[그림 3-6] 웰링턴의 Strategic Plan(2021-2022)	77
[그림 3-7] 워싱턴 GHG 동향 및 목표	90
[그림 3-8] 워싱턴 “What Would It Take” 시나리오 결과	91
[그림 3-9] 워싱턴 우선순위 협력 완화 조치	92
[그림 3-10] 풍골 코스트 역 & 풍골 디지털 지구	99
[그림 3-11] 버스환승센터 승·하차 대기공간 및 운영버스	100
[그림 3-12] 복합환승센터 내 MRT 연계구간 및 플랫폼 지하철 대기공간	100
[그림 3-13] 싱가포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목표 배출량(백만톤)	111

[그림 3-14] 스위스 농장당 활용된 농업 면적의 크기(1975-2021)	113
[그림 3-15] 스위스 농장 수 변화 (1975-2021)	114
[그림 3-16] 스위스 유기농업 분포도(2017)	114
[그림 3-17] '농장-최종 소비자' 농산물 직접판매량(2010-2020)	115
[그림 3-18] 농업 생산량(1985-2020)	115
[그림 3-19] 농업 분야별 총 생산 비율(2020)	116
[그림 3-20] 곡물별 생산 비율(2020)	116
[그림 3-21] 농장별 총 소득(2020)	117
[그림 4-1]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이슈 및 시사점	144
[그림 5-1] 5대 신산업 사업체 수	148
[그림 5-2] 5대 신산업 종사자 수	148
[그림 5-3] 세종시 동지역 집합 상가 공실률(2020년)	149
[그림 5-4]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체계	163
[그림 5-5]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164
[그림 5-6] 대중교통 만족도 불만 요인	166
[그림 5-7]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안내	167
[그림 5-8]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69
[그림 5-9]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운영 현황	170
[그림 5-10] 세종시 광역도로망 현황	172
[그림 5-11] 세종시 광역대중교통체계 현황	174
[그림 5-12]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분포(2012~2021년)	176
[그림 5-13]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추이와 읍면별 비교(2012~2021년) ..	177
[그림 5-14] 세종시 구역지정 현황	178
[그림 5-15] 읍·면 지역 빈집 추이	179
[그림 5-16] 읍·면 지역 노후건축물 비율	180
[그림 5-17] 읍·면 지역 유형별 노후건축물	180
[그림 5-18]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85
[그림 5-19] 에너지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85
[그림 5-20]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GRDP 추이	186
[그림 5-21] 세종시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및 폐수 배출사업장 현황 ..	188

[그림 5-22] 세종시 행복도시지역의 유역 변화(예)	191
[그림 5-23] 세종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91
[그림 5-24] 세종시의 연도별 세입 및 세출 추이	195
[그림 5-25] 세종시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변화 추이(2019~2020년) ...	196
[그림 5-26] 전국과 세종시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전망(2020~2050년) ...	197
[그림 5-27]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2017년 vs. 2021년) ...	199
[그림 5-28]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2017년 vs. 2021년) ...	200
[그림 5-29] 세종시 일·생활 균형 지수 변화(2019~2020)	201
[그림 6-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도(안)	230
[그림 6-2] 대전·세종권 광역BRT 건설 계획	231
[그림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건설현황 및 추진계획	233
[그림 6-4] 세종시 민간개발 관리시스템(예)	236
[그림 6-5] 사전협상제와 체크리스트의 도입·운영(예)	237
[그림 6-6] 이상거래 파악을 위한 분석과정(예)	237
[그림 6-7]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체성 부여	239
[그림 6-8] 세종미래마을 모델	240
[그림 6-9] 행복도시 미디어센터(좌) 구상(안) 및 오픈스페이스 연계(우) ...	241
[그림 6-10] 과학적 기반의 농도관리 추진체계	242
[그림 6-11] 조천유역 홍수위험지도(100년 빈도 기준)	247
[그림 6-12] ICT 기반 세종형 스마트홍수재난관리시스템 구축도(안) ...	248
[그림 6-13] 금강권역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250
[그림 6-14] 금강권역 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현황	250
[그림 6-15] 세종시 물관련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방안	251
[그림 6-16]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내·외부 환경분석	251
[그림 6-17] 세종예술의전당(좌), 2022년 세종축제 중 낙화놀이(우) ...	259
[그림 6-18]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좌), 한글사랑거리 대상지(우)	261
[그림 6-19] 원수산 산신각(좌), 땀의집 선생 묘소(우)	261
[그림 6-20] 안동 문보트(좌), 금강 보행교(우)	262
[그림 6-21]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사례_여수 미스테리트레일로드	263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1장

1장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세종시 이슈와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이슈 발견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국가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 시민주권 강화, 대중교통 지향, 친환경도시 구축, 여성친화도시 구축, 문화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건설되어 왔음
 - 특히 2022년은 새로운 중앙정부와 세종시 민선 4기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세종시 발전 방향을 검토할 적절한 시기임
 - 현재 시점에서 분야별 이슈를 발견하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수도권 집중억제에 대한 기여도 감소

- 세종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세종시의 수도권 집중억제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세종시 순이동자수는 61,729명으로, 정부기관이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

권에서 세종시로의 순이동자수는 평균 8,624명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평균 3,722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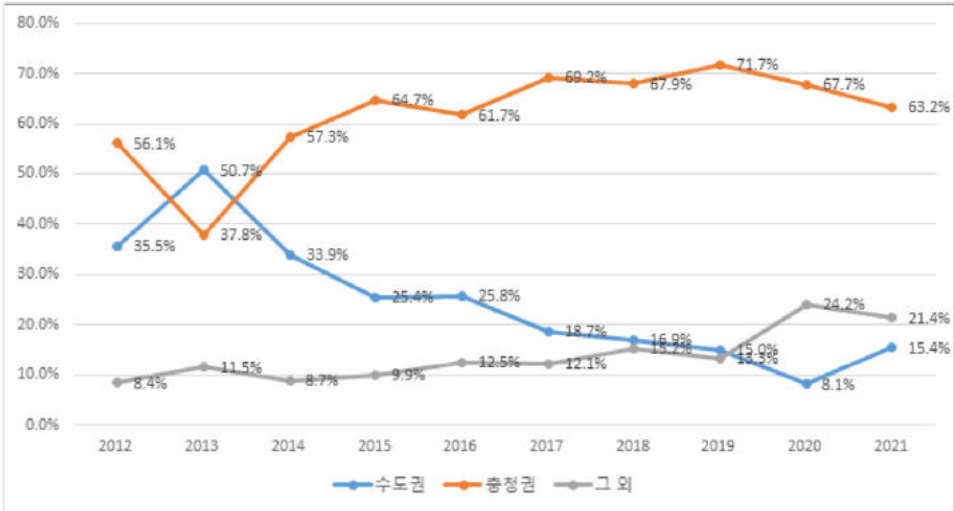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충청권의 세종시 순이동자수는 165,093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004명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6,015명으로 비슷한 수준



[그림 1-1] 세종시 인구 순이동자수(2012년-2021년)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 정부기관이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순이동자수 비중이 연평균 34.3%였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14.8%로 감소
- 같은 기간 충청권의 비중은 연평균 55.5%에서 67.9%로 증가



[그림 1-2] 세종시 인구 순이동자수 비중(2012년-2021년)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3)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도시교통 문제

□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부정적 효과가 표출

-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교통방 구축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
 - 자동차 위주의 도로망 체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도로용량과 주차용량을 제한적으로 계획
 - 대중교통 중심의 순환형(Two-Ring) 도로망 구축
 - 대중교통 분담율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실험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표출되고 있음
 - 승용차 분담율이 73.8%로 대전 61.7%, 대구 52.4% 보다 높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12.8%로 낮게 나타남
 - 제한적인 도로용량(주도로 4차선, 그 외 2차선)으로 인한 교통체정체 현상 심화
 - 상습적인 불법주차 문제
 - 대중교통의 연계성 및 편의성 부족 지속적으로 지적

[표 1-1] 교통수단 분담률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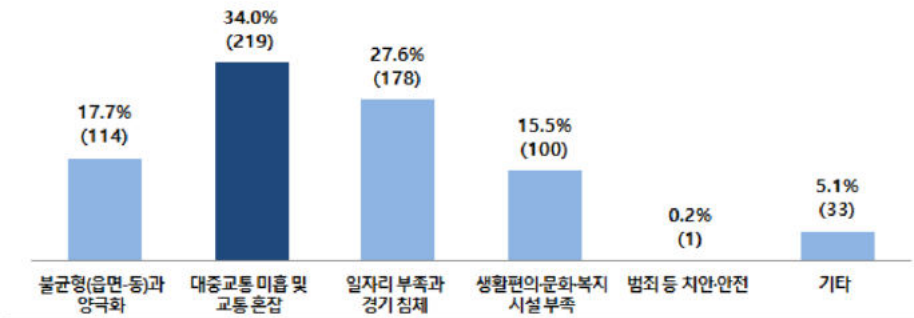
(단위 : 명, 백만원, 천원/명)

구 분	승용차	대중교통	택 시	기 타
대 전	61.7	24.6	9.3	4.4
세 중	73.8	12.8	5.1	8.2
충 북	62.5	15.4	13.7	8.4
충 남	60.9	17.0	13.2	8.9
대 구	52.4	29.2	9.7	8.8
인 천	49.3	37.8	7.9	5.1

자료: 국가교통 DB자료, 이범규(2022), '대전시 교통정책 현안과 과제', 대전세종정책연구소

-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시민들은 대중교통 미흡과 교통 혼잡을 지적
-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대중교통 미흡 및 교통 혼잡'이 34.0%, 다음으로 '일잘 부족과 경기 침체' 27.6%로 나타남

(단위 : %, n)



[그림 1-3]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

자료: 세종시(2021),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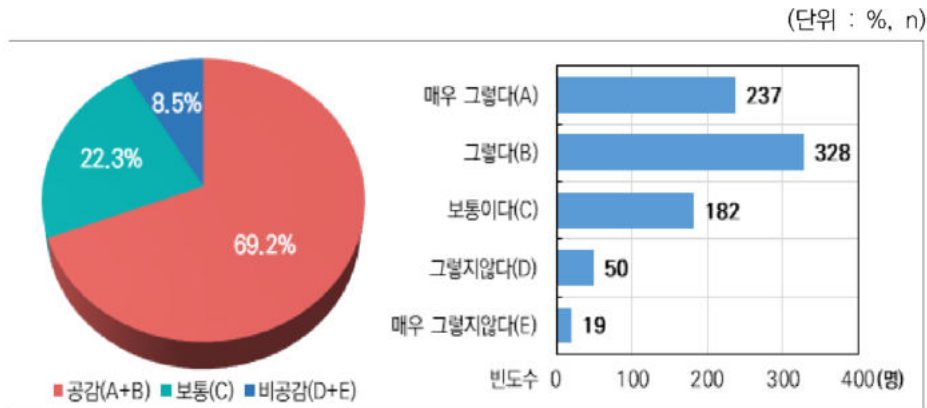
4) 지역간 불균형을 피할 수 없는 도시공간구조

□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심각한 지역내 불균형

○ 최초 계획에는 행복도시가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로 예정되었으나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행복도시와 연기군 등 주변의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2012년 7월 세종시로 출범

- 그 결과 세종시는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신도시지역과 전형적인 낙후 지역인 배후지역으로 구성된 도시로 탄생
- 배후지역이 신도시보다 면적은 5배 더 크나 인구는 23.7%에 불과하고 기반시설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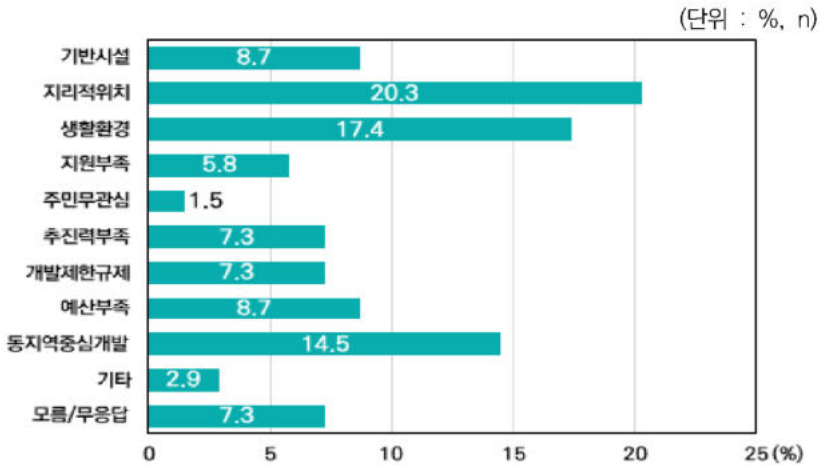
○ 세종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그렇지 않다' 8.5%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4] 세종시 읍면지역의 상대적 낙후 여부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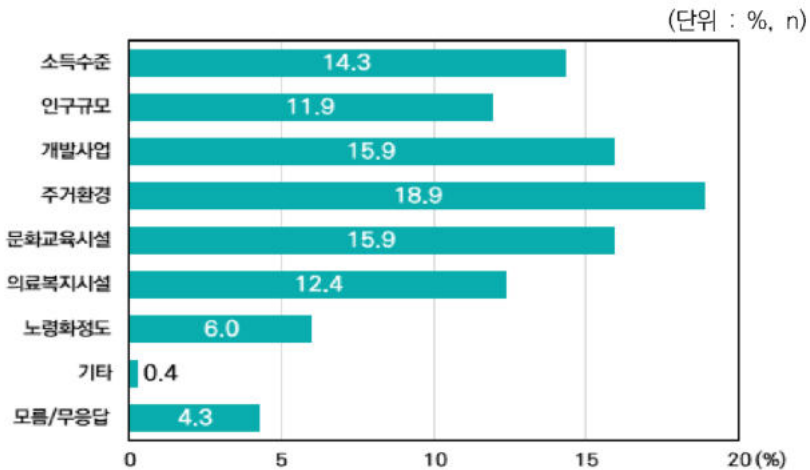
-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리적 위치' 20.3%, '생활환경' 17.4%, '동지역 중심 개발' 14.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지역간 불균형 원인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 읍면지역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거환경' 18.9%, '문화 교육시설'과 '개발사업'이 각각 1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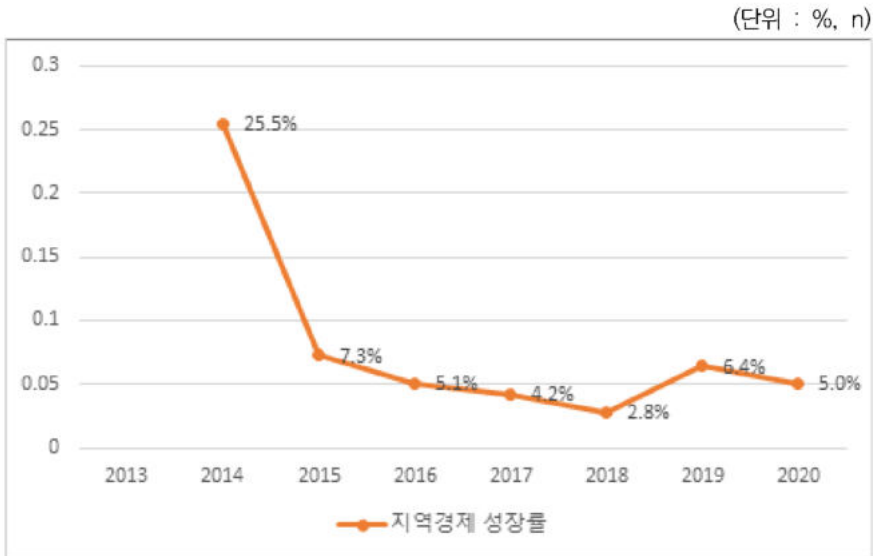
[그림 1-6] 상대적 낙후 판단 기준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5)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자족기능 부족

□ 지역경제 성장률은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

- 세종시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6.9조원에서 2020년 기준 11.6조원으로 약 5조원 증가
- 지역경제 성장률은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 6.4%, 2020년 5.0%를 나타내며 성장세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그림 1-7] 지역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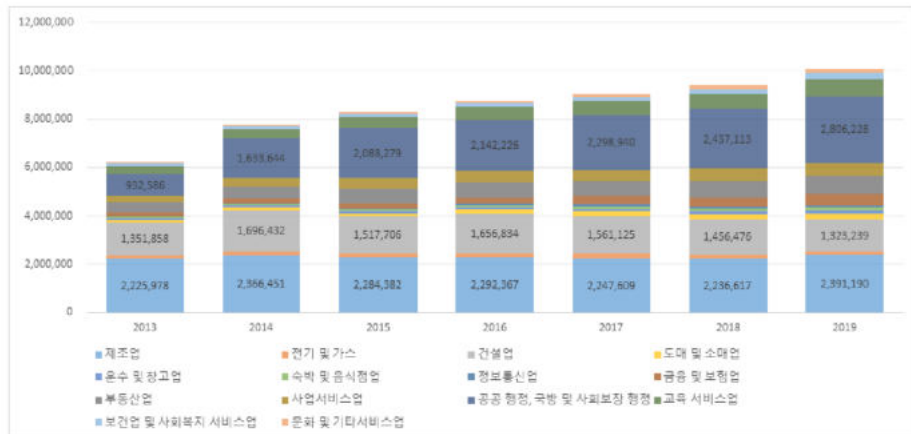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일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성장의 지속가능성 의문

-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를 보면 공공행정, 제조업, 건설업의 비중이 높으나, 향후 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도시건설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 이들 분야의 성장성은 약화
- 공공행정 분야는 2013년 13.5%에서 2020년 26.1%로 증가
- 제조업 비중은 2013년 32.3%에서 2020년 23.2%로 감소
- 건설업 비중은 2013년 19.6%에서 2020년 9.4%로 감소

- 부동산업은 2013년 5.8%에서 2020년 7.4%로 증가
- 교육서비스업은 2013년 5.0%에서 2020년 6.3%로 증가

(단위 : %, n)



[그림 1-8]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자료: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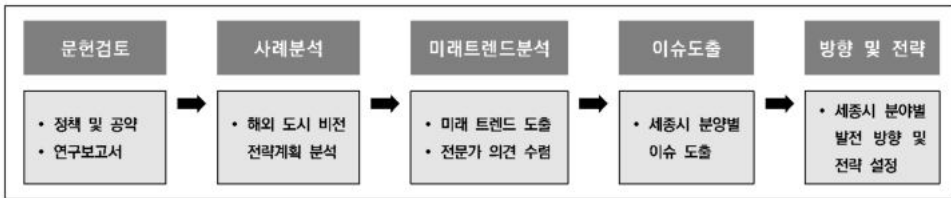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분야별 분석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발견
- 향후 10년 동안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분야별 발전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향점 제시

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방법

- 관련 분야 정책과 새정부의 공약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해외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계획을 검토하여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데 참고
- 향후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종시에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
- 분야별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



[그림 1-9] 연구의 구성

□ 연구의 기대효과

- 향후 10년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세종시 민선 4기 주요 정책 어젠다 및 사업 발굴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정부 정책 및 공약 검토

- 1절 탄소중립 시나리오
- 2절 디지털 전환
- 3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 4절 새정부 공약
- 5절 세종시 미래전략도시 전략과제
- 6절 시사점

2장

2장 정부 정책 및 공약 검토

1절 탄소중립 시나리오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사회 부문별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 수립 원칙: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 2050 탄소중립 사회 부문별 미래상
 - 전환 부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2020년 6.6% → 2050년 60.9%~70.8%)
 -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2020년 3.4% → 2050년 85~97%)
 - 산업 부문: 연·원료 대체 산업공정 스마트화(철강 “100% 수소 및 전력 기반 전환”, 시멘트 “유연탄 100% 친환경 연료 대체”, “석유화학 바이오, 수소 연료 활용 기존 납사 52% 전환” 등)
 - 건물 부문: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신규 100%), 기존건물 그린 리모델링 이행(100%)
 - 농축수산 부문: 농기계·어선 연료의 전력화·수소화, 저탄소 가축관리
 - 폐기물 부문: 폐기물 발생 25% 감축 및 재활용 90%,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2.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

① 전환 부문

○ 탄소비용을 발전원가와 전기요금에 반영

- 연료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비용도 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 탄소비용은 연료비 등 다른 비용과 함께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행정절차 및 민원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도입 필요
-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여야 함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전성 확보

-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망 관리조직인 한국전력이 망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함
- 전력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비구축, 규제 및 운영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요구됨

○ 화석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 독립된 사회적 논의기구(예시: 독일의 ‘탈석탄위원회’)를 통해,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화력발전의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R&D 강화로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 차세대 기술개발로 태양광,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대폭 감축해야 함
- 해양에너지(조류, 파력 등) 등 신규 발전원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소기반 발전원(무탄소 가스터빈 등)의 상용화를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수요 및 발전량 예측기술, 운영기술 등도 조기에 확보해야 함

○ 전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기 소비 절약

-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
- 전기요금이 수요공급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되어야 함
- 가격체계 전환 필요(경직적 가격체계 → 경쟁적 가격체계)

② 산업 부문

○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R&D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관련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 핵심 감축기술(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비탄산염 원료 등)의 실증화와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 시장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및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저탄소·녹색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 및 교육체계 마련 등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신규 저탄소·녹색산업과 관계된 신규일자리 적극적으로 발굴

③ 건물 부문

○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

- 건물 소유주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 시장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도 도입, 공동주택 RE100 제도 등이 필요

○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 Off-site 제도 활성화,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제로에너지도시 지정·운영 등 검토

④ 수송 부문

○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수송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다양한 안전망(기술개발 지원, 부품·정비업계 등의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마련 신속히 추진 필요
- 중소형차 중심의 보급형 무공해차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이 필요
- 대체 연료(e-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와 관련한 기술개발 진원 및 신기술의 상용화 방안 마련 필요
- 전기차 산업 서비스(충전소, 배터리 등) 분야를 포함한 후방산업 육성 병행 필요

○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 수요자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생활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확보, 충전 및 결제시스템의 규격화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신속히 추진
-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및 대상 확대 필요
-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해 법제화
- 지원방안 마련: 중대형차의 전환기술개발 지원

○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⑤ 농축수산 부문

○ 식량안보 강화와 농·어업 기후적응 정책 강화

-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 추진 필요
- 기후위기 적응 기술지원체계 강화, 적응정책(재해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적극 추진
- 수산업 기술지원체계(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적응 수산종자 연구 및 열대성 수산질병 대응 등) 강화 필요

○ 농축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 친환경농업(논물 관리, 화학비료 저감, 토양 탄소저장 강화 등) 확대
-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정밀 농업 등) 개발 및 보급·투자 확대 필요
- 농축수산 기술 혁신 필요

○ 농수산 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 먹거리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ICT 기반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활용 농자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지원 강화

⑥ 폐기물 부문

○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 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와 재활용·재이용 기술개발 등 친환경적 처리방안 신속히 마련

○ 폐기물 분야 통계 개선

- 폐기물 중 소각·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폐합성고분자 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관리를 통해 폐기물 분야의 보다 정밀한 온실가스 발생통계 및 인벤토리 산정방법 개선

⑦ 수소 부문

○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 공급기반 강화

- 핵심 소재 및 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수전해 효율과 안정성을 개선하여 국내 그린 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

- 수소의 이용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넘어 수소터빈 등 다른 이용기술, 생산기술 및 액화, 전환(암모니아), 수송, 저장 기술도 연구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를 조기 육성하고, 안전 규격을 마련해 수소시설의 안전성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함

⑧ 흡수원 부문

○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및 신규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

- 도시 생활권의 숲 조성 확대 및 핵심 산림 생태축 보전·복원 필요
- 블루카본 호기층 등 산림 외 흡수원 확보 노력 필요

○ 산림의 지속성 확보

-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산림 내 수종과 연령의 다양성 증대 필요
-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증진 필요
- 스마트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림재해 예측·예방 역량 강화 필요
-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및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 마련 필요

○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등 국산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제품의 수명이 긴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필요

○ 해양 생태를 활용한 탄소 흡수원 확충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강화 필요

- 해양의 탄소 흡수량 관련 연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초지 및 도시지역 녹지 등 흡수원 추가 발굴
 - 초지조성 부담금 지원 등을 통한 신규 조성 확대 필요
 - 식생복구,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추가 흡수원 확대를 위해 노력 필요
 - 흡수원의 정밀 평가를 위한 국가통합토지관리 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
- 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부문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 CCUS 상용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와 차세대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간 R&D 지원을 통해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 CCU 기술이 적용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
 - 대규모 CCS 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및 민관의 협력 강화
 - CCS 사업에 대한 수용성 환경 개선 필요
 - CCS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충분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국외 CCS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양자, 다자간 국제 협력 강화 필요
 - CCS 사업이 경제성과 기술적·정책적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 필요
 - CCUS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경제적 지원제도(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마련 필요
 - CCUS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산정체계 마련, CCU 제품 산업화 지원 등 제도적 확충 신속히 필요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

- 제도적 기반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협력·교육



[그림 2-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내용

출처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개요

- 비전: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목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 5대 전략: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 비전: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목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 글로벌 연대: 연대를 통한 디지털 가치 확산

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특징

- “디지털 심화”에 본격 대응하는 디지털 종합전략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심화 본격화에 따라 ‘디지털’로 촉발된 경제·사회 혁신에 대응하여 수립되는 우리나라 ‘디지털 중심’ 국가전략
- 범부처 과제를 종합·연계하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방향 제시
 - 디지털이 촉발하는 경제·사회 전 분야 변화를 포괄하며, 이를 담기 위해 부·처·청 전체 중요 과제를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포괄
- 세계 최고, 초일류,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 우리나라는 TDX, CDMA, 5G,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과 경험 보유함, 충분한 역량·잠재력으로 초일류 지향
-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전반의 생산성 제고
 - 성장과 도약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혁신(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제적 진보를 구현 가능)으로 개인·기업·정부 전반의 생산성 제고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강조
 - 민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시장·산업에 투자 및 리드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 포함

3. 세부전략 및 추진과제

- 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 혁신기술(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분야 집중 투자
-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
 - R&D 지원, 전 분야 AI 융합·확산
 - 안전한 데이터 축적·개방, 양질의 데이터 연계·결합을 바탕으로 공공·민간부문 클라우드 대전환
 - 서비스형 SW(SaaS) 중심으로 SW산업 전면 재설계
-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 민관협업으로 원천기술 개발 및 핵심특허 조기 확보 주력
 - 네트워크 기술·구조적 안정성 강화
 - 기술·인재 경쟁력 강화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인재 부국 달성
 - 대학의 교육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 병행
 -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정부의 재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민·관 역량 총 결집
-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플랫폼 산업 육성
 - 국내 OTT 집중 육성,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 초기 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정·건강한 플랫폼 경쟁·이용환경 조성, 블록체인 및 디지털 인증 기술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
 - 혁신기술(딥테크) 기반 투자 및 성공 사례 중심 지원 강화,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형성 추진,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 수립 추진
 -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 확대

- ②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가상공간 기반으로 한류의 영향력 전 세계로 확장, 미래형 헬스케어 산업 전면화, 물류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환
 - 미래형 제조업으로 선진화
 - 전통 제조업 밸류체인 생산성 혁신
 -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 및 미래형 제조업 발굴·육성
 - 농·축·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디지털 기반 농·축산업 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산물 수출산업화 추진

- ③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 국민의 생명을 디지털로 지키는 안전망 구현, 복지 정책들을 디지털로 구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적극 활용
 -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 보장
 - 디지털 접근권과 리터러시 확보
 - 디지털로 재탄생하는 지역사회 구현
 - 지역의 디지털 산업 기반 마련 및 초광역 디지털 협력

- ④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 혁신 인프라 구현 및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 AI·데이터 기술 기반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업무방식으로 전환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및 이용 기반 마련

⑤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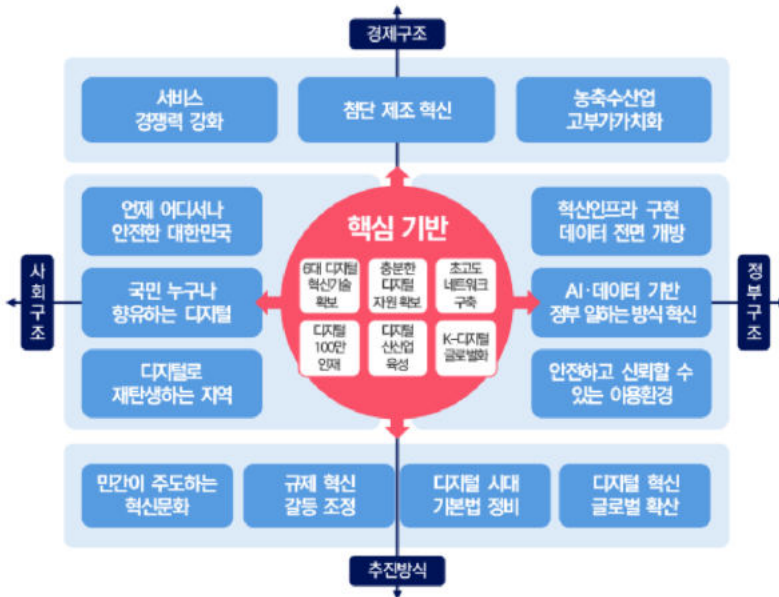
○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 정착

- 기업·국민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참여하는 문화 확산 지원

○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및 갈등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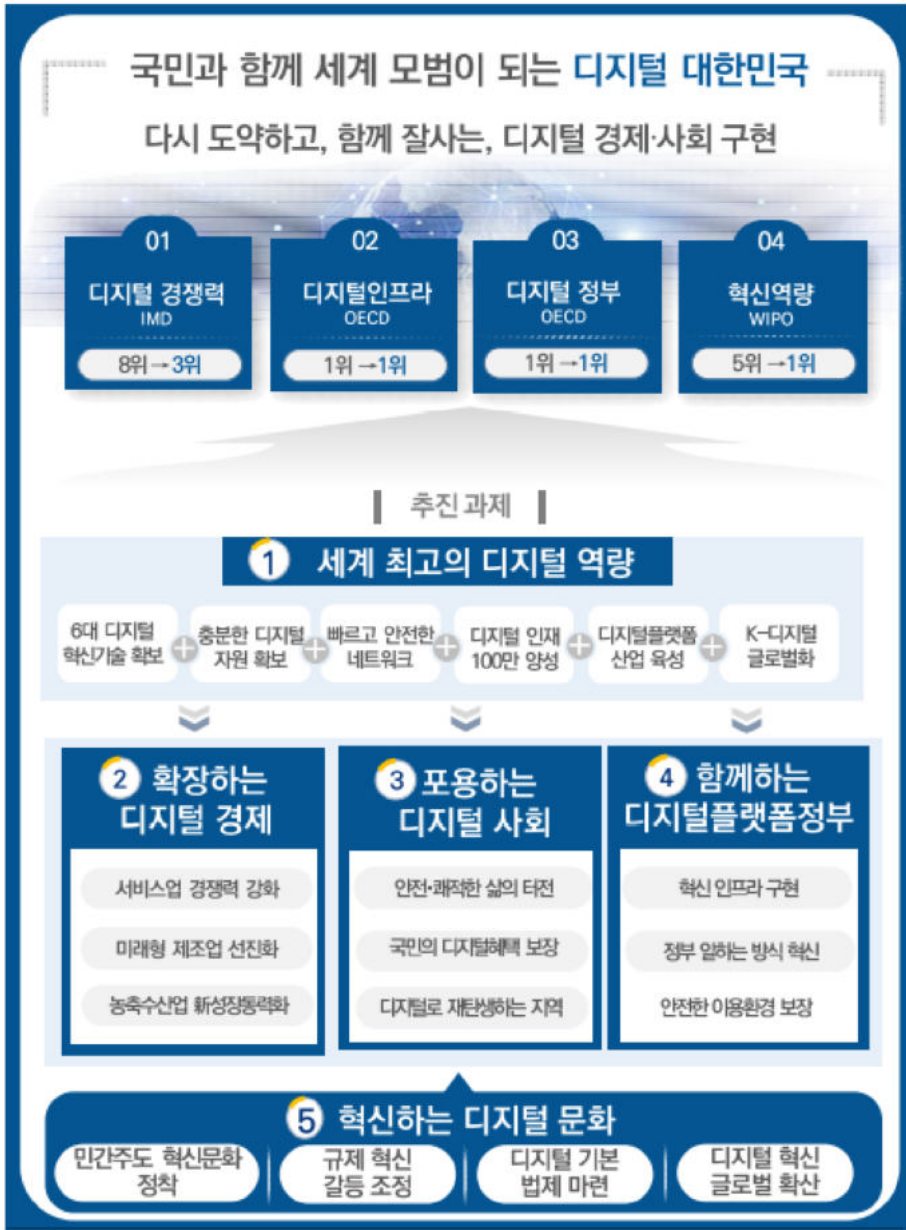
- 근본적인 규제 혁신 추진 및 혁신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조정 강화
-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기존법제 정비 및 디지털 경제·사회시대 국가의 기본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법제 마련 추진

○ 디지털 혁신의 글로벌 확산



[그림 2-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과제 구성

출처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그림 2-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비전 및 목표

출처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3절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1. 민간중심 역동경제

1)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마련
 -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 제거
 - 규제권한 지방이양, 규제 원샷해결, 「상생혁신펀드」 조성 검토,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신설
-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
 -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규제 합리화 검토·추진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조정 및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
 -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등 지속 추진
 -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 추진

2) 기업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 민간 · 기업 · 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 ·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기업의 투자 ·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 세대 간 기술 ·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3) 중소 · 벤처기업 육성

- 중소 · 벤처기업이 민간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매김 하도록 적극 뒷받침
-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성장 · 혁신지원)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 · 경쟁력 제고 · 혁신성장 등에 집중 지원
 - (신산업 진출 지원)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기업들의 규제 · 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 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 · 추진
 - 조정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문화 유도 병행
 - 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2. 체질개선 도약경제

1) 공공·연금개혁

-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 건전재정 기초 확립, 재정제도 혁신 및 합리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 기능·인력 조정,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유도, 재무건정성 확보, 보수·인사·조직관리의 직무·성과중심 전환
-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 공적연금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 노동시장 개혁

-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제로 전환·확산
-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논의 추진

3) 교육개혁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
-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 대학규제 혁파, 첨단분야 인력양성 관련 규제개선, 대학평가 개편

- 재정여건 개선
-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4) 금융혁신

-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자본시장 재도약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
 -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

5) 서비스산업 혁신

-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
 -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마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입법추진
 - 서비스 수출 지원 기반 강화 및 서비스 R&D 투자 확대
-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상 지원 차별 해소

- 신성장 서비스업(예: OTT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
-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3. 미래대비 선도경제

1) 과학기술 · R&D 혁신

-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 개편 · 지원
- 신기술 확보 ·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 R&D 정책 수립
 - (R&D 선정) 신속한 문제해결 · 기술확보에 중점 두고 제도개편
 - (R&D 평가)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R&D 평가 시스템 마련 · 실시
 - (국제협력)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 · 양자 · 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
 -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 추진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 지원
-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
- 핵심과제 중심의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 TF(기재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
- 경제활동인구 확충 핵심과제 추진
 -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인적자본) 전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재직자 등 대상 일터-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 축소·고령사회 대비 핵심과제 추진
 - (학령·병역인구 감소) 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추진
 - (의료·돌봄·요양시스템)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 지역의료·돌봄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 추진
 - 부모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 강화
 -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4)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
-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등 검토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함께 가는 행복경제

1) 사회안전망 강화

-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기초생보)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대상·급여 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상병수당 도입 추진
 - (재난적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 확대
 -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 추진
-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시장소통, 민관협력 및 계층별·지역별 맞춤형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근로자·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 구직자·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

3) 복지시스템 고도화

-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민간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인프라 보강
- 고용·교육·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4) 지역균형 발전

- 지방 경쟁력 제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
 -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지원
 - 국가·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

4절 새정부 공약

-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에 따라 실질적인 수도 세종시가 완성될 예정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따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계획 조기 이행,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시장 임기 내 착공 등 광역 지하철망이 조기 착공될 예정
- 대전·세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종시 규제완화, 세계 지원으로 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중부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19번째, 300병상 규모의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대전-세종-오창 가속기벨트 초광역 경제축을 육성하는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트화(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예정
- 정부 공약에 따른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한 중앙방송국 및 메이저 통신사 세종시 유치 예정
- 기술창업혁신클러스터, R&D 혁신단지 및 실증테스베드 조성, 청년 기술 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기술창업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예정
- 교육기반 및 행정수도 위상제고를 위한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에 따라 계획된 6개 대학 적극 지원, 임기 내 캠퍼스 개원 예정

[표 2-1] 윤석열 정부공약으로 예상되는 세종의 변화

대통령 지역공약 (대통령직인수위 4.28)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5.10)	최민호 당선인 공약 주요 내용(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세종 제2 집무실,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수도 세종시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 서울-세종 직결 철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 (권역별 5개) -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지하철망 조기 착공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계획 조기 이행 -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시장 임기내 착공(도심지역 역센권 성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메가시티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시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국토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 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규제완화, 세제지원으로 특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대통령 지역공약 (대통령직인수위 4.28)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5.10)	최민호 당선인 공약 주요 내용(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센터 건립 - 중부권 의료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허브 -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디지털헬스 -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센터 설립 - 전세계적으로 19번째, 300병상 규모(국립) • 중입자·중이온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화 (과학비즈니스벨트) - '대전-세종-오창' 가속기 벨트 초광역 경제축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디지털미디어 센터 건립 - 뉴스 및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 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 생태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 중앙방송국 및 메이저 통신사 세종시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 SW·DATA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혁신 -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 기술창업혁신클러스터, R&D혁신단지 및 실증

대통령 지역공약 (대통령직인수위 4.28)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5.10)	최민호 당선인 공약 주요 내용(6.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테스베드 조성 - 청년 기술 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기술창업자유구역 지정
•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 원천혁신역량 확충 -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 혁신 기여도 제고 •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 지역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 지원	• 교육기반 및 행정수도 위상제고를 위한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 계획된 6개 대학 적극 지원, 임기 내 캠퍼스 개원

5절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전략과제

1. 자족경제도시

- 세종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자족경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등 8개의 전략과제 발표
- 스마트 국가산단,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의 경제 자유 구역과 ICT 기반 첨단산업을 통해 세종 경제자유구역 조성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세종 테크벨리 도시첨단산단, 일반산단,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 100개 벤처기업이 입주가능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 후, 4-2 생활권에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 세종스마트시티를 통해 디지털 트윈시티, 사이버보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드론 실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
-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27년)에 맞춰 언론 및 미디어 기업 입주 부지 마련, 공동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단지(DMC) 조성
- 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 복합쇼핑센터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컨벤션 중심의 도시 조성
- 교통신호체계 첨단화, 광역 급행버스(M-bus) 도입, 버스요금 무료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대중교통 혁신 도모
- 읍지역은 정주여건 확충, 조치원 복숭아 축제 확대,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면지역은 농민수당 지급, 과학 영농 구현, 세종형 미래 농촌 마을 조성, 동지역은 디지털 트윈시티 구현, 도심 1급수 하천 유지, 싱싱장터 확대 등을 통해 도농 상생 발전 도모

[표 2-2] 자족경제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시정4기 전략과제	주요 내용
세종 경제자유구역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경제 자유 구역 - 스마트 국가산단,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도시첨단산업 단지 • ICT 기반 첨단산업 - 도심드론택시(UAM),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신소재 산업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연서) • 세종 테크벨리 도시첨단산단(4-2생) • 일반산단 - 스마트그린(소정), 세종 벤처벨리(전동), 복합산단(전의) • 기회발전특구(사이버보안)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 (100개 벤처 기업) • 2단계: 청년창업빌리지 조성(4-2생)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 및 혁신생태계 조성 • 디지털 트윈시티, 사이버보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자율주행차, C-ITS), 드론 실증
디지털 미디어단지 (DMC)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27년)에 맞춰 도시계획 반영 및 단지 조성 - 언론 및 미디어 기업 입주 부지 마련 • 취재나 보도 편의를 위한 공용 사무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등 마련 - 공동프레스센터 건립
관광컨벤션 중심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 • 복합쇼핑센터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대중교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신호체계 첨단화 • 광역 급행버스(M-bus) 도입 • 버스요금 무료화 • KTX 세종역 신설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착공
도농 상생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지역: 정주 여건 확충, 조치원 복숭아 축제 확대,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 면지역: 농민수당 지급, 과학 영농 구현, 세종형 미래 농촌 마을 조성 • 동지역: 디지털 트윈시티 구현, 도심 1급수 하천 유지, 싱싱 장터 확대

2. 문화예술도시

-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문화관광 산업 육성 등 5가지 전략과제 발표
- 금강 수변을 관광문화 콘텐츠화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통한 중부권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 조성
- 문화관광 예산 임기내 연간 1,000억 달성, 세종 취타대, 세종 태권도 시범단 등 문화관광 기반 확대를 통한 문화관광 산업 육성
- 낙화축제, 세종 빛 축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거리 조성
- 어린이 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디자인박물관 등 전국 최다·최대의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을 통한 문화·전시 시설 확충
- 장육진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세종시립박물관, 세종문학관 건립을 통한 지역 특성을 모티브로 한 문화공간 조성

[표 2-3] 문화예술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시정4기 전략과제	주요 내용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 수변 관광 문화 콘텐츠화 • 중부권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
문화관광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예산 대폭 증액 - 임기내 연간 1,000억 달성 • 문화관광 기반 확대 - 세종 취타대, 세종 태권도 시범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낙화축제, 세종 빛 축제, 길거리공연(아트트럭) •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문화·전시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다·최대의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 어린이 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지역 특성을 모티브로 한 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육진생가 복원 및 기념관건립 • 세종시립박물관 • 세종문학관 건립

3. 의료복지도시

- ‘의료복지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추진,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3가지 전략과제 발표
-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가속기 산업 조성 기반 구축 및 중부권 의료 허브 도시로의 성장
- 어린이 전문 응급의료센터 설립, 응급의료센터 고도화 등 응급의료센터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돌봄 복지 시설 확충, 어르신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장애인 교통편의 및 구강진료센터 설치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표 2-4] 의료복지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시정4기 전략과제	주요 내용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 의료 허브 도시 성장 • 가속기 산업 조성 기반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연계 추진
응급의료센터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센터 고도화 • 어린이 전문 응급의료 센터 설립(세종 충남대병원)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22년 109개에서 '26년 167개로 확대 • 돌봄 복지 시설 확충 - '22년 20개소에서 '26년 27개로 확대 • 어르신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장애인 교통편의 및 구강진료센터 설치

4. 교육특구도시

- ‘교육특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가지 전략과제 발표
-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세종형 교육모델 개발 및 글로벌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국정과제에 맞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도시’ 조성

- 대학세종캠퍼스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극대화, 우수 대학 단독 캠퍼스 유치 추진

[표 2-5] 교육특구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시정4기 전략과제	주요 내용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 세종형 교육모델 개발 • 국제학교 유치 등 글로벌 교육 시스템 구축
대학세종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극대화 • 우수 대학 단독 캠퍼스 유치

5. 한글사랑도시

- ‘한글사랑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가지 전략과제 발표
- 한글사관학교, 한류문화체험단지, 외국인 문화교류센터,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구성된 한글 문화단지 조성 및 한글 특화거리 조성, 세종축제와 한글문화 연계를 통한 한글문화 수도 정체성 확립
- 세종시 진입부에 세종대왕의 4대 정신(창조, 개척, 애국, 애민)을 형상화한 4대 상징문 건립

[표 2-6] 한글사랑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시정4기 전략과제	주요 내용
한글문화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문화단지 조성 - 한글사관학교, 한류문화체험단지, 외국인 문화교류센터, 세종대왕 기념관 • 한글 특화거리 조성 • 세종축제를 한글문화와 연계
4대 상징문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 개척, 애국, 애민 세종대왕 정신 계승 • 한글문화 수도 세종시 정체성 확립

6절 시사점

□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 자족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관광컨벤션 중심 도시 조성, 대중교통 혁신, 도농 상생 발전 8개 전략과제 추진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디지털 미디어센터 건립 등은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기조와도 부합하며, 과학기술·R&D 혁신 및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향과도 연계가 가능
-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미디어센터 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 디지털 경제, 포용적 디지털 사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부문과도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
-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할 예정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종시에 적용할 필요성 높음

□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문화관광 산업 육성,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거리 조성, 문화·전시시설 확충, 지역특성을 모티브로 한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
-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연계하여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인프라 확충 및 연계, 관련 콘텐츠 발굴, 지역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기획과 투자가 요구됨
- 이러한 전략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안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과 연계되며 디지털 경제 전략과도 부합

□ **의료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 의료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 연계하여 추진하고,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새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

□ **교육특구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과 대학 세종캠퍼스 조성을 통해 세종형 교육 특구도시를 조성할 계획
-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부 공약 중에 하나로 자율적인 교육 기관 설립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학 세종캠퍼스의 경우 새정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 계획되어 있는 6개 대학이 조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적인 대학 유치 방안 마련 필요

□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 한글문화 수도 조성과 4대 상징문 건립을 통해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
- 한글문화단지 및 한극특화거리 조성, 한글문화와 연계한 세종축제 등을 통해 한글과 세종대왕을 세종시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
- 행정수도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글과 세종대왕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상징물로 확장할 필요성 제기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보완 필요

-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재검토 등에 대한 지역적 대응 필요
-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방안 검토 필요
-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해외사례 검토

- 1절 시드니
- 2절 오타와
- 3절 웰링턴
- 4절 캔버라
- 5절 쿠리치바
- 6절 워싱턴 D.C.
- 7절 싱가포르
- 8절 스위스
- 9절 시사점

3장 해외사례 검토

1절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1.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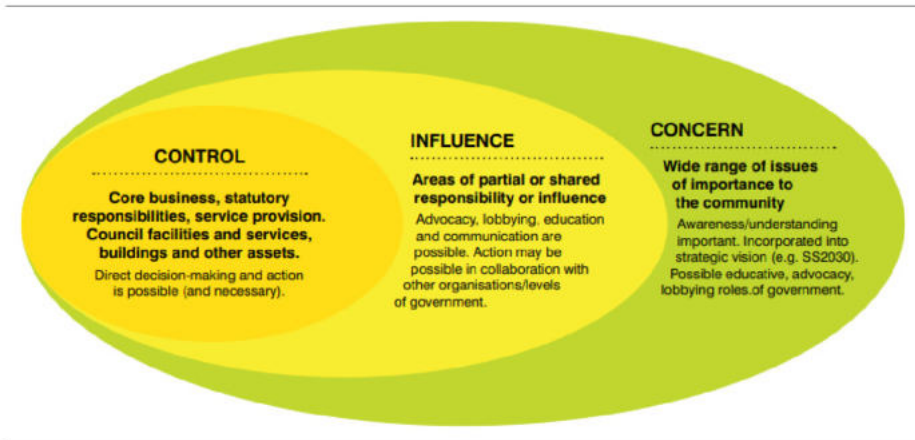
1) 개요 및 주요 전략

지속 가능한 시드니

- 2030년과 그 이후까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 환경, 사회, 문화, 경제와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통합 계획

경제 개발에서 시의 역할

- 시의회 단독으로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드니는 도시와 지역 사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범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아래 다이어그램 참조).



[그림 3-1] 시드니 경제 개발에서 시의 역할

출처 : City of Sydney(2013), The Sydne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 시드니 경제 개발 전략

- 경제를 강화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드니의 10개년 전략
- 메트로폴리탄 시드니 연결, 글로벌 연계, 글로벌 센터 빌리지 경제, 산업 클러스터 등
- 전략적 우선순위: (1) 시드니의 경쟁력 강화, (2) 생산성 및 역량 강화, (3) 기회 촉진: 강력한 지역 기반 구축

□ 시드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요소

- 교통: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전략 및 실행 계획
 - 비전: 강력하고 성장하는 경제,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 다양하고 연결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
 -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도시 공간과 공원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개발, 도시 거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버스 서비스 개선
 - 2030년까지 도심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은 80% 증가하고 도시 거주자의 출퇴근용 비개인 차량 사용은 80%로 증가할 것
 - 2030년까지 도시 여행의 최소 10%는 자전거로, 50%는 보행자 이동으로 이루어짐
- 녹색 인프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 2030년까지 2006년 수준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일 것임
 - 2030년까지 지역 전력 생산에 의한 전력 수요의 최대 100%, 지역 물 수집에 의한 물 공급의 30% 및 2030년까지 증가된 캐노피 덮개를 50%까지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임
 - 계획 및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LGA를 위한 3세대 마스터 플랜; 시드니 시의 주요 지역에서 구현, 재생 에너지 마스터 플랜, 물 재활용 마스터 플랜, 폐기물대체기술(AWT)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개발, 폐수 처리에 대한 종합계획 개발
- 사회 기반 시설: 저렴한 주거 공급 및 보육
 - 글로벌 도시의 효율적인 기능에 중요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렴한 주택이 필요

- 2030년까지 시 전체 주택의 7.5%는 사회 주택이 될 것이며 7.5%는 비영리 또는 기타 제공자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이 될 것임
- 2030년까지 모든 거주자는 신선한 식품, 보육, 의료서비스 및 레저, 사회, 학습 및 문화 기반 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 지역에 합리적인 도보 거리 내에 있을 것임
- 새로운 보육 센터 건설 및 기존 보육 센터 확장
- 개발 통제 계획(DCP) 시행: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개발 지역에 보육 시설을 제공하는 비율을 할당하는 시드니 보육 센터 개발 통제 계획 채택

2)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

산업 부문 실행계획

○ 금융 및 전문 서비스

- 시는 해당 부문이 의존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해당 부문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해야 할 역할이 있음
- 교통과 혼잡으로 인한 성장 장벽 제거
- 적절한 전략적 토지 사용 계획 정책 및 통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능력 검토

○ 크리에이티브 및 디지털 산업

- 다음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실행 계획을 제시
- 목표 및 목적 프로그램의 전달을 통한 창의적 기업의 역량 강화
- 물리적 및 디지털 연결, 고품질 공공 공간, 우수한 디자인, 저렴하고 다양한 숙박 시설, 주요 이벤트 및 축제, 고품질 공공 예술을 제공하는 창조적 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시 환경을 보장
- 보조금 및 후원 프로그램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원
-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강화
- 모범적인 제품과 서비스 시운행 및 기술창업 커뮤니티의 성공 사례 홍보

- 국제 교육: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 수입원
 - 주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시드니 2030 비전을 달성하는 프로젝트 제공
 - 시드니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비 학생들이 선택하는 목적지로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공
- 소매
 - 시드니 중심부를 주요 소매점으로 재포지셔닝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음
 - 2030년 목표인 48,000채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 모든 거주자가 주요 거리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드니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시드니는 소매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 장소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쇼핑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임
 - 소기업 운영자의 기술과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은 중소기업의 상업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임
 - 비즈니스 장벽을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 관광여행
 - 관광 산업이 다양화,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및 정부 파트너와 협력
 - 방문자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문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 및 기반 시설의 개발을 장려하는 데 중점
- 녹색 경제
 - 2030년까지 호주 전역에서 약 240,000~340,000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요 도시에 있음
 - 녹색 기반 시설에 대한 자체 투자나 기타 정책 개입을 통해 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거나 기존 산업에서 녹색 역량을 구축할 것

○ Open Sydney: 야간 시드니의 미래 방향

- 야간 경제: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됨. 식사, 음주, 대학 강의, 쇼핑, 등 사회적, 문화적, 지적 및 비즈니스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활동
- 야간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20년 동안 시드니의 야간 경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개방형 시드니 정책을 채택
- 해당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광범위한 연구 및 협의 프로그램을 착수함
- 해당 정책은 공공 안전과 경제 및 주거 성장의 균형을 이룰 것임

□ 장소 개발 실행 계획

○ Green Square: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 재생 프로젝트

- 도심 남쪽의 여러 278헥타르 지역을 주택, 열린 공간, 사무실, 상점 및 시설이 다양하게 혼합된 매력적이고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도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Alexandria, Beaconsfield, Rosebery 및 Zetland 교외 지역의 재개발로 22,000개의 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20,000채의 신규 주택과 40,000채의 기존 주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까지 Green Square는 약 40,000명의 주민을 수용하고 약 22,000명의 근로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 프로젝트의 핵심은 Green Square Station 주변 지역의 새로운 소매, 상업 및 문화 허브인 Green Square Town Centre의 개발
- 해당 Centre는 약 6,800명의 주민과 8,600명의 근로자의 집이 될 것임

○ Barangaroo

- NSW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변모할 예정

- 이 지역에서 매일 23,000명이 거주하고 일하며 33,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Infrastructure NSW

- NSW정부를 대신하여 Darling Harbour의 20헥타르 규모의 컨벤션,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구역의 재개발을 주도

○ 지역 마을 경제: 10개의 마을 그룹

- 각 그룹은 주요 커뮤니티 주요 거리와 경제 활동 중심지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소
- 시드니는 현재 해당 빌리지 지역의 지역 상공회의소 및 기업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및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
- 구역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이벤트, 마케팅 자료, 관광 및 소매 마케팅 캠페인 지원
- 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비즈니스 부문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향후 고려 사항

- 건강 서비스 부문,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소매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 공통 테마

○ 원주민 고용 및 기업

- Eora Journey를 10가지 프로젝트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정
- 공공 영역에서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문화의 표현, 주요 행사 지원, 문화센터의 개발, 경제 개발 계획의 개발
- Eora Journey 프로젝트의 경제 개발 구성요소는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커뮤니티의 접근은 물론 비즈니스 투자, 기업 개발 및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임

○ 기업인 및 중소기업

- 역량 강화 계획을 통해 기업가와 중소기업 운영자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 이를 통해 시드니는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고 대응할 것
- 협력적 소비 모델: 금융, 소매, 농업, 기술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재창조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대응

○ 환경 지속가능성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년 수준에 비해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드니는 기업이 시의 지속 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생태 발자국을 억제하고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
- 시는 각 산업 및 경제 부문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할 것

○ 지식과 혁신

- 교육, 연구 및 개발 부문과 협력할 것
- 지식 교환, 혁신 및 생산성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시드니 2030의 열망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 대학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계속 육성할 것
- 시는 암묵적 및 명시적 지식 흐름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내 산업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할 것
- 시는 도시의 효과적인 계획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 클러스터가 서로 밀접하게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문 및 산업 클러스터 간의 상호 작용 및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

○ 아시아와의 유대 강화

- 시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강력한 문화적 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임

-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교류의 최전선에 서도록 주요 파트너와 협력할 것임
- 호주 및 NSW 정부, 민간 부문, 특히 금융 및 비즈니스 부문, 교육 부문, 관광 및 소매 부문과 협력할 것임

2. City of Sydney Economic Future

1) 21세기의 대도시 센터

- 관광, 비즈니스 방문객, 세계 일류 대학의 선도적인 학생 및 교수진을 위한 성숙된 중심지
 - 프리미엄 오피스 클러스터로써 세계를 향한 쇼핑 및 투자자의 관문으로 주요 역할을 함

2) 경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주기' 원칙

경쟁력 개념의 새로운 방식

- 하나 이상의 경제 성장주기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다양화, 포괄성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회복력이 중요
 - 경쟁력 및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문화의 가치 인식 필요
 - 문화 생태계 지원, 창의성 가치사슬의 생산 종료 강화, 창의적 인재를 위한 저렴한 접근을 보장 및 많은 주요 경제 구역 내 및 사이에 있는 지속적인 문화적 '경관' 구축

새로운 전달 방식

- 전체 도시에 대한 토론, 데이터, 자산 감사 및 비교 평가 없이 하나 이상의 지방에 대한 경제적 전략은 제한적
- 일회성 결정과 투자보다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필요
 - 더 많은 참여자(정부, 시민, 기업, 토지 소유자)를 함께 소집하고 시민과 커뮤니티를 참여시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식별, 홍보 및 참여

-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희석하는 대신 우선순위 지정 및 규모 달성을 선택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도시들은 또한 단순히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건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더 잘 인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체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전략 시작
 -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혼잡, 주택과 생활비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 사회적 배제의 사회적 및 공간적 영향, 소득에 의한 이동과 분리의 문제점
 - 해당 문제점에 형평성,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의 우선순위를 경제 전략에 통합하기 시작

3) 시드니의 경제 전략 주요 우선순위

성장, 생산성 및 혁신을 위한 생태계의 성숙

- 네트워크 작업 및 효율성 대도시 경제
 - 계획(협업 영역 포함), 광역 시드니 위원회에 역량을 추가하고 새로운 NSW 기획, 산업 및 환경부의 통합 의제를 지원
 - 지속적인 투자 대도시 기반 시설, 노동 시장 및 주택 시장 조력자 및 상호의존성, 개혁된 토지 사용이 필요
- 도시 내 특화 장소 홍보 및 도시 내부 집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생태계 활동이 집중되도록 장려
 - 주변 지역과 다른 도시들과의 경제 관계 및 특정 영역에 대한 공유경제 비전 개발
 - 지역, 공공-민간 및 산업 간 협업에 대한 특정 장벽
 - 시드니와 다른 지역간의 보완성
 - 더 높은 기업가 정신과 적절한 수준의 기업 위험 감수를 장려하는 규제 환경
 - 신흥 '혁신 경제'가 기존 '기업 경제'에 환경과 장소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요구하는 방식

- 미래 인구 증가, 주택, 상업 공간 및 노동 이동성
- 지식 및 기술 집약적인 기관이 지역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 적자에서 지역적 우위로: 전문 구역, 복도 및 교차로의 관리

○ 시드니의 성공적인 경제 전략

- 대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복잡한 구역 전달모델에서 시가 경제적 의사결정 영향력을 높일 계획
- 특정 산업에서 고학력 인력의 유치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요 장소의 품질, 편의성 및 특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 주·야간 유연한 사용 기회
- 현재 공항과 대도시 경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산업 및 기타 최적화되지 않은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방법
- 새로운 경제 허브는 실제로 경제 전략과 장소 관점에서 최적화됨

다양한 24시간 경제

○ 성공적인 경제 전략

- 향후 작업 관행이 고용 밀도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
- 새로운 야간 경제 증거 기반(2011년 비용 편익 분석 포함),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창의성이 창조되고 생산될 수 있는 공간(물리적, 가상적)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창의적 부문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설명

커뮤니티 강화

○ 미래 성장에 따른 더 많은 주택 다양성 제공

- 시드니는 CBD 제안을 보존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경제 영역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 정부와 더 협력하는 리더십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창작 및 생산을 위한 상업 공간의 경제성을 제공하는 모델 개발
- 글로벌 성장 기회와 전면적인 참여
- '녹색경제활동'과 '순환경제활동'은 지역 및 지역 역량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산업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해야 함

문화의 역할 확대와 창의성

- 시드니만의 특색을 충분히 살린 핵심 구역의 상징적인 시설과 성공적인 문화 개발의 조합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 광범위한 정책과 함께 시드니 내에서 예술적, 문화적 인재를 보유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 인력 및 도구에 대한 투자 실험의 필요성이 있음
 - 예술과 문화의 기여를 최적화하기 위한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육성

시드니의 핵심 가치와 DNA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정체성

- '시드니를 실제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적인 노력을 지지
 - 사회 문화적 리더십을 활용하여 경제, 무역, 관광 및 예술과 결합된 이야기의 개발을 지원
 - 노출, 이벤트, 스토리, 소셜 미디어 및 시장 포지셔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장려

3. Building a strong green and circular economy for Sydney

시드니의 세 가지 광범위한 정책방향

- 녹색 경제, 기업과 소비자를 교육하고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할 기회를 식별
- 시장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
- 녹색 교통 및 녹색 기술 개발 분야에서 녹색 경제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수준의 정부와 협력

시드니 녹색 경제에서 시의 역할

-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 및 협력을 구축하고, 역량을 구축하며 지원 및 장벽 제거
- 시드니의 녹색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녹색 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 우선순위 부문을 식별하고 순환 혁신을 촉진하여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자원에 대한 접근, 자금 조달, 촉진 및 시장 조성을 통해 시드니는 시드니를 순환 경제 혁신의 허브로 만들 수 있음

Supporting green or circular principles in businesses	
Grants, subsidies, & invest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lo's Climate and Energy Fund: the City introduced several subsidy schemes to support businesses innovate and invest in the production of green goods and services Amsterdam Sustainability and Climate & Energy Funds: the City invests in sustainability and energy related projects, such as biofuel generation, solar roofs and electric vehicles
Incentivising behavioural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ncouver's Green Demolition Bylaw: the City has generated circular economy opportunities by requiring materials from old homes to be either recycled or deconstructed New York City Building Energy Performance Mandates: the City increased demand for greener buildings by requiring all buildings to decrease fossil fuel use by 80% by 2050
Working with residents, workers and visitors	
Educate, train and in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UK Green Skills Partnership: UK local councils have partnered with unions, industries, workers and other group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labour force with green skills Vancouver Zero Waste Conference: the City holds an annual conference to educate the public and businesses about the circular economy opportunities available in different sectors
Government's own operations and procurement	
Government's own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lo Procurement Strategy: the City requires that all construction vehicles and machinery used for public procurement purposes produce zero emissions Greater London Authority Environment Strategy: investing in green infrastructure such as installing green roofs across their own buildings to support demand in the green economy
Government procu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penhagen Partnership for Green Public Procurement: the City has implemented sustainability requirements for businesses tendering for government contracts New York City Environmentally Preferable Purchasing Standards: the City has developed and follows a set of minimum standards for purchasing goods and construction materials

[그림 3-2] 녹색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타 국가 조치

자료 : TOBY BRENNAM(2019), Building a strong green and circular economy for Sydney-Final Report

Supporting green or circular principles in businesses	
Grants, subsidies, & invest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vironmental performance grants: encourag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from businesses to produce green goods and services, and develop greener production processes Building tune-up program: supporting building owners to implement cost-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ir building
Incentivising behavioural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tter Buildings Partnership: working with commercial property owners to reduce their environmental footprint,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greener buildings Sustainable Destination Partnerships: working with the accommodation and entertainment sectors to implement standards to improve energy, waste and water efficiency
Working with residents, workers and visitors	
Educate, train and in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ste & recycling information: Informing local residents of the correct disposal method for products and also encouraging the purchase of products made from recycled materials Smart Green Apartments Program: working with local residents to implement water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demand for green goods and services
City of Sydney's own operations and procurement	
City of Sydney's own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installing solar power across its own buildings and assets, as well as negotiating new supply contracts, to achieve 100%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by 2021 Sustainable Design Technical Guidelines: incorporating sustainability requirements for each of the City of Sydney's major asset types, such as community buildings and aquatic centres
City of Sydney's procu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requiring tendering companies to meet certain environmental standards to be eligible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s

[그림 3-3] 녹색 경제를 지원하는 시드니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

자료 : TOBY BRENNAM(2019), Building a strong green and circular economy for Sydney-Final Report

Policy direction	Strategy
<p>1  Demonstrating commitment and leadership in the green economy</p>	<p>Commit to growing and developing Sydney's green economy as a source of economic opportunity and environmental benefit</p> <p>Improve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green and circular economy by both businesses and consumers/residents</p> <p>Strengthen existing policies and programs which have already generated positive results in supporting the green economy</p> <p>Leverage procurement policies to generate demand in the green and circular economy</p>
<p>2  Identifying and fostering new economic opportunities</p>	<p>Identifying and supporting priority sectors in Sydney's green economy that could support Sydney's role as a leader and enabler in the green economy</p> <p>Establish Sydney as a hub for innovation in the circular economy</p>
<p>3  Advocating and partnering with other levels of government</p>	<p>Encourag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economy, e.g., through investment in green skills development, green public transport</p>

[그림 3-4] 시드니의 녹색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자료 : TOBY BRENNAM(2019), Building a strong green and circular economy for Sydney-Final Report

2절 캐나다-오타와

1. City of Ottawa – New Official Plan Preliminary Policy Directions

■ 새로운 공식 계획의 목표: 오타와를 북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중형 도시로 만드는 것

□ 정책 방향: 성장, 이동성, 도시 디자인, 복원력, 경제

□ 성장 관리 프레임 워크 세부 내용

- 증가된 강화 목표는 단기적으로 점진적이어야 하며, 계획의 장기적인 지평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함
- 특정 유형의 개발을 위해 침실이 3개 이상인 주거 단위의 최소 비율을 요구
- 모든 도시지역 확장은 기후 변화, 성장 관리, 교통 및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시의 정책 방향을 지원
- 도시 기반 시설이 강화 전략의 일부로 고려되도록 함
- 주택 및 교통수단의 경제성을 고려한 강화 전략을 확인
-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

□ 경제발전과 고용지역 세부 내용

- 인접 지역과의 통합 수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 기반한 고용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토지 사용 상황이 적합한 경우 일반적으로 더 관대하도록 구획 규칙을 단순화
- 향후 28년 동안 Kanata North를 주요 경제 발전기로 유지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맥도날드-까르띠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의 경계 설정
- 정책을 도입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 농촌 경제 발전을 지원

□ 공중 보건 부문 세부 내용

- 공식 계획 정책은 건설된 환경을 통해 인간의 건강을 증진해야 함
-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를 위한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구축 및 디자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
- 건설 환경을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지원
- 지속 가능한 녹색 커뮤니티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요구
- 이웃 상황에 기반한 정책 구현

□ 주택 부문 세부 내용

- 시가 더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도구와 이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식 계획에 '이웃'이라는 개념 도입
- 주거 유형(건물의 단위 수)에 중점을 두지 않고 건물 형태(건물의 크기 및 모양)를 강조
-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거나 없애고 사회적, 신체적 건강과 지속 가능한 이웃을 증진하기 위해 더 밀집되고 걷기 좋은 15분 거리를 권장
- 가족 중심 주택과 1인 가구에 적합한 형태를 포함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혁신적이고 저렴하며 상황에 맞는 주택 형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공
 -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충하기 위한 공유 토지 사용 촉진
 - 주택이 새로운 시 시설에 통합되고 주택이 기존 고용 '비즈니스 파크'에 통합되도록 강력한 정책 방향과 함께 분리된 토지 사용의 공동 배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공
 - 저층 및/또는 지상 지향 주거 건설에 대한 부담이 적은 부지 계획 제어 프로세스 채택
 - 모든 소득 집단에 대한 주택 유형 및 주택 가용성의 범위와 혼합을 보장하기 위해 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

□ **교통/모빌리티 부문 세부 내용**

- 2046년까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대부분의 여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안된 신규 또는 상당히 업데이트된 OP 정책 시행
- 이동성, 거주성, 형평성, 건강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유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OP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TMP 및 관련 계획 업데이트의 일부로 여러 전략도 추진될 것

□ **인프라 부문 세부 내용**

- 중점화 분야 기반 시설 적정 용량 확보 및 보급을 통한 강화 지원
- 기성 성장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요건 및 확장지역 요구 사항 명확화
- 인프라의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 및 재정적 책임 및 도구 명확화
- 토지와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
- 위험 한계 설정에 대한 책임과 기준 명확화 및 위험에 대한 보호 제공
- 혁신적인 우수 관리 솔루션의 사용 최적화

□ **자연유산 부문 세부 내용**

- 도시 나무 Canopy 유지 및 성장
- 도시공원, 녹지 및 자연 지역의 접근성 확대
- 농촌 자연 특징 지역 지정 폐기(현재 자연유산 시스템 오버레이와 중복으로 간주됨)
- 오타와의 자연유산과 수계를 장기적으로 보호, 보존 및 복원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자연 회복력 유지 및 증가
- 민간 소유의 자연적 특징과 자연적 토지의 자발적인 관리 및 복원에 대한 토지 소유자 지원
- 환경 연구 요구 사항을 줄이고 핵심 자연 지역 및 연결 외부의 간단한 개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더 큰 유연성 지원
- 재생 에너지 시설이 허용 가능한 토지 사용 지정을 식별

□ 수자원 부문 세부 내용

- 환경 영향 보고서에 대한 요구 사항 확장 등을 통해 지표수 자원 보호, 개선 및 복원
- 의회에서 승인한 수문 지질학 및 지형 분석 지침의 사용 요구 등을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호, 개선 및 복원
- 중대한 위협 정책을 준수하도록 공식 계획 수정, 최근에 승인된 SPP를 준수하는지 확인 등을 통해 도시 및 공동의 식수원에 대한 보호 강화
- 민감한 해양 점토 토양이 있는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고유의 문제를 강조하고 향후 발표될 지침에 대한 정책 지원 제공

□ 에너지 및 기후 완화 부문 세부 내용

-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 고려 사항 포함
- 건물에 대한 새로운 고성능 개발 표준(HPDS) 개발
- 교통 및 기반 시설을 통한 배출량 감소
- 지역 에너지 생성, 저장 및 효율성 촉진

□ 기후 복원력 세부 내용

- 열 지도 사용 및 취약 계층 매핑 지시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대형 캘리포스 그늘나무 유지 및 심기 등을 통해 극심한 더위의 영향을 줄이고 도시 열섬 효과를 줄임
- 토지 사용 계획 승인 전 규제 범람원 식별, 홍수 방지 요구 사항 강화 등을 통해 홍수 위험과 그 영향 감소시킬 것
- 기후 복원성 설계에 대한 평가 요구
- 오타와 전역에서 식품을 쉽게 생산, 가공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식품 안보 강화 및 식품 가용성 또는 가격 변동의 영향 감소
- 지역 에너지 활성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글로벌 영향에 대한 지역 회복력 향상

□ 공원 및 여가 부문 세부 내용

- 모든 거주자를 위한 여가 경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
- 도심 및 외곽 지역에 휴양을 위한 공원 및 공간 제공
 - 가장 광범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더 큰 공원 부지에 우선순위를 부여
 - 빗물 시설, 학교 및 공원의 조합을 포함하여 '더 좋고 스마트한 교외 건설'의 원칙을 통합

□ 문화 부문 세부 내용

- 계획 전반에 걸쳐 공공 예술과 문화적 표현, 정체성 및 사회적 연결의 고려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포함
 - 새로운 문화적 개입을 위해 제공될 지침의 일부로 이웃 또는 장소의 역사와 정체성을 인식
- 고층 건물과 공공 및 반공공 공간을 가진 개발에서 중요한 민간 개발이 공공 예술 및 문화 공간에 대한 계획 또는 기여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요구 사항 제시
- 공공 예술·문화 공간·유실 유산 기념이 새로운 자본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 계획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
- 문화 자산을 문서화하고 다루기 위한 계획 정당화 및 환경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 제시
 -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검토, 업데이트 및 개발
- 통합 정책 및 설계 방향을 알리기 위해 공간적 규모(현장, 이웃, 도시 전체)에 걸친 문화적 토지 이용 패턴을 분석 및 평가
- 기존 개발에서 문화산업과 생태계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 제공
 - 스포츠와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장소, 스포츠와 문화적 토지 이용 간의 연결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항 포함
 - 문화 시설 개발, 문화적 다양성 지원, 예술, 유산 및 문화 적극적 홍보를 통해 모든 주민을 위한 문화 경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

- 메이저리그 및 마이너리그 스포츠 팀을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고, 해당 시설 및 해당 시설 주변 구역의 계획과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
- 특별지구 지정을 통한 공식계획과 주요 도시 문화지역 연계 강화

□ 도시 디자인, 문화유산 세부 내용

- 오타와의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 보호 및 보존 강화
- 도시 전체에 걸쳐 영향력이 큰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인식, 장려 및 촉진하기 위해 공식 계획에 활성화 정책 및 전략적 방향을 제공
- 새로운 계획 프레임 워크: Transect
 - Transect 모델은 농촌 지역을 계속 인식하지만 도시지역을 오래된 밀집된 중앙 지역과 덜 밀집된 새로운 교외 지역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미세한 단계로 나누고 Greenbelt를 고유한 별개의 지역으로 식별
 - 5개의 동심원 고리가 단계화되어 있으며, 각각은 해당 계획 기간 동안 이미 존재하거나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 환경의 유형을 설명

2. BUILDING THE SMART CITY OTTAWA, ONTARIO

□ 디지털 통합/디지털 리터러시

- 디지털 기술과 가상 자산을 활용하여 오타와에 있는 공공 도서관의 개념 재정의 및 재활성화
 - 평균 미만의 도서관 가용성 또는 사용 영역 식별
 - 해당 지역에 하나 이상의 비전통적인 도서관 시설 설립
 - 서비스를 오픈 액세스 및 디지털로 지향, 통신/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후원/파트너십 모색
- 앵커 기관 실행 계획
 - 오타와 지역의 특정 지리적 지역 내의 CAI 목록 작성

-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디지털 CAI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평가
- 다양한 CAI 간의 공유, 집계 및 협업을 위한 전략 및 전술 개발
- 위치와 의지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충분한 재정 자원이 부족한 앵커를 위해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 경로 제작

○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참여

- 공공 공간에서의 디지털 참여 측면에서 시와 주민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사례 깊은 분석을 수행하고, 원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옵션을 평가

□ 교육

○ K-12 학교에 디지털 기술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 교과 과정 및 과외 옵션을 모두 포함하여 K-12의 기술 교육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평가
- 지역 하이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적절한 수업과 연구 분야를 결정하고 교육 및 실험실 리소스로 사용
- 사회경제적 집단이 혼합된 학교에서 다양한 학년 수준에서 시범 프로그램 시작
- 교육의 다른 요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결과를 추적하고 공표

□ 에너지, 물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및 물 관리를 위한 간단한 프레임 워크 시연

- 건물 소유주와 참여 시 부서 간에 벤치마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개발

○ 센서 연결 쓰레기통

- 공급업체 정보, 인근 도시에 대한 설문 조사 및 Smart City 리소스 네트워크를 통해 옵션을 조사하고 평가
- 공급업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확인
- 오타와에 연결된 쓰레기 솔루션에 대한 모델 비용 및 잠재적 절감

- 거주자 및 기업가와 협력하여 쓰레기 수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범 지역 파악

□ 보건 의료

○ 커넥티드 헬스 리빙 랩

- 필요성, 주요 파트너의 서비스 영역, 사용 가능한 리소스 및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잠재적 위치 식별
- 지역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무선 Wi-fi 연결, 건강 정보를 위한 캠퍼스 내 물리적 접점 및 서비스, 인구 건강을 보기 위한 개인 장치 및 공공 센서의 데이터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적 모델 제작

○ 원격 건강 파일럿

- 원격 의료 분야의 기존 자산 및 실무자를 식별하고 오타와에서 원격 의료의 사용 및 수용 목록을 작성
- 초점이 필요한 임상 영역을 결정
- 잠재적인 파일럿 프로젝트 및 도전을 식별하고 작업 계획을 만들고 예산 책정 및 자원 모집

□ 교통 및 스마트 이동성

○ 커넥티드 라이트 레일

- 모든 역과 개별 경전철 차량 내에 고속 무선 액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오타와의 O-Train 경전철 연장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재활성화 할 기회를 갖게 됨

□ 공공 안전

○ 공공 안전 시범

- 법 집행 기관이 여러 소스의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으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향후 리소스를 배치해야 할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음

○ 커넥티드 LED 조명

- 기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50% 줄이고 유지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부동산 개발

○ 스마트 기가비트 시범

- 관리가 더 용이하고, 초고속 또는 기가비트 연결을 제공하는 비용이 더 낮으며 메트릭이 단순화됨
- 주거, 비즈니스 및 기업가 수준에서 스마트 시티 애플리케이션의 시연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커뮤니티가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사회 경제적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업가 정신

○ 스마트시티 기업가 육성

-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업가의 수와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이벤트 및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업 생태계 측정 시스템

- 스마트시티 생태계 진행 상황 및 경제적 결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망을 제작

○ 스마트시티 Proof-of-Concept 연구실

- Proof-of-Concept 연구실은 거주자, 기업, 조직 및 공급업체가 단일 위치에서 다양한 참가자가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제품 개념을 신속하게 개발, 테스트 및 시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커뮤니티 인프라

○ 특정 지역 또는 커뮤니티 위치의 공용 Wi-fi 핫스팟

- 공공 와이파이기는 공공 안전 및 지역사회 통신을 위한 보조 액세스 방법을 제공

○ 초고속 광섬유 구축

- 기존 자산을 추적하고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광섬유 발자국을 꾸준히 증가시켜 스마트시티 오타와 전역에서 광섬유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하이테크 비즈니스 개발

○ 기술 회사와 협력하여 오타와의 기업가 커뮤니티를 위한 고급 센서 기술 배포

- 도시계획 및 공개 데이터에 대한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는 최신 센서 기술을 활용,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해 도시에 더 많은 기회와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창출

○ 스마트시티 소셜임팩트 해커톤

- 스마트시티 해커톤은 기존 커뮤니티 또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참여 도구가 될 수 있음

○ 스마트시티를 위한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이름 사용: 오타와 파일럿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오타와가 발전함에 따라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하여 Play 또는 Quick Start를 지정할 수 있음

○ 인터넷 거래소 IX

- 인터넷 교환 지점(IX)을 사용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하나 이상의 타사 네트워크가 아닌 교환을 통해 직접 상호 연결할 수 있음

3. Climate Change Master Plan

■ 지침 원칙,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2020-2025)

□ 오타와의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 재생 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프레임워크
 - 화석연료 의존에서 지속적으로 전환
 - 절약 및 효율성을 통한 에너지 사용 감소
 - 지역 및 지역 생산을 통한 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 비화석 연료 공급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 탄소 포집 저장 및 격리 개선
-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 감소 및 공공 안전 보장
 - 인프라 복원력 향상
 - 건물의 복원력 증가
 - 자연환경 보호 및 강화
 - 비상 관리에 사고 관리 시스템(IMS) 원칙 통합
 - 대국민 대비 촉진



[그림 3-5] 오타와의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자료 : City of Ottawa(2020), Climate Change Master Plan, 2020

□ **향후 5년(2020-2025)간의 우선순위 세부 사항**

- 에너지 발전 구현: 오타와 지역 에너지 전환 전략
- 기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후 복원 전략을 개발
- 조직의 일부 내에서 시범 운영을 포함하여 기업 탄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 탄소 격리 방법에 대한 옵션 및 녹색 인프라의 역할 탐색
- 교육, 직간접적 인센티브, 지자체 지원, 정부 고위층의 개인 및 민간 단체 지원 옹호를 통한 민간행동 장려
- 기업 및 커뮤니티 역량을 구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

3절 뉴질랜드-웰링턴

1. 2021-2022 Strategic Plan

■ 웰링턴의 전략 계획(2021-2022)

 TOWN OF WELLINGTON 2021 STRATEGIC 2022 PLAN	
<p>MISSION STATEMENT</p> <p>We provide outstanding municipal servic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our community of today and tomorrow.</p>	<p>VISION STATEMENT</p> <p>Wellington strives to be one of the best small towns in America, recognized as a great place to raise a family, own a unique business, and create memorable experiences through community activities.</p>
<p>GROWTH AND DEVELOPMENT</p> <p></p> <p>Goal 1: Balanced and resilient revenues</p> <p>Goal 2: Identify, attract and retain commercial development and businesses</p> <p>Goal 3: Comprehensive Plan - alignment and execution</p> <p>Goal 4: Develop partnerships for long term funding strategies</p>	<p>INFRASTRUCTURE</p> <p></p> <p>Goal 1: Ensure adequate current and future water resources, treatment and delivery</p> <p>Goal 2: Plan and develop purposeful community and Town facilities.</p> <p>Goal 3: Create opportunities for transportation and storm water management improvements</p>
<p>COMMUNITY ENGAGEMENT</p> <p></p> <p>Goal 1: Build awareness about the Town of Wellington services and programs</p> <p>Goal 2: Improve access and transparency to local government</p> <p>Goal 3: Develop communications strategy for Town's Water Conservation Plan</p>	<p>ORGANIZATIONAL STRENGTH</p> <p></p> <p>Goal 1: Provide regular training programs for all employees and develop cross-training plans</p> <p>Goal 2: Update Personnel Policy</p> <p>Goal 3: Review employee compensation and benefits</p> <p>Goal 4: Create smooth, efficient employee on/off-boarding processes</p>

[그림 3-6] 웰링턴의 Strategic Plan(2021-2022)

자료 : <https://www.townofwellington.com/480/Strategic-Plan>

2. A VISION FOR WELLINGTON – The Vision & Plan for the future that WE want

■ 부문별 목표 및 전략

□ 환경 및 주택

- Taunton Deane 자치구 의회 계획자들과 협력하여 높은 수준의 개발 통제 및 보전 지역 관리를 보장
- 쓰레기, 낙서 및 오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유지
 - 폐기물 감소, 재활용, 에너지 및 자원 소비 감소 관련 가구주와 기업에 조언, 지원 및 표지판 제공
- 웰링턴의 거주자, 기업체 및 조직이 기후변화에 강하고 지역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를 더 많이 심도록 촉진
-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공의 열린 공간이 보호되고 다양한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한 사용 촉진
- 웰링턴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주택 구성이 모든 마을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
 - 신규 주택 개발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 계획자·개발자 간의 신규 주택 수요에 관한 대화 촉진 및 신규 주택이 높은 수준의 설계 및 환경 성능에 맞게 건설되도록 함

□ 경제 및 고용

- 새로운 소매 개발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소매점의 다양성에 추가
 - 쇼핑객이 웰링턴을 넘어 여행할 필요성을 줄이고 기존 소매 기회를 보완
- M5의 Junction 26에 인접한 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할 기업이 점유할 새로운 사업 단위 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
- 지역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립 및 촉진하고 주민 및 기타 지역 기업을 위한 최상의 수익을 보장할 조직을 식별 및 지원

- 방문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웰링턴의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프로젝트와 사업을 지원
- 웰링턴의 창조 산업의 성장을 지원
- 방문자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환경 자산뿐만 아니라 음식, 유산 및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Wellington을 브랜드화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

□ **운송**

- 교통량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옵션과 타운 센터 거래 및 쇼핑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 보행자 전용 옵션을 완전히 탐색하도록 권장하고 협력
- 중화물차(HGV)의 도심 이용을 줄이기 위한 북부구호도로 개발
- 웰링턴 내에서 직원과 쇼핑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운영자와 협력
- 기존 경로 간의 누락된 연결을 채우고 이웃 간에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보행 경로 및 자전거 경로 제공을 개선
- 배달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 및 소매업체와 협력
- 석유 기반 제품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촉진

□ **청년과 교육**

- 웰링턴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검토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있는 개인을 훈련
 -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웰링턴에 있는 청년들의 견해를 지역 당국과 기관에 대표
-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및 새로운 놀이 시설이 도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 다른 세대를 하나로 모으고 그들 사이에 이해와 존중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 공식 및 비공식 평생 학습 서비스를 웰링턴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개발되도록 함
- 청소년 센터에 투자하여 개선하고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장
- 공식적인 청소년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사교 장소를 조사, 지원 및 개발
- 청소년들이 창의적 재능을 탐색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 지역 학교 및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웰링턴의 교육적 필요와 열망이 충족되도록 함

3. Wellington Statement of intent 2021-2024

■ 주요 업무 프로그램

□ 미래를 위한 작업

- 웰링턴 스크린 활동
 - 웰링턴 지역 영화 사무소를 운영하는 역할에서 안전한 영화 명소로서의 뉴질랜드의 위상을 활용하여 이 지역의 스크린 활동을 유치하고 지원
- 지역사업 협력관계 프로그램
 - RBP 및 비즈니스 성장 팀은 코로나에 대한 초기 대응 단계를 통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그들의 가치를 입증
- 인턴 프로그램 및 취업
 - 지역기술 리더십 그룹에 대한 참여와 함께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완전 고용 경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
- CreativeHQ-인큐베이션 서비스 및 혁신 생태계 지원
 - 비즈니스 인큐베이션과 기업 및 정부 혁신 모두에서 활동을 확대할 것

○ 웰링턴 지역 성장 프레임워크

-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및 iwi 공동 프로젝트는 성장 문제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향후 30년 동안 지역 전체에 걸친 공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 웰링턴 컨벤션 사무국

- 비즈니스 이벤트는 웰링턴 경제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회의와 비즈니스 이벤트를 지역, 전국 및 트랜스 태즈먼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제 여행이 다시 시작될 때를 위한 강력한 국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

○ 웰링턴 기업의 재활성화 지원

- 초기 코로나 대응 단계에서 개발한 러브 로컬 캠페인을 활용하여 기업이 환영하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웰링턴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고 소비자 신뢰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도할 것

□ 장소 만들기

○ 주요 행사

- 'Wellington NZ'는 웰링턴 시를 위한 주요 이벤트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투자하여 주민과 기업에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을 취할 것

○ 마케팅 목적지

- 지역의 스토리텔링 엔진으로서 이 공간에서 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며,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요 청중에게 조정되고 강력하며 미래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전달하여 그들이 기회, 혜택 및 미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 유도

- 지역 전반에 걸쳐 일자리 기회와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유치, 유지 및 성장을 지원할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

- 웰링턴 도시 I-site
 - Wellington City i-Site(방문객 정보 센터) 및 관련 Wellington City Ambassador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 웰링턴 경기장
 - 판매, 시설 관리, 이벤트 운영 및 고객 경험을 포함하여 Venues Wellington 브랜드로 웰링턴 시내 행사장 운영을 관리
- 유네스코 영화의 도시
 - 2019년 웰링턴은 유네스코 영화의 도시로 선정
- 웰링턴 지역 트레일 프레임워크
 - 지역 트레일 프레임워크 실행과 Find Your Wild 브랜드로 해당 지역의 트레일 홍보에 대한 촉진 및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협업 및 참여

- 웰링턴 지역 경제 계획
 - GWRC, 지역 당국, Mana Whenua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행동 중심 계획을 제공
- 지역 하부 구조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
 - 작업 프로그램에 TA의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을 반영 및 지역 전반에 걸친 지원을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 조달 모델을 모색
- 지역 인력 및 기술 개발
 - 지역 기술 리더십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특정 제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
- 크리에이티브 부문
 - WCC와 함께 도시의 예술, 경제 및 청년들의 전략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

□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경제 지원**

- 웰링턴이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 'Te Atakura-First to Zero'를 채택하고 첫 10년 동안 감축을 약속하는 계획

4절 호주-캔버라

1. ACT PLANNING STRATEGY 2018

1) 비전

- 미래에 대응하고 변화에 탄력적이면서 경관과 수도로서의 캔버라의 독특한 유산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적이며 평등한 도시

2) 주제별 세부 전략

작고 효율적인 도시

- 신규 주택의 최대 70%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도심, 타운 및 그룹 센터에 가깝고 주요 교통 회랑을 따라 위치한 지역에 개발을 집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지원
- 미래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서쪽의 새로운 주거 지역에 대한 가능성 조사
-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지원
- 캔버라 지역의 성장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NSW 정부 및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다양한 캔버라

-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캔버라 커뮤니티를 존중하여 커뮤니티에 포용과 참여를 촉진
- 우리 센터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경제적 생존 가능성 및 개선된 거주 가능성을 지원
- 거주성과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의 특성을 개선
- 기존 산업 지역과 서비스 무역 지역을 다양한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보호

- 지원 기반 시설, 교통 옵션 및 투자 기회와 연결된 상업 및 산업 토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를 지원하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고용 토지를 계획
-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강화

□ 지속가능·탄력적인 영역

- 재생에너지의 활용, 개선된 건물 설계 및 운송 계획을 통해 순제로 배출 도시로 전환
-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
- 생활 기반 시설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통합하여 경관 내에서 캔버라를 회복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킴
- 건강한 수로와 살기 좋은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물 순환 관리계획
-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서식지 연결성을 강화하여 경관 회복력을 향상

□ 살기 좋은 캔버라

- 커뮤니티 요구를 충족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
- 여가, 열린(녹지) 공간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신체적, 정신적 건강, 공공 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 공간을 제공
- 살기 좋은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
- 변화하는 기후에 맞는 고품질 디자인, 건축 형태 및 장소를 장려

□ 접근 가능한 캔버라

- 교통과 토지 이용을 더 잘 통합하여 접근성을 향상
- 잘 설계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거리와 공공장소를 제공
- 시내 중심가와 시내 중심가로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더 나은 경험을 제공

5절 브라질-쿠리치바

1. CIDADES INOVADORAS CURITIBA 2030

1) 쿠리치바 2030

- 시민, 기업, 정부 및 학계가 협력하여 웰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성하는 글로벌 및 다문화 도시 지향
- 7가지 우선순위: 통치, 네트워크 도시, 지식 도시, 운송 및 이동성, 환경과 생물다양성, 건강과 웰빙, 글로벌 도시의 공존

2) 우선순위 각 부문별 세부 내용

통치

- 통합된 민주적 프로세스로 지원되는 세계적 수준의 공공 거버넌스
 - 공공 거버넌스의 공동 관리자, 파트너 및 감독자로서 시민과 사회의 모든 부분의 자격 있는 참여를 촉진
 - 혁신적이고 우수한 전략과 관행을 공공 경영에서 구현하고, 민관 관계 명확화
 -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거버넌스 지식 생산 및 공유

도시 네트워크

- 사람, 기업, 정부가 네트워크로 조직되고 연결되어 인간의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에 대한 국제적인 언급
 - 정부, 기관, 기업, 제3부문 및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 네트워크 인프라 및 현장 접근 수단 확장
 - 정보 역량개발: 사람들에게 정보 검색, 이해 및 제공 등 권한 부여
 - 네트워크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기업 자극

□ 도시 지식

- 지식 생산 시민과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사회의 창조자의 교육에 대한 참조
 - 평생교육을 위한 지식, 방법론, 혁신기술의 습득과 생산을 위한 공간 구축
 - 교육자로서의 시민 역량 강화 및 학교-지역사회 관계 강화
 - 지식 생산-새로운 시장 요구에 맞춰 전문가 양성
 - 혁신적인 벤처,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포용 및 통합에 도움이 되는 환경 개발
 - 직업 세계에 맞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 운송 및 이동성

- 도시 구조가 시민의 행동을 변혁의 엔진으로 하는 것과 함께 더 큰 쿠리치바를 위한 멀티모달 통합에 찬성하는 지속 가능한 대도시 공공 정책에 대한 참조
 -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도시 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잠재력을 평가
 - 안전, 이동성, 편안함 및 품질을 제공하는 복합 운송 옵션을 통한 이동성 보장
 - 전체 이동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촉진

□ 환경과 생물다양성

- 시민권에 기반한 생물다양성과 사회 환경 시너지에 대한 국제적 참조
 - 사회-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위한 사회 환경 센터 조성
 -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의 공간과 통로를 통합
 - 폐기물 통합관리 실시

건강과 복지

- ‘Health Technology Hub’ 생성 및 통합
- 삶의 질을 위한 지식 전파 및 실천
-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의 디자인을 개선

글로벌 도시에서의 공존

- 대중의 기본 요구를 보장하고 공공 정책과 그 결과의 정교화에 참여를 장려
- 시민의식 고취 및 인권 존중
-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공존을 위한 상호 문화 자극
- 도시에 대한 시민의 소속감 고취 증진

6절 미국-워싱턴 D.C.

1. Metropolitan Washington 2030 Climate and Energy Action Plan

1) 목표 및 원칙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고 2030년까지 복원력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 대비 지역이 되는 것을 요구
- 원칙: 집단행동, 효과적인 파트너십, 모범 사례, 통합, 유연성, 투명성, 혁신, 커뮤니티 리더십, 포용적 참여, 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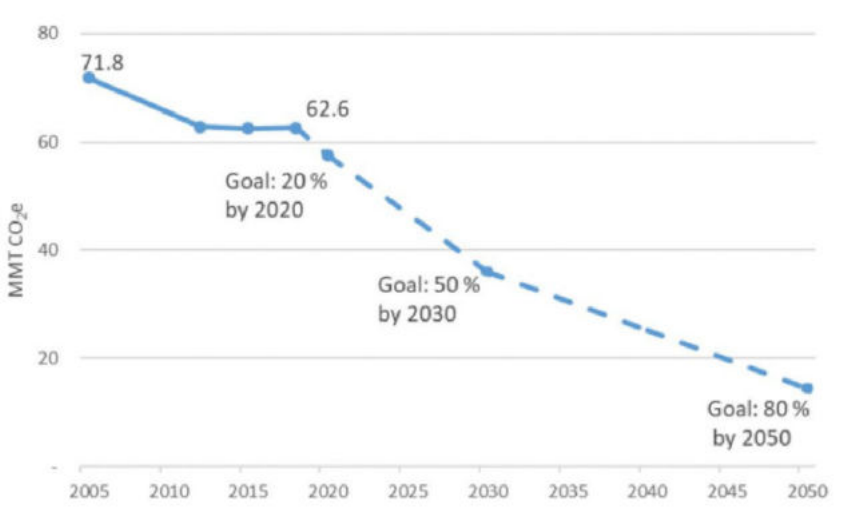
2) 계획 핵심 요소

- 온실가스: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50% 감소
 - 기후 완화 전략: 2005년 수준 미만으로 2030년까지 GHG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EEPC의 우선순위 협력 완화 조치를 식별, 계획, 형평성, 청정 전기, 제로 에너지 건물, 제로 배출 차량, 모드 전환 및 여행 행동, 제로 폐기물 및 격리 포함
 - 기후 위험 및 취약성: 지역 기후, 위험 및 취약성 평가(CRVA)
 - 기후 복원력 전략
- 기후 및 에너지 실행 계획
 - 이해 관계자 참여
 - COG의 대기 및 기후 공공자문 위원회(ACPAC), 건축 환경 및 에너지 자문 위원회(BEEAC), 기후,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위원회(CEEPC) 기관과 구성원은 지역 및 지역적으로 계획의 권장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
 - 구현 및 모니터링
 - 계획의 목표를 향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COG는 2년마다 진행상황을 보고

- 보고된 진행 상황에는 GHG 배출량, 지역 및 지역조치의 예시, 해당 계획의 우선 순위 협력 조치에 대한 구현 진행 상황의 예가 포함됨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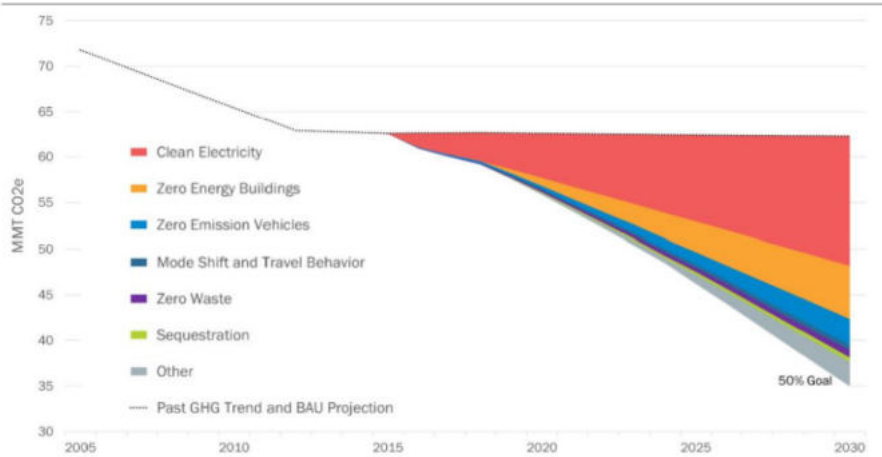
- CEEPC는 지역 및 지역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지정



[그림 3-기] 워싱턴 GHG 동향 및 목표

자료 : CEEPC(2020), Metropolitan Washington 2030 Climate and energy action plan

- COG는 지역 전체의 GHG 추세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그림을 포착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및 연도 전반에 걸쳐 반복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
- BAU 예측은 미래 GHG 배출에 대한 기준 시나리오를 제공
- 2030년 시나리오: 2030년까지 GHG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 감소시키는 워싱턴 대도시에 대한 “What Would It Take”의 기술적 잠재력을 분석



[그림 3-8] 워싱턴 “What Would It Take” 시나리오 결과

자료 : CEEPC(2020), Metropolitan Washington 2030 Climate and energy action plan

□ 지역 기후 완화 전략

-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미만인 50%,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GHG)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조치가 포함됨
- 우선 협력 완화 조치
 - 2030년까지 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G와 그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과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상당한 조치가 필요

Climate Action Area	Action ID	Priority Collaborative Action
Planning	PL - 1	Advance Climate Planning and Track Progress
Equity	EQ - 1	Enable Equitable Planning Practices
	EQ - 2	Prioritize Sustainable Energy Access for All
Clean Electricity	CE - 1	Advocate for Aggressiv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CE - 2	Accelerate Development of On-Site Renewables
	CE - 3	Accelerate Deployment of Battery Storage
	CE - 4	Accelerate Development of Microgrids for Critical Infrastructure
	CE - 5	Accelerate Development of Large-Scale Off-Site Renewables
	CE - 6	Advocate for and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Zero Energy Buildings	ZEB - 1	Expand Building Benchmarking Requirements
	ZEB - 2	Accelerate Deep Building Retrofits
	ZEB - 3	Enhance Green Building Codes and Policies to Facilitate Net Zero Energy Building Development
	ZEB - 4	Expand Proper Disposal and Leak Detection of Refrigerants
Zero Emission Vehicles	ZEV - 1	Expand Light-Duty Electric Vehicle Deployment
	ZEV - 2	Accelerate Electrification of 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ZEV - 3	Build Out Regional Electric Vehicle Charging Network
Mode Shift and Travel Behavior	MSTB - 1	Invest in Infrastructure that Increases Transit, Carpooling, and Non-Motorized Travel
	MSTB - 2	Bring Jobs and Housing Closer Together
	MSTB - 3	Enhance Options for Commuters
Zero Waste	ZW - 1	Implement Curbside Organics Recycling Programs
	ZW - 2	Reduce Solid Waste Generation
	ZW - 3	Build Markets for Circularity
Sequestration	SQ - 1	Strategically Plant New Trees on Publicly Owned Land
	SQ - 2	Enhance Regulatory Capacity to Manage Tree Canopy and Forest Protection
	SQ - 3	Enhance Incentives and Financing Mechanisms for Tree Planting and Preservation on Privately Owned Lands

[그림 3-9] 워싱턴 우선순위 협력 완화 조치

자료 : CEEPC(2020), Metropolitan Washington 2030 Climate and energy action plan

7절 싱가포르

1. 스마트도시 싱가포르

1) 도시 개요

세계 주요 스마트도시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좁은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와 국가의 기능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도시가 곧 국가인 도시국가
- 경제, 사회, 정부 디지털화를 핵심축으로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
- 도시 문제 해결에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 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네이션 계획을 추진 중
- 다양한 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세계 주요 스마트도시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현 노력

- 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
 - Smart Nation Initiatives라고 명명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의 주도하에 3차원 가상 도시 모델(3D city model)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73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완성됨
 - 4가지 주요 기능 : 3차원 도시 모델을 이용한 가상 실험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도시 및 교통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연구개발 환경지원
 - 특정 기업(Dassault Systems)의 기술에 종속된 나머지 데이터 갱신과 커스터마이징 등에 요구되는 비용 문제 발생

2) 스마트도시 계획

□ 스마트네이션 계획 수립 배경

○ 싱가포르의 도시문제

- 비좁은 국토의 발전으로 인구의 증가와 도시 밀도 상승에 따른 녹지 및 주택 확보 교통 등 살기 좋은 환경 유지 등
- 제한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혼잡을 줄이기 위한 개인 차량 보유 억제 정책,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 공항, 항만, 쓰레기 처리시설, 발전소, 군부대 등 국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 도시 내에 입지하여 도시문제가 타 도시에 비해 복합적으로 발생
-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전되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스마트네이션 계획 수립

- 2014년 싱가포르(도시)에서의 삶과 관련한 모든 측면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디지털전환 개념을 담은 스마트네이션 계획 수립
- 2014년 이전부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싱가포르의 일관된 초점을 계승하고 있음

□ 스마트네이션 체계

○ 스마트네이션의 구체적 방향

-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①경제 발전, ②도시와 지역의 문제해결, ③커뮤니티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계획 구체화
- 계획을 적용할 5가지 핵심영역: 교통 주거, 환경, 비즈니스 생산성, 건강과 활력 있는 노화, 공공분야 서비스
- 핵심영역의 디지털화를 위한 세부전략: 기술개발촉진, 혁신환경조성, 디지털 역량교육

스마트네이션 계획의 3가지 축

- 스마트네이션 계획의 3가지 축: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 싱가포르는 경제 정부 사회 변혁을 위하여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정부 청사진’, ‘디지털 준비 청사진’ 등 광범위한 계획 수립

3) 스마트도시 사례

국가디지털신원확인(National Digital Identity)

- Singpass(디지털 개인 정보 서비스), TraceTogether(COVID-19 대응 애플리케이션), MyInfo(SingPass 사용자가 선택한 개인 정보를 온라인 양식에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Tell Us Once’ 서비스)

E-payments(전자 결제 시스템)

- PayNow(모바일 전자 결제 서비스), SimplyGo(비접촉식 요금 지급 시스템)

Life SG Initiative

- Moments of Life 확대 · 개선
- Moments of Life :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정보를 망라하여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순간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 재구성
- Parents Gateway(학교-가정 원스톱 포털), OpenCerts(교육 증명서 발급 및 검증 플랫폼)

스마트국가센서플랫폼(Smart Nation Sensor Platform: SNSP)

- 센서 통합 플랫폼, Parking@HDB(스마트 주차장), Bigbelly bins(태양광 패널 스마트 쓰레기통)
- Lamppost as a Platform(Laap):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유무선 기술(저대역, 저전력)을 사용하는 상호 연결된 110,000여 개 가로등을 통해 비디오 센서 데이터 수집, 분석

스마트 도심 모빌리티(Smart Urban Mobility)

- 디지털 기술 융합, 포용적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무인차량, Aptiv(자율주행택시), Self-driving bus(자율주행 셔틀버스), Auto Rider(Gardens by the Bay 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4) 시사점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 좁은 국토와 인적자원의 부족,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계획 수립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국가발전계획과 국가기술정책이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고려하여 진화하면서 2014년 스마트네이션 계획 수립
 - 스마트네이션은 싱가포르 사람의 삶의 모든 측면을 디지털화하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디지털전환 계획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는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기관 통합

-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 사업 탈피 필요

- 유연한 규제 및 사용자 주도형 혁신 장려 필요
 - 스마트네이션 계획은 정부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책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더욱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 정책 필요
- 시민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성공 사례 필요

2. 싱가포르 교통 · 환경 · 산업

1) 교통

교통상황

- 싱가포르의 지하철(Mass Rapid Transit, MRT) 시스템은 싱가포르 전역을 도는 가장 빠른 방법임
- 광범위한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싱가포르 명소를 MRT 역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음
- 택시는 버스나 MRT로 갈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때 특히 유용하고 편리함
- 싱가포르 버스 시스템은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연결됨

버스

- 버스요금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0.95~2.21싱가포르달러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20~1.30 싱가포르달러(한화 1,150원)를 크게 넘지 않음
- 현지인들은 일반적으로 ez-Link Card라는 선불카드(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음)를 사용하는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용됨

택시

- 택시는 시내 곳곳에 있는 택시승하차장(Taxi Stand)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잡을 수 있음
- 최근에는 Grab, CDG Zig, Gojek 등의 통합 택시 콜서비스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하는 경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기본 요금은 3.90~4.10 싱가포르달러 수준이며 시간 · 거리 병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됨

□ 차량공유서비스

- 싱가포르 현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Grab과 2019년 싱가포르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차량공유서비스업체 Gojek등을 이용 가능함
-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사와의 대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와 도착지를 정하고 현금 및 카드 자동결제 가능해 편리함

□ 싱가포르 복합환승역의 공간활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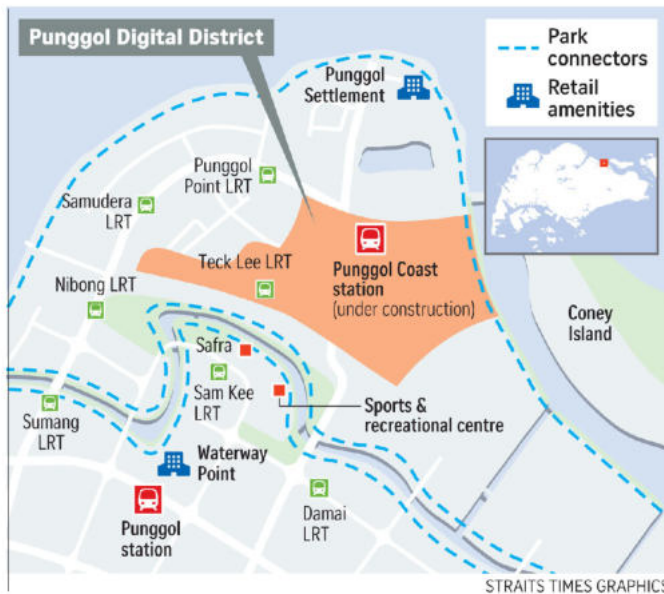
-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이후 국토 전체를 녹지공간화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지상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MRT 역 주변을 중심으로 1헥타르 규모의 지역 소규모 녹지공원을 적극 조성하고 각 공원마다 독특한 볼거리와 디자인을 입혀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과 관광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MRT역 지상공간을 녹지화함으로써 200~300m 내외에 소규모 녹지공간들이 촘촘히 연계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고 있음
 - 하버프런트(HabourFront)역 구역, 선택시티(Suntec City) 구역, 마리나베이(Marina Bay) 구역 모두 MRT 역 지상공간은 녹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 외 공간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복합시설, 특히 상업 및 비즈니스 용도의 빌딩과 MRT 환승역을 연계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공간을 상업시설로 대규모 개발하여 개발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임

□ 싱가포르 교통 정책

- 싱가포르는 개인을 차량을 철저히 제한
 - 싱가포르는 차량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1990년 5월부터 차량총량제를 시행하고 차량에 대한 운행권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타입 A,B,D 차량에 적용되는 COE 발급 증가율을 0% 수준으로 유지하는 '자동차 증가율 0% 정책'을 시행 중임

○ 풍골 코스트 역 & 풍골 디지털 지구

- 노스 이스트 라인(NEL, 보라색 라인)의 1.6km 연장인 풍골 코스트 (Punggol Coast)역이 현재 공정 40% 진행 중이며 2024년 개통 예정
- 이 역이 개통하면 풍골 지역의 싱가포르 공과대학(SIT)과 현재 개발 중인 풍골 디지털 지구(Punggol Digital District)를 연결하게 됨
- 풍골 코스트 역은 배후 지역의 신규 비즈니스 단지의 직원, 지역 신도시 주민, 주변 학교의 학생 등 75,000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대 초까지 현재 230km인 철도망을 360km로 확장하고 싱가포르 10가구 중 8가구에서 전철역까지 10분 이내 거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3-10] 풍골 코스트 역 & 풍골 디지털 지구

자료 : 한국춘 뉴스

(<https://hankookchon.com/news/11502?s3=2003-07-01&s4=2021-08-11&page=31>)

□ 수단간 환승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충분한 노선의 MRT, 버스를 공급하고 수단간 연계가 편리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운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음
 -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철 역사, 버스환승센터, 상가 등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함
- 도시철도(MRT) 환승역은 환승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지하철 탑승 시에도 옆 방향에서 대기 후 탑승 하도록 하여 하차하는 승객과의 상충을 감소시킴



[그림 3-11] 버스환승센터 승·하차 대기공간 및 운영버스

자료 : 서울연구원(2020), [해외출장노트] 싱가포르의 주차 시스템 정책 및 주차장 운영 현황



[그림 3-12] 복합환승센터 내 MRT 연계구간 및 플랫폼 지하철 대기공간

자료 : 서울연구원(2020), [해외출장노트] 싱가포르의 주차 시스템 정책 및 주차장 운영 현황

□ 시사점

- 싱가포르의 차량 총량 규제(VQS) 및 권리증명서(COE) 발급 등의 방법으로 전체 국민 중 일부만 차량을 소유하도록 할 뿐 아니라, ERP 제도 등을 통하여 차량 이용 자체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높은 범칙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도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고자 함
-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지하철 또는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

2) 금융 산업

□ 금융 산업 특성

-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 허브, 싱가포르
 - 세계 유수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 포함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는 자금조달 및 외환관리에 용이하여 아시아 대표 금융허브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주요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는 은행업(특히 투자은행, 자산 관리 및 자산 운용산업), 보험업, 자본 시장(증권, 선물 및 파생상품) 서비스 등이 있음
- 싱가포르 금융업
 -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REITs) 시장은 시가 총액 1105억 싱가포르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함('21년 6월 발표 기준)
 -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21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하루 평균 외환 거래량이 6400억 미국 달러를 기록하며, 런던과 뉴욕에 이어 세계 최대 외환거래소 3위를 유지하고 있음

□ 기술동향 및 주요 이슈

○ 싱가포르 핀테크(Fintech) 지속 성장세

- 싱가포르의 핀테크 투자는 2020년 2분기에 2억 7,800만 달러(3억 7,100만 싱가포르 달러)로 반등하여 1분기에 기록된 6,800만 달러의 4.1배를 기록함.
-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싱가포르 핀테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음
- 2020년 기준 싱가포르의 핀테크 기업은 1,000여 개 이상으로 2015년 100개 핀테크의 10배 수준임
- 핀테크 종사자 수도 5년 전 1,100명에서 2020년 1만 명을 넘어섰음

○ 전자결제 플랫폼 확장

- 싱가포르는 국경 간 경계를 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결제시스템인 Paynow를 각각 '22년 4분기부터 말레이시아 BNM(Bank Negara Malaysia)의 DuitNow와 연결하고 '22년 7월부터는 인도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음

□ 산업의 수급 현황

- 싱가포르의 2020년 금융보험업은 전년대비 5.0% 성장하여 '19년 성장률 7.8%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싱가포르 금융업은 결제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표 3-1] 싱가포르 금융보험업 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

연 도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	6.5	5.8	7.8	5.0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싱가포르 금융산업 정보

3) IT 산업

□ IT 산업 특성

- 정보통신기술 산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전기 통신, 방송, 컴퓨팅(정보처리,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통신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기술

□ 기술 및 산업 동향

- 인공 지능(AI)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11월, 5개 분야(운송 및 물류, 스마트 시티, 헬스 케어, 교육, 안전 및 보안)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실용화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음
 - 화물의 수요예측, 질병예방, 국경의 통관절차,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 시스템, 공공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CAS)은 2021년 10월 '사이버 전략 2021'를 발표하였음
 - 싱가포르 사이버 전략 2021은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 '국제 사이버 협력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함
- 사물인터넷(IoT)
 - 싱가포르 IMDA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통신산업(Communications)의 시장규모는 2022년 5억 6,700만 미국달러로 약 4%성장이 예상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의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글로벌 시장 성장세(3%)보다 빠른 7%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싱가포르의 IoT 시장규모는 2022년에 11억 싱가포르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IMDA는 전망함
 -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액의 투자, 빅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주요 이슈

○ 2025년 5G 네트워크 구축 목표

- 싱가포르를 2025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에 2개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함

○ SMART NATION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목표를 위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의 지역본부 및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이를 통해 정보통신 및 미디어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해오고 있음

□ 산업 현황

○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

-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IT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가운데, 중국 IT기업 신규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격전지로서 싱가포르가 급부상하고 있음
- 중국 IT기업인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싱가포르 디지털뱅크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 핀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음
- 또한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Zoom 등이 싱가포르 내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업 고용 현황

-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8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 데이터 과학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 1만 8000여 개의 일자리 및 기술교육 기회가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싱가포르 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직(ICT professionals)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싱가포르 노동부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임금 평균(중위값)은 월 6,000 싱가포르달러(싱가포르 전체 평균 4,600 싱가포르달러) 수준임

□ 시장 규모

- 2020년 정보통신산업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 2020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은 IT 및 정보서비스 부문에서 주도했는데, 웹이나 포털과 같은 서비스 부분의 수요의 영향으로 해당 부문이 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통신부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싱가포르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20	2021. 1Q	2021. 2Q	2021. 3Q
싱가포르 총 GDP 성장률	-5.4	1.3	14.7	7.1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2.1	6.4	9.6	10.4

주 : '20년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21년은 전년 동분기 대비 성장률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싱가포르 IT산업 정보

4) 관광 산업

□ 최신 동향

-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 STB)에 따르면, '20년 관광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방문자 도착 수(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IVA) 및 관광수입(Tourism Receipts, TR)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방문자 수(IVA)는 전년 동기 대비 85.7% 감소한 27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음
- 관광수입(TR)은 48억 싱가포르 달러로 '19년에 비해 82.6% 감소했음

□ 기술 동향

- 창이공항과 디지털 기술
 -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새로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를 통해 여정의 시작에서부터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선보임

- 해당 키오스크는 첨단 적외선 센서를 자랑하며, 전자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여행 옵션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적용됨
- 기존의 지문 스캔 대신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이 얼굴과 홍채를 스캔 하여 신원을 확인함

○ 디지털 결합을 통한 비대면 관광

- 싱가포르 동물원(Singapore Zoo), 주룽 새 공원(Jurong Bird Park), 나이트 사파리(Night Safari), 리버 사파리(River Safari)를 관리하는 싱가포르 야생동물 보호구역(Wildlife Reserves Singapore)은 Zoom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족 친화적인 가상 투어를 마련했음
- 이용객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온라인상으로 가까이서 관찰하고 사육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음
- 싱가포르 관광청과 싱가포르 호텔 협회는 최근 'E-Visitor Authentication System'을 도입함
- 일부 호텔은 위의 안면 인식 기술을 채택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체크인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산업의 수급 현황

- 코로나 19로 인해 시행된 입국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2020년 관광수입은 48억 싱가포르 달러로 2019년 대비 82% 감소함
- 2020년 관광업 주요 분야의 연간수입은 각 분야별로 기타(35%), 관광·엔터테인먼트·게임(20%), 숙박(21%), 쇼핑(15%), 요식업(9%)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싱가포르 관광청(STB))

[표 3-3] 싱가포르 관광업 주요 분야 연간 수입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주요 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합	25,748	26,807	26,942	27,689	4,830
쇼 핑	5,958	6,172	5,385	5,640	703
숙 박	5,916	6,016	5,666	5,529	1,022
음 식	2,787	2,649	2,593	2,497	454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	5,348	5,618	5,859	5,997	951
그 외	5,739	6,352	7,440	8026	1,700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싱가포르 관광산업 정보

5) 환경

친환경 도시 건설 사례

에코시티 풍골

- 싱가포르 최초 에코타운 및 스마트시티로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저감 실천 사례를 보여줌
- 원격 보안관리(보육시설 등),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스마트센터, 지하 물류센터 운영(배송로봇), 폐기물 수송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임
- 이 도시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태양광을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제 보급하고 있음.
- 옥상 유휴 공간 면적이 400㎡ 이상인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2017년 법으로 제정됨
- 풍골은 싱가포르의 인구분산 정책의 하나로 세워졌음
- 인구 밀도가 ㎢당 8천명을 넘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가구가 거주하도록 만들었고, 문화·사회·환경에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

- 싱가포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그린플랜 2030에서는 이전 환경 정책과 비교했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크게 강화됨
 - 그린플랜 2030에서 싱가포르 환경관리부는 이전의 환경 정책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추가로 덧붙이는 애드온(add on) 방식이었다면 그린플랜 2030은 싱가포르 국가 구조를 기초부터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계획이라고 강조함
 - 싱가포르 정부는 그린플랜 2030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대표적으로 강조함

□ 친환경 사회 위한 인프라 정비

- 교통 부문의 탄소량 감축을 위한 교통 구조 대거 개편
 - 자동차는 현재 싱가포르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탄소 배출원임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총 교통량의 75% 이상을 대중교통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크게 확장한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 수송부는 현재 약 460km인 싱가포르의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10년 내에 그 3배에 이르는 1,320km로 연장할 계획임
 - 싱가포르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통수단 중 디젤 자동차가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2025년부터 디젤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함
 - 2030년부터는 차량 신규 등록 시 친환경 자동차에만 등록 허가를 발급할 것임
 - 2040년부터 가솔린을 포함한 일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싱가포르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2040년 이후 완전히 전기자동차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힘

- 싱가포르 국민주택인 HDB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거 증설해 2030년까지 최소 6만 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친환경 빌딩 인프라 확장

- 싱가포르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은 건축물로, 싱가포르 연간 총 탄소 배출량의 20%가 건물 냉난방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그린플랜 2030의 일환으로 80-80-80 프로젝트를 수립함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건물 총 연면적의 80% 이상을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2030년부터 신축 건물의 80% 이상을 SLE(Super Low Energy) 건물로 짓도록 규제할 것임
- 2030년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2005년 대비 80%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건축물 탄소 배출 감축의 시작점으로 공공기관 건물과 학교를 지정하여 정부가 먼저 그린플랜 2030 실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로 함

○ 태양광 설비 확충 및 전력 공급 효율 제고

- 싱가포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예정임
- 싱가포르 에너지 당국은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20년의 4배까지 늘릴 예정임
- 정부는 부족한 국토 면적을 고려하여 HDB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집중 설치하며, 동시에 최근 시작한 수상 태양광 설비 확충에도 투자를 늘릴 예정임
-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25년간 축구장 45개 면적의 호수에 60메가와트 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음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전력 부족 시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 내에 무리해서 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 인접한 말레이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기존 화력 발전소의 터빈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동일 발전량 대비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나갈 것임

□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확충, 교육 과정 조정도

○ 세금 제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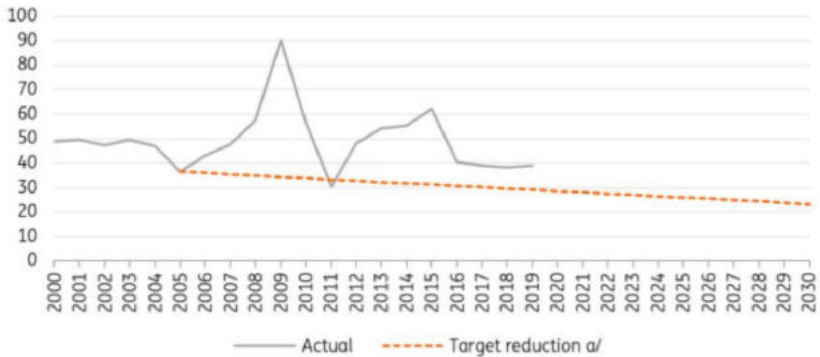
- 민간이 친환경 설비나 자동차를 구매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친화적인 부문에는 절세 혜택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는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구성됨
-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등록세와 주행세를 감면함
- 탄소세 인상 논의: 탄소 배출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강력하게 부과할 방침

○ 친환경 교육 과정 신설, 녹지 강화

-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하고, 동시에 학교 시설물을 LED 등으로 교체해 친환경 기구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할 방침임
- 또한 상급 교육 기관에 친환경 도시 디자인과, 재생 에너지과, 수자원 관리과, 도심지 농경연구과 등을 신설하고,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일상생활에서도 싱가포르 국민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게 녹지를 크게 늘릴 예정임
- 싱가포르는 그린플랜 2030을 통해 적어도 100만 그루의 수목을 새로 심을 예정이며, 싱가포르 거주구 어느 곳에서든 도보로 10분 이내에 녹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구획을 정비할 것임

- 현재 170헥타르 정도인 싱가포르 공공 공원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그에 준하는 약 130헥타르의 신규 자연공원을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6% 감축할 것임



[그림 3-13] 싱가포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목표 배출량(백만톤)

자료 : ING Bank NV(2021), Singapore Green Plan 2030

8절 스위스

1. 스위스의 농업정책 사례 : 직접지불제 중심으로

1) 농업·농촌 현황

- 스위스는 인구는 약 870만 명('21)의 작은 국가이며, 인구 중 약 23%가 이민자이며,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6% 정도임
- GDP는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약 7,031억 달러이며, 산업구조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 기타로 분류('20)
- 각 산업별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 기여율은 제조업 18.7%, 서비스업 73.3%, 농업 0.7%, 기타(건설 및 기타산업) 7.3% 임

[표 3-4] 스위스 총부가가치(GVA) 비중 추이

산 업	2016	2017	2018	2019
농업	0.97	0.64	0.65	0.65
제조업	18.31	18.41	18.53	18.74
서비스업	74.13	74.10	73.96	73.70
그 외	6.59	6.85	6.86	6.91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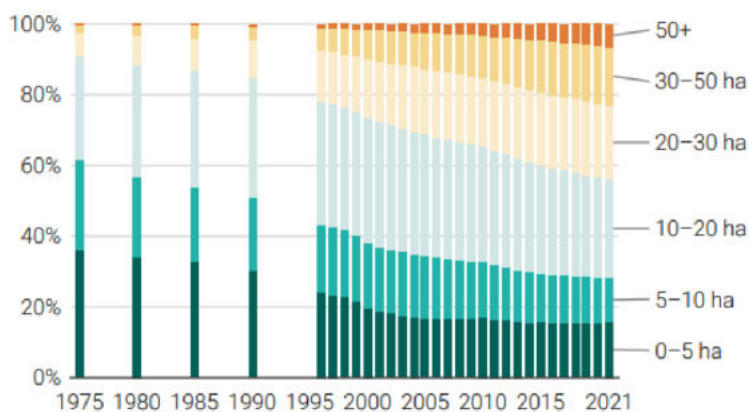
- 농가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 정도임
 - 국토 면적은 약 40,000km²이며 농업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36%, 산림 31%, 비생산지역(비식용식물, 빙하 등)이 25%, 도시 8%를 차지
 - 농업 비중 31% 중 작물재배 10%, 초지 13%, 알프스 초지 12%, 기타 농업 1%로 구성
-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직접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에 활용된 농업 면적은 약 100만 헥타르(ha)로 측정 되었음
 - 2021년 농장의 평균 이용 면적은 21ha로 197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함

- 농장 수는 1975년 111,302개에서 2021년 48,864개로 감소함
- 전체 농가는 감소한 반면 유기농 농가는 1990년 900곳에서 2021년 7,670곳으로 증가함
-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장의 수는 2010년 7,000개에서 2020년 12,600개 이상으로 증가함

[표 3-5] 농업구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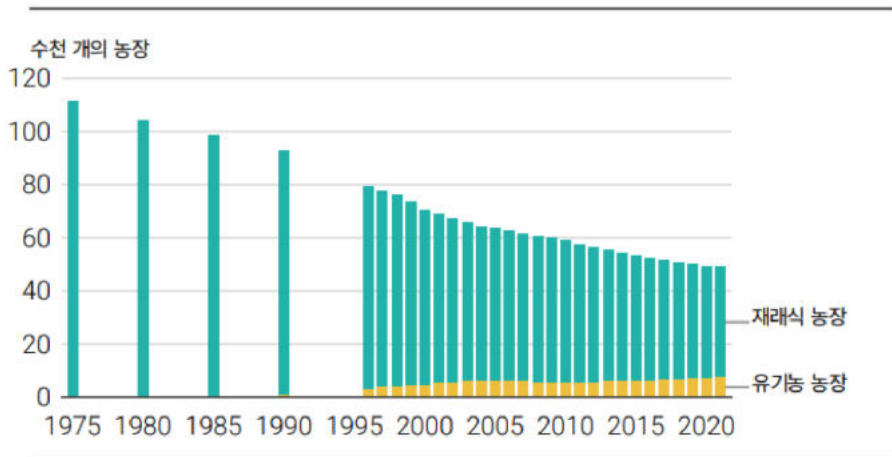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유기농업	유기농업 비중	기 타
농가	48,864	7,670	15.7%	4.4
농가인구	150,231	26,441	17.6%	8.2
경지면적(ha)	1,042,053	181,444	17.4%	8.4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ha)	21	24	-	8.9
소	1,513,701	213,558	14.1%	8.8
돼지	1,366,359	36,285	2.7%	5.1

자료 : FSO, Farm structur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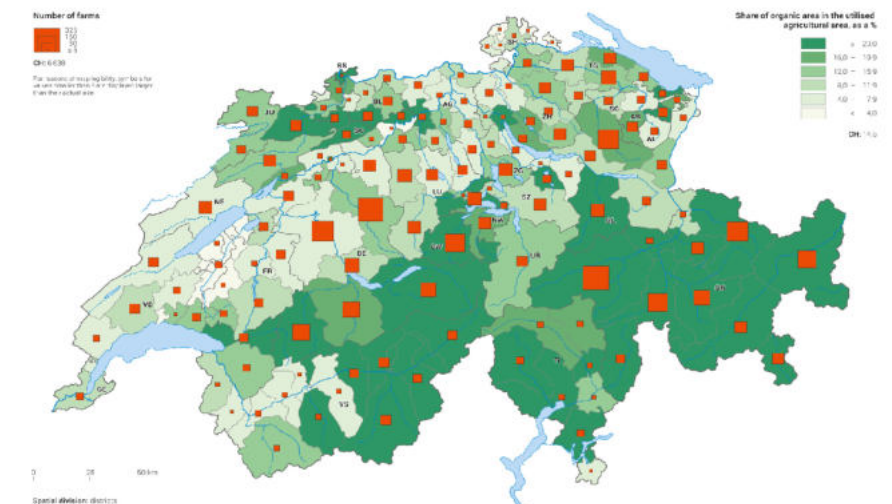
[그림 3-14] 스위스 농장당 활용된 농업 면적의 크기(1975-2021)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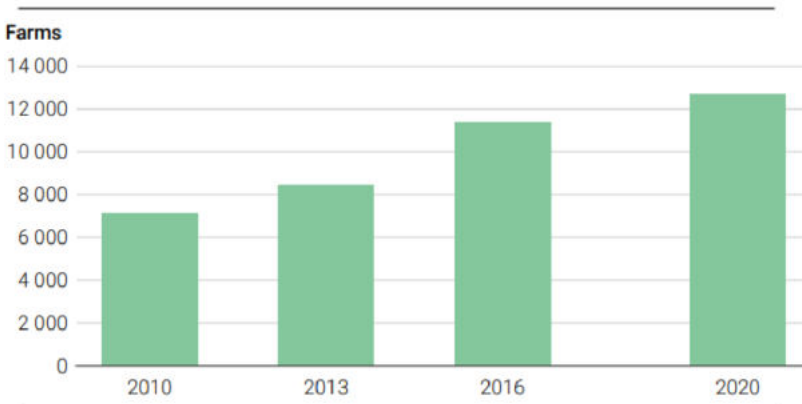
[그림 3-15] 스위스 농장 수 변화 (1975-2021)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그림 3-16] 스위스 유기농업 분포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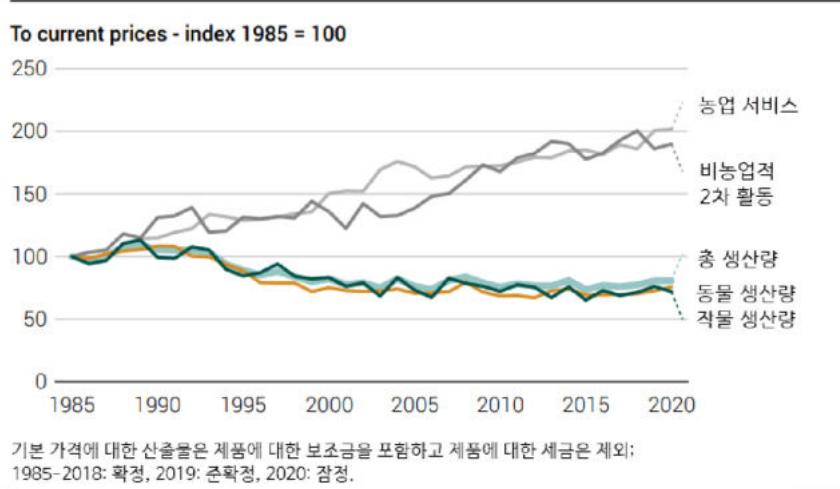
자료 : FSO



[그림 3-17] '농장-최종 소비자' 농산물 직접판매량(2010-2020)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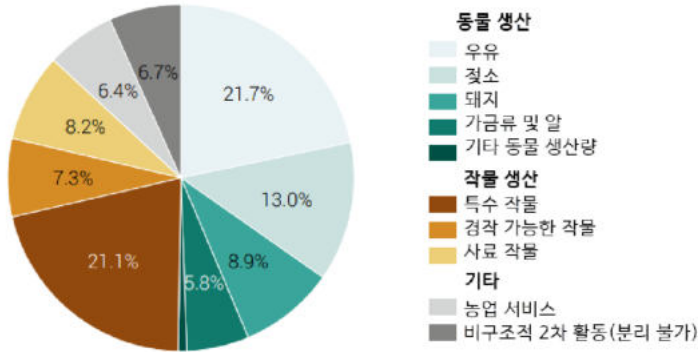
- 2020년 스위스 농업의 총 생산량은 114억 CHF임
 -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서비스와 비농업 2차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에서 2020년 13%로 증가했음.
- 스위스의 주요 재배 작물은 밀이며 밀은 곡물 수확량의 절반을 차지함
-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8% 증가한 약 1,010,000톤의 곡물이 생산됨



[그림 3-18] 농업 생산량(1985-2020)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총액: 114억 스위스 프랑, 2020년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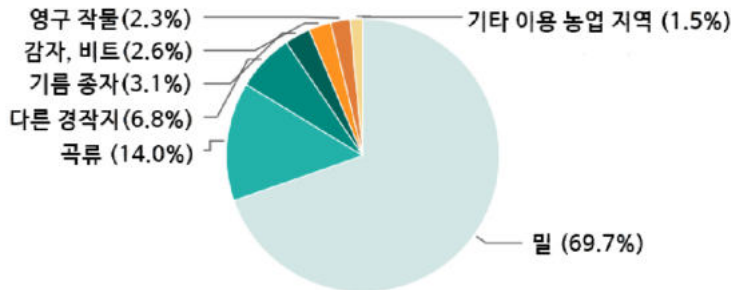


[그림 3-19] 농업 분야별 총 생산 비율(2020)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고산 지대 제외

총 면적: 1,042,000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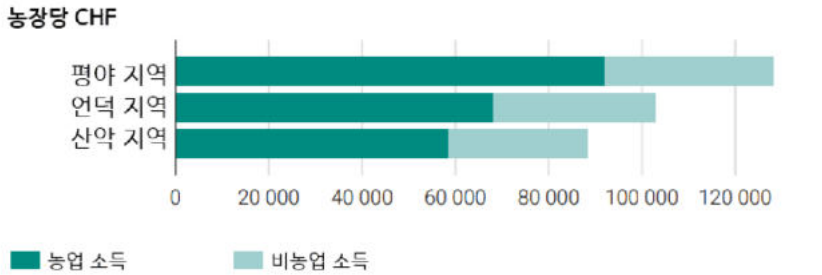


[그림 3-20] 곡물별 생산 비율(2020)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 소득은 지역마다 다름

- 2020년 농장당 농업 수입은 평균 CHF 79,200이며 전년도인 2019년 보다 5,000 CHF 증가함
- 가계 소득은 평야 지역보다 언덕 지역과 산간 지역(각각 26%, 36%)에서 낮은 경향이 있음



[그림 3-21] 농장별 총 소득(2020)

자료 :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 농업이 식량안보, 다원적 가치, 경관과 같은 공공재로 인식
- 1990년대 이후 농업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개편하였으며, 이에 농업환경기준을 개선

2) 직접지불제로의 전환

- WTO 농업협정에 따른 관세 및 시장 왜곡적 보조 감축(1995)과 EU와 무역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업정책의 개혁이 요구되었음
- 90년대 초의 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정책을 축소하고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로 전환
 - 직접지불제는 경지면적과 사육두수에 기초로 하여 지급
- 직접지불제는 환경을 고려하여 농업환경과 전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
 - 일반직불제(general direct payment)의 지급조건은 환경개선, 동물복지 등의 충족을 요구
 - 생태직불제(ecological direct payments)는 생물다양성, 경관, 동물복지 등 비시장제의 공급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
- 2014년 이후 농정의 목표를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문화경관, 조건불리지역 지원 등으로 제시

- 정책수단은 직접지불제에 초점을 두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자 지불제를 재조정
 - 주요 흐름은 경지면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직불금(general area payment)를 축소하는 대신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목적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스위스 농업농촌 정책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정도를 차지함
 - 스위스 정부가 농가당 지원하는 직불금은 농가당 약 6,100만원('18)으로 농가소득 1억 800만원의 56% 수준임
 - 한국의 농가당 직불금은 18년 기준 약 240만원으로 농가소득 4,200만원('18)의 6% 수준임
 - 스위스의 농식품 예산 4조 1천억 원 중 77% 수준인 3조1500억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됨

[표 3-6] 스위스 직접지불제의 기본 틀

구 분	내 용
① 식량안보 직불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기본직불, 생산환경계약 직불,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 대한 직불
② 경작경관 직불	지형적, 환경적 특성에 의한 영농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 및 경관보전을 위한 농업활동의 지속을 목적
③ 생물다양성 직불	환경친화적 농업활동 유지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서식지 환경개선을 목표
④ 경관 질 제고 직불	지역의 환경적 특성,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관 유지·보전을 목적
⑤ 생산시스템 직불	환경친화적이고 동물친화적인 농업생산방식의 유지를 지원
⑥ 자원효율성 직불	자원의 효율과 생산기술에 따른 지원 (토양 보호를 위한 무경운 방법 등)
⑦ 전환 직불	직불제 개편에 따른 직불금이 줄어드는 농가에 대한 지원

자료 : 농촌진흥청(2019)

- 이 변화에서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이행직불(transition payment)을 통하여 보완하는 시스템임

[표 3-7] 스위스 농업정책 예산

구 분	농업정책 (‘14~17)	농업정책 (‘18~21)	증 감	
생산기반 및 사회적 지원조치	798	563	-235	-29.5%
생산 및 판매	1,776	1,747	9	0.5%
직접지불	11,256	11,250	-6	-0.1%
합 계	13,830	13,560	-232	-1.7%

주 : 2018-2021 without administrative credits milk allowances and livestock totaling 38.1 million

자료 : FOAG(Switzerland) PA 18-21

[표 3-8] 스위스 직접지불제 예산(AP 18-21)

(단위 : 백만 스위스프랑)

구 분	2016	2018	2019	2020	2021	계
식량안보직불	1,086	1,056	1,056	1,056	1,056	4,223
경관유지직불	494	521	521	521	521	2,084
생물다양성 직불	352	338	343	348	353	1,382
경관질 직불	130	150	150	150	150	600
생산시스템 직불	459	467	472	476	480	1,895
자원효율 직불	58	72	77	82	87	318
제도전환 과도기 직불	169	88	64	50	36	239
총 합계	2,748	2,692	2,683	2,683	2,683	10,741

자료 : FOAG(2016)

9절 시사점

- 다른 나라의 도시들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와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시드니) 전략적 우선순위로 경쟁력 강화, 생산성 및 역량 강화, 강력한 지역 기반 구축을 지향
 - (오타와) 북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중형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장, 이동성, 도시 디자인, 복원력, 경제 부문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의 확장을 기후 변화, 성장 관리, 교통 및 기반 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 지원
 - (웰링턴) 주요 업무 프로그램을 미래를 위한 작업, 장소 만들기, 협업과 참여,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경제 지원으로 나누어 접근
 - (쿠리치바) 시민, 기업, 정부 및 학계가 협력하여 웰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성하는 글로벌 및 다문화 도시
 - 7가지 우선순위: 통치, 네트워크 도시, 지식 도시, 운송 및 이동성, 환경과 생물다양성, 건강과 웰빙, 글로벌 도시의 공존

- 경제 부문에서는 산업 부문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인접 지역을 고려한 정책 수립, 문화와 창조산업 육성, 농촌 경제 발전 추구, 지식생산과 벤처에 대한 부분도 고려
 - (시드니) 산업 부문별 실행 계획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경제전략에 대한 새로운 주기 원칙 적용, 경제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
 - 금융 및 전문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및 디지털 산업, 국제 교육, 소매, 관광여행, 녹색경제로 구분하고 공통 테마로 기업인과 중소기업, 환경 지속가능성, 지식과 혁신 설정
 -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화와 포괄성 및 기술 개발을 통한 복원력 강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솔루션으로 전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강조

- 성장과 생산성 및 혁신을 위한 생태계의 성숙, 지역적 우위, 다양한 24시간 경제, 커뮤니티 강화, 문화의 역할 확대와 창의성,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정체성
 - (오타와) 인접 지역을 고려한 다양한 상황에 기반한 고용지역에 대한 신규 정책 개발, 농촌 경제 발전 지원
 - (웰링턴) 소매점의 다양성 확보, 기업의 요구 사항 파악하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방문자 유치 수단으로 문화유산 개발, 창조산업 성장 지원, 창조적 비즈니스 중심의 웰링턴 브랜드화, 저탄소 경제 지원, 예술과 경제 및 청년들의 전략 개발에 협력
 - (쿠리치바) 지식 생산 시민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사회의 창조성 교육, 혁신기술을 위한 공간 구축, 학교-지역사회의 관계 강화, 지식 생산-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맞춘 전문가 양성, 혁신적인 벤처와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환경 조성
- 교통 부문에서는 커뮤니티의 연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 교통량 감소 정책,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 (시드니) 다양하고 연결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 구축
 - (오타와) 2046년까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대부분의 여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 (웰링턴) 교통량 감소 정책, 소비자 접근성 개선, 보행 및 자전거 경로 접근성 제고, 배달로 인한 혼잡 감소 방안,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
 - (쿠리치바) 안전, 유동성, 편안함 및 품질을 제공하는 복합 운송 옵션을 통한 이동성 보장
 - (싱가폴) 개인 차량 제한, 불법주정차 강력한 법적 제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구**

- (시드니)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설정과 녹색 인프라 확충, 강력한 녹색 및 순환 경제 구축
 -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 녹색 경제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교육, 시장 개발에 대한 적극적 접근 방식 개발, 녹색 교통 및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
- (오타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자연 회복력 유지 및 증가, 지표수 자원 보호, 재생에너지 시설이 허용 가능한 토지 사용 지정,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 고려사항 포함, 지역에너지 활성화, 교통 및 기반시설을 통한 배출량 감소
- (웰링턴)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가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워싱턴 DC)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2050년까지 80% 감축
 - 기후변화 대응 계획,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친환경 전기,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배출 차량, 제로 웨이스트, 공공토지에 수목 식재

□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서는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 보육시설 확대, 15분 거리 커뮤니티를 추구**

- (시드니)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과 보육시설 공급 확대
 - 2030년까지 사회주택 비율 7.5% 달성
 - 합리적인 도보 거리에 식품, 보육, 의료, 레저, 사회, 학습, 문화 서비스 제공
- (오타와) 신체적 건강과 지속 가능한 이웃을 증진하기 위해 더 밀집되고 걷기 좋은 15분 거리를 권장, 가족 중심 주택과 1인 가구에 적합한 형태를 포함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혁신적이고 저렴하며 상황에 맞는 주택 형태를 지원
- (웰링턴) 공공의 열린 공간 보호,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 구성이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

□ **문화 부문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징적 시설과 문화 개발, 문화산업과 생태계 조성 지원, 문화유산 자원 보호 추구**

- (시드니) 시드니만의 특색을 충분히 살린 핵심 구역의 상징적인 시설과 성공적인 문화 개발의 조합이 균형
- (오타와) 공공 예술과 문화적 표현, 정체성 및 사회적 연결의 고려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포함, 문화산업과 생태계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 제공,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 보호 및 보존 강화

□ **스마트시티 부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 환경 조성 필요**

- (싱가포르) 2014년 싱가포르에서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네이션 계획 수립
 - 방향: 경제 발전, 도시와 지역의 문제해결, 커뮤니티 강화
 - 핵심 영역: 교통 주거, 환경, 비즈니스 생산성, 건강과활력있는 노화, 공공분야 서비스
 - 세부 전략: 기술개발 촉진, 혁신환경 조성, 디지털 역량 교육
- (시사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기관 통합, 정부 주도 사업 탈피
 - 좁은 국토, 부족한 인적자원,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과 기술 트렌드를 고려한 지속적인 계획 수립
 -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유연한 규제 적용,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 장려, 시민의 관심을 끌수 있는 성공 사례 창출

□ **농업 부문에서 스위스의 경우 직접지불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 (스위스) 2014년 이후 농정의 목표를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문화경관, 조건불리지역 지원 등으로 제시

- 정책수단은 직접지불제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자 지불제를 재조정
- 주요 흐름은 경지면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직불금을 축소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정책목적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식량안보, 경작경관, 생물다양성, 경관 질 제고, 생산시스템, 자원효율성, 전환 분야로 나누어 시행

메가트렌드 분석 및 평가

1절 2030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2절 메가트렌드 평가 및 시사점

4장

4장 메가트렌드 분석 및 전망

1절 2030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 도출 과정

문헌 검토를 통한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 도출

- 2030년의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비 분야의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에 대해 검토

도출된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에 대한 검토와 수정

- 도출된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에 대해 분야별 연구진들이 검토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침

■ 분야별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

사회 분야 메가트렌드

-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이주민 유입
-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 증가, 소득 증가
- 양극화 심화: 자본주의의 한계, 집단적 이기주의,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미흡
- 네트워크 사회: ICT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 강화
- 일부 도시로의 인구 집중: 도시화 진전, 수도권 집중, 지방도시 인구 감소, 메가시티 출현
-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 19 등 감염병, 기후위기 및 재난 위험, 대응 시스템 미비
- 로컬리티 중요성 부각: 세계화에 따른 지역성 약화, 지역 정체성 강조

[표 4-1] 사회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5대 분야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사회 (Society)	인구 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이주민 유입
	라이프 스타일 변화	• 삶의 질 향상 수요·소득증가
	양극화 심화	• 자본주의 한계·집단적 이기주의 • 낙후지역 투자 미흡
	네트워크 사회	• ICT 발달
	일부 도시로의 인구 집중	• 도시화·수도권 집중 • 지방도시 인구감소·메가시티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 기후위기·감염병·대응 시스템 미비
	로컬리티 중요성 부각	• 세계화에 따른 지역성 약화 • 지역의 정체성 강조

□ 기술 분야 메가트렌드

○ 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속화(자율주행,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인공지능, UAM, 에너지 기술, 메타버스,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 전통적 산업과 신기술의 결합
-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 디지털 전환 요구 가속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발생

-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 데이터 활용, 기술 적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표 4-2] 기술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5대 분야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기술 (Technology)	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속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3D프린팅, 인공지능, UAM, 에너지기술, 메타버스,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전통적 산업과 신기술 결합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윤리적 문제

□ 경제 분야 메가트렌드

- ESG 경영: 기후위기에 따른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 증가
- 디지털 경제: 코로나19, 디지털 기술 발전,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가
- 저성장 경제: 기술발전에 따른 성장 둔화, 제조업 분야 성장 둔화
- 신산업 동력: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수요 증가
-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계화의 퇴조, 보호무역 주의
- 산업구조 변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경제활동인구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표 4-3] 경제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5대 분야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경제 (Economy)	ESG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디지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디지털 기술·무형자산 중요성 증가
	저성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발전·제조업 성장 둔화
	신산업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신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의 퇴조·보호 무역주의
	산업구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인력 수요 증가·경제활동인구 변화·소비패턴 변화
	로컬리티 중요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에 따른 지역성 약화 지역의 정체성 강조

□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

-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지구 온난화
- 에너지 위기: 전통적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 변화
- 탄소중립: 기후위기 가속화, 지구 온난화 지연 노력

[표 4-4]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5대 분야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환경 (Ecology)	기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지구 온난화
	에너지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수요 증가 •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 지구 온난화 지연 노력

□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

- 세계질서의 개편: 미·중 간 균형의 변화, 신냉전체제 등장 우려
- 분권 균형: 지방분권요구 증대, 지역균형발전 중요성 증가, 행정수도 완성
- 네트워크 사회: 온라인 정치활동 확대, 정치의 갈등 조정 역할 증대, 커뮤니티 중요성 증가
- 남북간 관계 변화: 한반도 안보 위협, 북한 비핵화

[표 4-5]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5대 분야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정치 (Politics)	세계질서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간 균형의 변화 • 신냉전체제 등장 우려
	분권과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요구 증대 • 지역균형발전 중요성 증가 • 행정수도 완성
	네트워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치활동 확대 • 갈등 조정을 위한 정치의 역할 증대 • 커뮤니티의 중요성 증가
	남북간 관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안보 위협 • 북한 비핵화

2절 메가트렌드 평가 및 시사점

1. 전문가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차: 2022년 8월 1일 ~ 8월 5일
 - 2차: 2022년 8월 10일 ~ 8월 17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조사내용
 - 1차: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과 중요도 평가
 - 2차: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 이슈와 시사점
- 조사대상: 분야별 전문가 20여명

2.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중요도 평가

- 사회 분야 중요도 평가
 - 사회 분야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에 대한 중요도는 네트워크 사회-ICT 발달이 5.7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라이프 스타일 변화-삶의 질 향상 5.5,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감염병 5.5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표 4-6] 사회 분야 중요도 평가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중요도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	4.7
	고령화	4.7
	이주민 유입	4.7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삶의 질 향상	5.5
	소득 증가	4.9
양극화 심화	자본주의 한계	3.9
	집단적 이기주의	4.8
	낙후지역 투자 미흡	5.1
네트워크 사회	ICT 발달	5.7
일부 도시로의 인구 집중	도시화	5.1
	수도권 집중	4.8
	지방도시 인구감소	4.0
	메가시티	4.9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기후위기	5.1
	감염병	5.5
	대응 시스템 미비	5.0
로컬리티중요성 부각	세계화에 따른 지역성 약화	3.4
	지역의 정체성 강조	5.1

□ 기술 분야 중요도 평가

- 기술 분야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에 대한 중요도는 기술발달과 융·복합화 중 스마트시티(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속화)와 디지털 전환이 5.9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인공지능(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속화), 에너지기술(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속화)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표 4-기] 기술 분야 중요도 평가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중요도
기술발달과 융·복합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속화	자율주행	5.3
		스마트시티	5.9
		3D 프린팅	3.9
		인공지능	5.8
		UAM	4.6
		에너지기술	5.7
		메타버스	4.6
		바이오 기술	5.2
		나노기술	4.6
	전통적 산업과 신기술 결합	4.7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5.1	
	디지털 전환	5.9	
	개인정보	5.5	
	윤리적 문제	5.1	

□ 경제 분야 중요도 평가

- 경제 분야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에 대한 중요도는 신산업 동력-미래 신산업 육성이 6.0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디지털 경제-디지털 기술이 5.9, 산업구조 전화-소비패턴 변화와 저성장 경제-기술발전이 5.4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 경제 분야 메가트렌드 중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세계화의 퇴조가 3.8, 보호 무역주의가 3.9로 타 메가트렌드 항목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4-8] 경제 분야 중요도 평가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중요도
ESG경영	기후위기	5.3
디지털 경제	코로나 19	5.2
	디지털 기술	5.9
	무형자산 중요성 증가	4.9
저성장 경제	기술발전	5.4
	제조업 성장 둔화	4.9
신산업동력	미래 신산업육성	6.0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계화의 퇴조	3.8
	보호 무역주의	3.9
산업구조 전환	기술인력 수요증가	5.1
	경제활동인구 변화	5.3
	소비패턴 변화	5.4

□ 환경 분야 중요도 평가

-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에 대한 중요도는 기후위기-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탄소중립-지구온난화 지연 노력이 5.7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변화동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임

[표 4-9] 환경 분야 중요도 평가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중요도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 증가	5.4
	지구 온난화	5.7
에너지 위기	에너지 수요 증가	5.5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5.7
탄소중립	기후위기	5.3
	지구온난화 지연 노력	5.7

□ 정치 분야 중요도 평가

-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 및 변화 동인에 대한 중요도는 분권과 균형-행정 수도 완성이 6.4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분권과 균형-지역 균형발전 중요성 증가가 6.1, 네트워크 사회-커뮤니티의 중요성 증가가 5.9 순으로 높게 평가됨

[표 4-10] 정치 분야 중요도 평가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중요도
세계질서의 개편	미·중 간 균형의 변화	4.6
	신냉전체제 등장 우려	4.2
분권과 균형	지방분권 요구 증대	5.7
	지역균형발전 중요성 증가	6.1
	행정수도 완성	6.4
네트워크 사회	온라인 정치활동 확대	4.8
	갈등 조정을 위한 정치의 역할 증대	4.6
	커뮤니티의 중요성 증가	5.9
남북간 관계 변화	한반도 안보 위협	4.7
	북한 비핵화	4.6

3. 이슈와 시사점 분석

□ 사회 분야 분석

-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중 하나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는 '시민 욕구 충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이 제시되었으며,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시민수요 기반의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아동·청소년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이 제시됨
-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ICT 발달'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는 '비대면 대응 문제', 'ICT 기반 격차', '기술발달에의 적응'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ICT 기반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해소 교육', '기술지원정책' 등이 제시됨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요도 5.5로 평가받은 변화동인 '감염병'에 대한 세종시 대응 이슈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시사점으로 '재난 대응형 공간구조', '감염병 대응 의료보건 인프라'가 제시됨

[표 4-11] 사회 분야 이슈와 시사점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세종시의 대응 이슈 (Issue)	세종시의 시사점 (Implication)
인구 구조의 변화	• 저출산 · 고령화	• 출산율 감소 • 1인 가구 증가 • 농업인력의 고령화 •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	• 청년 정주 여건 조성 • 다양한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 고령인구에 필요한 보건의료 체계 조성 • 농업 신기술의 보급 및 확대 • 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삶의 질 향상	• 시민 욕구 충족 • 아동 ·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 시민수요 기반의 문화 · 체육시설 확충 • 아동 · 청소년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양극화 심화	• 양극화 · 불균형	•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양극화 • 사회 양극화 개선 • 여성 노후 빈곤 • 여성 비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농촌 정주 환경 정비 및 개선 • 농민수당을 통한 농민의 기본권 보장 • 주거복지 강화 • 다양한 일자리 발굴 • 직업훈련방식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네트워크 사회	ICT 발달	• 비대면 대응 문제 • ICT 기반 격차 • 기술발달에의 적응	• 비대면 서비스 개발 • ICT 기반 인프라 구축 • 정보격차해소 교육 • 기술지원정책
일부 도시로의 인구 집중	• 도시화 • 수도권 집중 • 지방 도시 인구감소 • 지방소멸(한계 마을 가속화)	• 미래 먹거리 발굴 • 도시 정체성 제고 • 읍면지역의 과소화	• 세종시 자급기능 강화 • 상징 · 특화요소 도입 • 농촌 청년인구 및 관계인구 유입
새로운 안전 이슈 등장	• 안보 이슈 심화 · 감염병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재난 대응형 공간구조 구축 및 토지이용 재편 • 감염병 대응 의료보건 인프라 구축
식량안보	• 먹거리 및 식량 공급망 타격	•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 품목의 다변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작부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먹거리 강화
SDGs 목표 달성	• SDGs 목표 달성의 가속화 • 지속 가능한 성장	•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의 확대
한류 5.0	• K-콘텐츠 확산과 열풍 • 비대면의 일상화	• 미약한 콘텐츠산업 기반	• 미디어센터 설립을 통한 진흥 노력
로컬리티	• 세계화에 따른 지역성 약화 • 지역의 정체성 강조	• 지역성의 결여에 따른 경관의 획일화	• 문화유산 발굴과 지정 • 지역화 활동 • '한글'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구현 노력 • 금강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생활문화	• 예술의 일상화 • 문화민주주의	• 전문 예술인과 생활예술의 괴리	• 상생형 문화거리 • 생활문화

□ 기술 분야 분석

-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변화 동인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는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필요’,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등이 제시되었으며,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시민중심의 활용’ 등이 제시됨

[표 4-12] 기술 분야 미래 트렌드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세종시의 대응 이슈 (Issue)	세종시의 시사점 (Implication)
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 기술의 융합 • 디지털 전환 • 신기술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 및 효율성 약화 • 읍면지역 낮은 정보화율 •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필요 •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인프라 확충 • 자율주행 특화서비스 개발 • 인공지능-시민중심의 활용 • 농촌 스마트 빌리지 조성 • 스마트팜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특화산업 육성 방안 모색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 윤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이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 경제 분야 분석

- 중요도 5.9로 높은 평가를 받은 변화동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비대면 경제활동 수요 증가’, ‘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 제시되었으며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활동 지원’, ‘디지털플랫폼 기반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제시됨
-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기술발전’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 ‘서비스 기술의 기반조성 미흡’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시사점으로 ‘서비스 기술과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선도형/혁신형 기업 유치’ 등이 제시됨
-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는 ‘신산업 유치’, ‘전략산업 육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특화 산업 발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제시됨

[표 4-13] 경제 분야 미래 트렌드

메가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세종시의 대응 이슈 (Issue)	세종시의 시사점 (Implication)
ESG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천 부족 미세먼지·기후 변화 도시차원의 ESG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메뉴얼/프로그램 개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종합지원정책 수립 및 분야별 지원
디지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디지털 기술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 활성화 및 공실 개선 배달 및 포장 식품소비 증가 온라인 식품 및 농산물 구매 증가 비대면 경제활동 수요 증가 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 검토(상업용지 등) 상가업종 규제 완화 지역공공배달(앱)서비스 유통의 디지털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활동 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저성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발전·제조업 성장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기술의 기반조성 미흡 제조업 중심의 도시발전 한계 제조업 경기침체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서비스 산업 확대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기술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선도형/혁신형 기업 유치 창조산업/문화산업 육성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적극 유치 및 시행 플랫폼 기업 육성 신산업 육성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불안 보호 무역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글로벌 패권주의 국지적 전쟁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VC 변화 대응 방안 마련
신산업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특화 부족 신산업 유치 신산업 전환 요구 증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시스템 구축 세종시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지속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 산업 발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산업구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형 소비·공유경제 기술인력 수요 증가 경제활동인구 변화 소비패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증가 경험과 가치 소비 기술인력 유인 부족 비대면 소비 첨단분야 기술인력 수요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분야별 노동력 공급 격차 온라인 거래에 따른 상업시설 수요 감소 수도권으로 기술인력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대상 지역 먹거리 판매방안 모색 식품기업의 기술혁신 지역거점대학 관련학과 신설 고학력 지식인층에 대한 재교육 및 일자리 매칭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 환경 분야 분석

-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폭염일수 증가’ 등이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 제시되었으며,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대중교통 및 친환경자동차 정책 강화’,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추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등이 제시됨
- 변화동인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는 ‘신재생 에너지원 부족’, ‘에너지 소비도시’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RE100 실천’, ‘세종형 저탄소 에너지자립 도시 구축’ 등이 제시됨
- 변화 동인 ‘지구 온난화 지연 노력’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 각종 활동 요구 확대’ 등이 세종시의 대응 이슈로 제시되었으며,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저감과 지구 온난화 교육 확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나리오 추진’ 등이 세종시의 시사점으로 제시됨

[표 4-14] 환경 분야 미래 트렌드

메가 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세종시의 대응 이슈 (Issue)	세종시의 시사점 (Implication)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 • 환경안보의 중요성 • 환경의 가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의 안정생산 • 자동차 중심 동행 •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부족 • 고유·특산종 멸종위기 가속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 폭염일수 증가 • 지역 간 물분쟁·격차 심화 • 개발 부하 증대 • 생태계 서비스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 및 보급 • 친환경농업의 확대 • 교통 체증 해소 • 대중교통 및 친환경자동차 정책 강화 •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추진 •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 대체 수자원 확보 • 생물종 다양성 확보
에너지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수요 증가 •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 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 증가 • 신재생 에너지원 부족 • 에너지 소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 시민주도의 실천형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 • 발전시설의 그린화 모델 구축 •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전략 마련 •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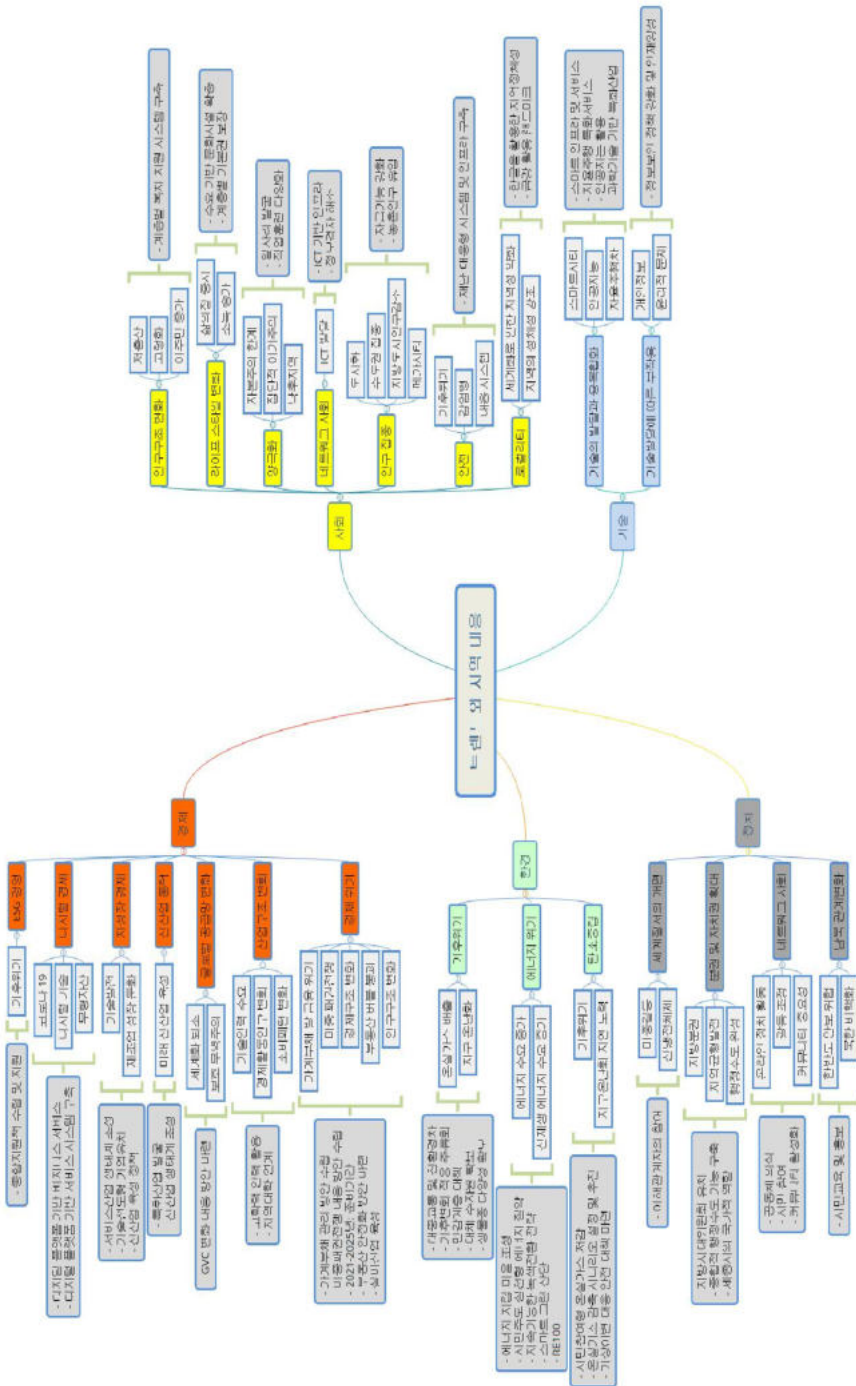
메가 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세종시의 대응 이슈 (Issue)	세종시의 시사점 (Im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형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및 RE100 실천
탄소 중립·탈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지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폭염, 가뭄, 침수, 홍수 등 각종 재난 안전 사고 증가 세종시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 각종 활동 요구 확대 탄소중립 대응 노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중립 대응 정밀농업의 확산 기후위기 대비한 각종 기상이변 대응 안전 대책 마련 및 추진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저감과 지구 온난화 교육 확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나리오 설정 및 추진

□ 정치 분야 분석

-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행정수도 완성’과 그 다음으로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지역균형발전 중요성 증가’에 대한 세종시 대응 이슈로는 ‘행정수도 완성 이슈’, ‘세종시 내 균형발전 요구 증가’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역내 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연계전략 수립’, ‘종합적 행정수도 기능 구축’ 등이 제시됨
-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변화동인 ‘커뮤니티의 중요성 증가’에 대한 세종시 대응 이슈로는 ‘커뮤니티 시설 요구 증대’ 등이 제시되었으며, 세종시의 시사점으로는 ‘공동체 의식 제고’, ‘시민 참여 활동, 제안 정책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의 활성화’ 등이 제시됨

[표 4-15] 정치 분야 미래 트렌드

메가 트렌드 (Megatrend)	변화 동인 (Key Driver)	세종시의 대응 이슈 (Issue)	세종시의 시사점 (Implication)
세계질서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간 균형의 변화 • 신냉전체제 등장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관계자의 참여
분권과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 지역균형발전 • 행정수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수요 증대 • 충청권 및 다른 광역시도와의 관계 • 행정수도 완성 이슈 • 세종시 내 균형발전 요구 증가 •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자립도시 모델 개발 •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 확대 • 역내 균형발전 • 교부세, 균특 등 재원 대책 마련 • 충청권 메가시티 연계전략 수립 • 세종시의 국가적 역할 확립 • 종합적 행정수도 기능 구축 •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세종시 유치
네트워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치활동 • 갈등조정을 위한 정치의 역할 증대 • 커뮤니티의 중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로서 약한 공동체성 • 전자 민주주의 강화방안의 모색 • 도시 회복탄력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역공동체 회복탄력성의 기반 강화 • 커뮤니티 시설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적 커뮤니티 형성 • 공동체 의식 제고 • 시민 참여 활동, 제안 정책 강화 • 집단 지성 활용 정책 • 온라인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구축 •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의 활성화 •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 시민 참여 의식 • 커뮤니티시설 확대 및 활성화
남북간 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안보 위협 • 북한 비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교육 및 홍보



[그림 4-1]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이슈 및 시사점

세종시 분야별 주요 이슈

1절 경제산업

2절 교통

3절 도시계획

4절 환경

5절 지방행정

6절 여성·아동

7절 문화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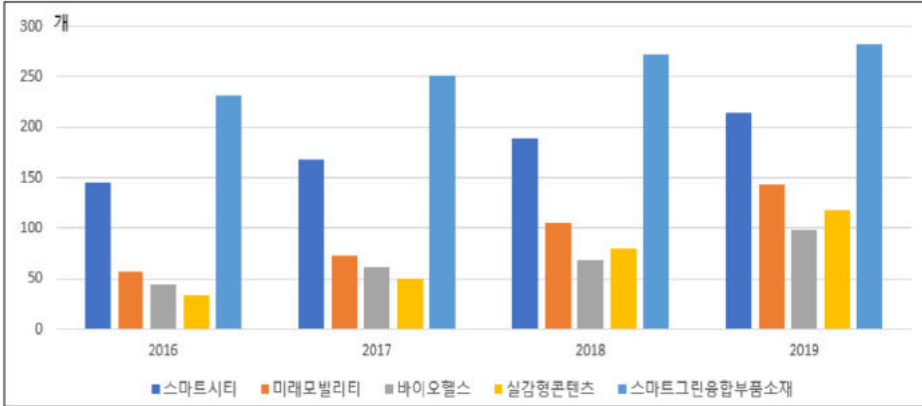
5장 분야별 주요 이슈

1절 경제산업

1.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부족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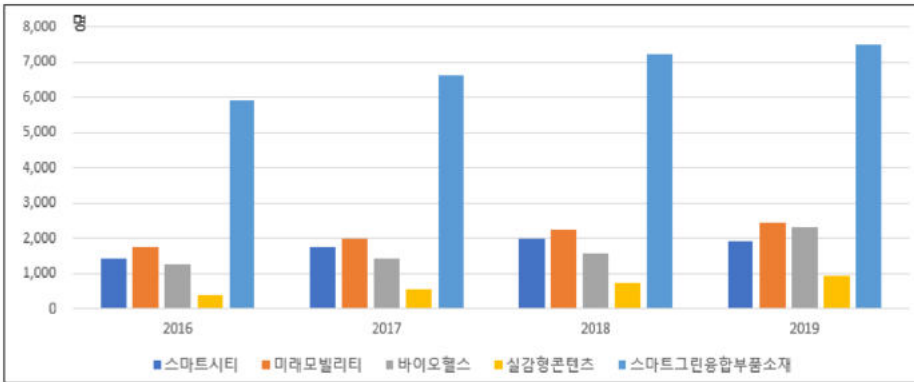
- 세종시의 자족 기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 중
 - 세종시는 2020년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세종시에 특화된 지역산업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산업 고도화를 고려한 주요 산업으로 스마트시티,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를 선정함
 - 2019년 기준 주요 산업 분야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스마트시티 214개 및 1,907명, 미래모빌리티 144개 및 2,439명, 바이오헬스 98개 및 2,338명, 실감형콘텐츠 118개 및 937명,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283개 및 7,483명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요 산업 분야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관련 연평균 증가율은 스마트시티 13.9%(사업체) 및 10.1%(종사자), 미래모빌리티 36.2%(사업체) 및 11.7%(종사자), 바이오헬스 30.6%(사업체) 및 22.8%(종사자), 실감형콘텐츠 52.9%(사업체) 및 32.3%(종사자),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7.0%(사업체) 및 8.1%(종사자)로 나타남



[그림 5-1] 5대 신산업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분류

주 :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자료 내 주요 산업별 산업분류는 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에서 제시된 5대 신산업별 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함



[그림 5-2] 5대 신산업 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분류

주 :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자료 내 주요 산업별 산업분류는 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에서 제시된 5대 신산업별 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함

2) 이슈

- 세종시의 경우 국가 행정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세종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요 산업군을 선정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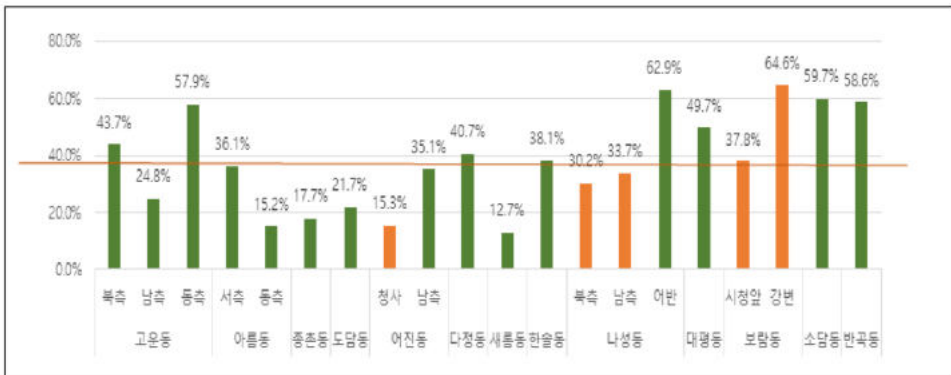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요 산업군별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한계 존재

- 대선 및 지선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 지역산업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방안 마련을 통해 미래전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2. 소상공인 증가와 상권형성 지연에 따른 높은 공실률

1) 현황

- 소상공인의 급속한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높은 공실률
 - 소상공인 사업체수 2012년 5,219개에서 2019년 13,376개, 종사자수 10,213명에서 27,248명으로 증가함.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세종시 전체 사업체의 74%, 종사자의 22%를 차지
 -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카드사 매출데이터 2019년 1조 9,466억원에서 2020년 1조 9,003억원으로 463억원(2.4%) 감소함. 업종별로는 한식 290억원(13.4%), 주유소 136억원(6.0%), 기타 요식업 102억원(10.7%), 학원 89억원(13.3%) 감소
 - 동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2019년 45.1%에서 2020년 37.3%로 7.8%p 감소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공실률은 60% 이상으로 나타남



[그림 5-3] 세종시 동지역 집합상가 공실률(2020년)

출처 : 세종시(2020),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2) 이슈

- 소상공인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원 방안과 관련 예산 확충 필요
- 상가공실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공실률이 높고,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공실로 인한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높아 실질적인 대책을 통한 지원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정수요 증가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 불투명

3. 흥익대-고려대 퓨처밸리(캠퍼스혁신파크조성)

1) 현황

캠퍼스 혁신파크 개요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
-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 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설치
-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지정 현황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 (2차) 경북대, 전남대
- 지원요건
 - 사업부지 면적 최소 1만m² 이상
 -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공동 사업시행 가능
- 평가지표
 -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 가점: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균형발전가점 부여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AI, 모빌리티, 가속기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융복합특화단지 조성
-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2) 이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2생활권에 898천m² 규모의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2023년 까지 추진 중
- 세종시에 추가적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대안(팁스 타운)을 추진하거나 평가지표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1) 현황

(대통령 공약) 세종시에 청년을 위한 글로벌 기술창업자유구역 지정

- 글로벌 기술창업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청년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발휘 되는 기술 플랫폼 지원

(세종시장 당선인 공약)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집적단지 조성

- 기술창업 혁신클러스터
- R&D 혁신단지 및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 청년기술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 기술창업자유구역 지정

□ **(기본 방향) 대학부지 활용 및 주거단지 복합개발을 통한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 기존 개별대학부지(4-2생/85만m²)를 활용하고, 주거단지 복합개발 등을 통한 정부예산 투입 최소화 및 임기 내 성과창출 유도
 - 복합개발: 주택, 교육, 창업, MICE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방식

□ **(이행 방안)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SW중심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 (공공 분야) SW·DATA 관련 기관 신설 및 이전, 국내외 SW관련 학과가 입주하는 'SW 공유캠퍼스' 조성
 - SW 관련 기관: 국가데이터혁신처(신설), 개인정보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지역정보개발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등
- (민간 분야)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한 'SW MICE 타운' 조성, '공공(창업지원)-기업(채용, 주거)-대학(인재)'을 연계한 SW 기업단지 조성
 - SW MICE 타운: 금강 수변 호텔(국회 조망), 국제컨벤션센터, 프리미엄 쇼핑 거리(SW 컨셉의 SW 기업몰, IT 전문관 등 포함)
 - SW 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전한 SW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할 공간 제공, SW 기업 유치와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분양 수익을 캠퍼스 타운 발전에 재투자)
- (소요예산) 총사업비 4조 3,000억원(공공 1,000억, 민간 4조 2,000억)
*행복청 용역 '21.12월

2) 이슈

□ **SW 공공기관 이전 및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한 유인책 필요**

- SW 관련 기관 이전 추진, SW학과 유치, 복합 개발을 위한 유인책을 통한 기업참여 제고 필요

5. 식품산업의 성장과 낮은 부가가치율

1) 현황

- 세종시 식품기업의 성장과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
 - 전국 식품산업 사업체는 2019년 기준 5,797개로 2013년 대비 연평균 3.9%씩 성장하였으며, 세종시의 사업체 수 역시 매년 1.9%의 성장 추세
 - 종사자 수는 전국에 약 23만 명이며, 세종은 2,057명으로 전국의 약 0.9%를 차지
 - 출하액은 약 96조 원으로 2013년 대비 매년 연평균 3.7%씩 성장하였으며, 세종시 역시 매년 2.2%의 성장 추세

[표 5-1] 세종시 식품산업 주요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

구 분		2013	2015	2019	CAGR
사업체	전국	4,616	5,124	5,797	3.9
	세종	34	34	38	1.9
종사자	전국	183,800	205,018	230,039	3.8
	세종	1,763	1,939	2,057	2.6
출하액	전국	77,320,481	83,937,220	96,229,633	3.7
	세종	821,280	990,326	936,941	2.2

주 1) 식음료·음료 제조업(10인 이상) 기준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2013년 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KOSIS), 저자작성

- 세종의 부가가치는 2019년 기준 약 3천억 원 규모로 부가가치는 전국의 약 0.8% 수준임
 - 식품산업 부가가치 = 출하액 - 주요생산비(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연료비의 합계)

[표 5-2] 역내 건설물량 창출 관련 추진사항

(단위: 조원, %)

구 분	2013	2015	2019
전 국	27.4	30.9	35.9
세 종	0.2 (0.7)	0.3 (1.0)	0.3 (0.8)

주 1) 식음료·음료 제조업(10인 이상) 기준

주 2) ()는 비중

자료 : 통계청(KOSIS), 저자작성

2) 이슈

- 식품산업은 양적 규모는 성장하였으나,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율이 낮음
- 건기식, HMR, 대체식품, 메디푸드, 친환경식품 등의 新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장 기반 미흡
- 식품기업의 영세성과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나 수입 유발효과가 적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각화 등 중장기 성장 모멘텀 필요

6. 농가 수의 감소와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증가

1) 현황

세종시 농가 수의 감소와 고령화율의 증가

- 세종시의 농가 수 비중은 2021년 기준 전국의 0.6%인 6,573호로 매년 -0.2%씩 감소하고 있음
- 농가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국의 0.7%인 15,348명으로 매년 -1.9%씩 감소하고 있음

[표 5-3] 세종시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단위: 호, 명, %)

구 분		2013	2015	2020	2021	CAGR
농가	전국	1,142,029	1,088,518	1,035,193	1,031,210	-1.3%
	세종	6,673 (0.6)	6,571 (0.6)	7,163 (0.7)	6,573 (0.6)	-0.2%
농가인구	전국	2,847,435	2,569,387	2,314,064	2,215,498	-3.1%
	세종	17,939 (0.6)	16,335 (0.6)	17,063 (0.7)	15,348 (0.7)	-1.9%

자료 : 통계청(KOSIS), 저자작성

- 세종시의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015년 36.9%에서 2020년 38.6%로 지속적으로 증가

[표 5-4] 세종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단위: 명, %)

구 분		2015	비 중	2020	비 중
전국	전체	2,569,387	38.4	2,314,064	42.3
	65세 이상	987,201		979,967	
세종	전체	16,335	36.9	17,063	38.6
	65세 이상	6,035		6,589	

자료 : 통계청(KOSIS), 저자작성

- 세종시의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21년)은 1.12ha로 전국 평균 1.50ha 보다 낮음

[표 5-5] 세종시 경지면적 현황

(단위: ha)

구분	2013		2015		2021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전국	1,711,436	1.50	1,679,023	1.54	1,546,717	1.50
세종	10,316	1.55	8,260	1.26	7,358	1.12

자료 : 통계청(KOSIS), 저자작성

- 세종시 관행농산물 생산농가를 살펴보면, 논벼가 전체의 45.6%를 차지하며, 과수가 15.6%, 식량작물이 12.0%, 채소·산나물 11.9%를 차지함

[표 5-6] 세종시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2021)

(단위: 호, %)

구분	전체 농가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전국	1,031,210 (100.0)	389,572 (37.8)	99,027 (9.6)	245,287 (23.8)	53,570 (5.2)	171,248 (16.6)	6,996 (0.7)	12,659 (1.2)	4,483 (0.4)	48,369 (4.7)
세종	6,573 (100.0)	2,999 (45.6)	791 (12.0)	782 (11.9)	435 (6.6)	1,028 (15.6)	19 (0.3)	84 (1.3)	36 (0.5)	399 (6.1)

자료 : 통계청(KOSIS), 저자작성

- 세종시의 조치원읍이 2018년 위험지수 0.9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021년 기준 농촌 읍·면 지역은 소멸위험에 진입하였음

[표 5-7] 세종시 연도별 농촌지역 지역소멸지수

구분	2013(A)	2015	2021(B)	$\Delta(C=B-A)$
조치원읍	1.29	1.13	0.69	-0.60
연기면	0.50	0.44	0.43	-0.07
연동면	0.38	0.37	0.19	-0.19
부강면	0.57	0.49	0.32	-0.25
금남면	0.47	0.41	0.27	-0.20
장군면	0.43	0.55	0.44	0.01
연서면	0.42	0.39	0.24	-0.18
전의면	0.42	0.38	0.22	-0.20
전동면	0.28	0.24	0.17	-0.11
소정면	0.50	0.45	0.26	-0.24

주 1) 지역소멸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주 2) 저위험 지역(1.5이상), 정상지역(1.0~1.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위험진입(0.2~0.5미만), 소멸고위험(0.2미만)

자료 : 행안부(2022) 주민등록인구 현황 제구성, 저자작성

2) 이슈

- 농촌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도시 대비 상대적 열위에 있으며, 세종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발생
- 세종시의 농업농촌은 고령농과 영세소농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영세소농의 비중이 전국 평균 53%보다 높은 65% 수준('2018년)이며, 농가와 농가인구 비중의 지속적 감소와 논벼를 중심으로 한 영농형태의 비중이 높아 품목의 다변화가 요구됨
- 세종시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가의 역량강화 및 고도화가 필요
-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21.12)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이 요구됨

7. 도농간 소득격차의 증가와 농민수당의 확산

1) 현황

-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

[표 5-8]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	53,187	-	(72,360)*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전년 대비 농가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 경기, 강원, 경북, 제주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표 5-9]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 산	부 채
	2020	2021	증감률			
평 균	45,029	47,759	6.1	35,500	585,676	36,592
경 기	52,054	53,784	3.3	42,115	917,769	57,313
강 원	44,381	48,525	9.3	36,259	533,016	32,893
충 북	43,062	45,588	5.9	34,049	510,782	17,257
충 남	45,643	47,642	4.4	32,693	557,128	23,801
전 북	44,284	47,459	7.2	32,689	400,019	35,942
전 남	43,678	47,228	8.1	33,161	407,209	26,885
경 북	44,666	47,962	7.4	31,739	457,359	30,584
경 남	40,557	44,208	9.0	34,028	529,937	27,064
제 주	49,123	52,586	7.0	44,101	1,005,740	99,996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농민수당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최초(2019.06.26)로 시행하여 모든 9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천시와 울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22년 기준 광역도별로 공표된 농민수당 지원계획은 아래와 같음

[표 5-10] 광역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시도	사업명 (조례 제정)	시작 연도	부담 비율	'22 예산 (억원)	지급대상	인원 (천명)	신청 (검증)	지급액/년 (지급시기)	주민등록
경기	농민기본소득 (‘21.5)	2021	5:5	1.560	농업인 (개인별)	245	3~4월 (4~5월)	60만원 (분기별 15만원)	3년 이상 비연속 10년

시도	사업명 (조례 제정)	시작 연도	부담 비율	'22 예산 (억원)	지급대상	인원 (천명)	신청 (검증)	지급액/년 (지급시기)	주민등록
강원	농어업인수당 ('20.3)	2021	6:4	583	농어가	83	4~5월 (6~7월)	70만원 (8월~)	2년 이상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20.9)	2022	4:6	544	농가	109	2~4월 (5~8월)	50만원 (9월~)	3년 이상
충남	농어민 수당 ('20.2)	2020	4:6	1,448	농어업인 (개인별)	250	4~5월 (6~7월)	45~80만원 (8월~)	1년 이상
전북	농업농촌공익 적가치 지원사업 ('19.10)	2020	4:6	698	농가	119	2~5월 (6~8월)	60만원 (9월~)	2년 이상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19.10)	2020	4:6	1,273	농어가	258	1~2월 (2~3월)	60만원 (3~4월)	1년 이상
경북	농어민 수당 ('21.1)	2022	4:6	1,388	농어가	231	1~2월 (3~4월)	60만원 (5월, 9월)	1년 이상
경남	농어업인 수당 ('20.6)	2022	4:6	820	농어가 외 (부부 개인별)	273	2월 (3~5월)	30만원 (6월~)	1년 이상
제주	농민 수당 ('20.7)	2022	전액도비	224	농업인 (개인별)	56	3~5월 (5~6월)	40만원 (6월~)	3년 이상

자료: 지역별(도별) 농민수당 시행지침

2) 이슈

- 농민수당은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보편적 기본수당으로서 확산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 가속화로 인하여 농업은 빠르게 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 선진국과 달리 국내 농업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빠르게 농가경제와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있음
-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은 농민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및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세종시 농민수당'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8.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푸드플랜의 확대 필요

1) 현황

- 세종의 공공급식 규모는 연 644억 원 규모로 추정, 이 중 학교급식 291억원, 공공기관 급식 20억원, 기업 급식 318억원, 어린이집 급식 16억원을 차지

[표 5-11] 세종 공공급식 규모 추정('19)

(단위 : 명, 일, 원/식, 백만원)

구 분	세 목	인원(명)	일수	단가(원/식)	금액(백만원)	
세 종 시	학교급식	유치원	6,541	190	2,000	2,486
		초등학교	27,892	190	2,500	13,249
		중학교	11,202	190	3,300	7,024
		고등학교	9,475	190	3,500	6,301
		소 계	55,110	190	2,845	29,059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	1,906	250	3,500	1,668
		지자체 산하공공기관	303	250	3,500	265
		소 계	2,209	250	3,500	1,933
	사업체	100인 이상 사업체	36,305	250	3,500	31,767
		소 계	36,305	250	3,500	31,767
	복지급식	어린이집	3,197	250	2,000	1,599
		소 계	3,197	250	3,500	1,599
	총 계		96,821			64,357

주. 공공기관 지자체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어린이집 보육통계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이용 작성

- 세종의 직거래 매장은 총 24개로 나타나며, 2015년 농업회사법인(주) 세종로컬푸드가 도담동에 개설하였음
- 이후 다른 조합 및 민간업체에서 2곳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

[표 5-12] 세종 운영형태별 직거래 현황

(단위 : 개)

지 역	지역구	김장 특판장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매장
세종시	2	1	4	17	24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정보, 농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 세종의 경우, 18년 기준 정곡은 22,058톤, 잡곡은 80톤, 채소(과채류) 9,192톤, 채소(엽채류) 4,382톤, 채소(조미채소) 4,547톤, 과일 8,439톤으로 조사
- 이중 채소(과채류, 3.81%)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의 경우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그중 잡곡은 -12.64%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5-13] 세종 농가 생산 현황

(단위: 톤, %)

구 분	'16	'17	'18	CAGR
정 곡	24,727	22,355	22,058	-3.74%
잡 곡	120	76	80	-12.64%
채소 (과채류)	8,216	10,786	9,192	3.81%
채소 (엽채류)	5,402	4,227	4,382	-6.74%
채소 (조미채소)	5,048	3,113	4,547	-3.42%
과 실	10,019	11,670	8,439	-5.5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전체 농산물 자급률은 65.8%이며, 세부적으로는 과실류(85.9%), 곡류(70.2%), 채소류(55.5%) 순임
- 세종시의 인구는 '12년 이래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급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

[표 5-14] 세종 자급률 현황

(단위: 천톤, %)

지역	필요량				공급량				자급률			
	곡류	채소류	과실류	전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전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전체
세종시	31.5	32.6	9.8	74.0	22.1	18.1	8.4	48.7	70.2	55.5	85.9	65.8

주 1. 곡류는 정곡과 잡곡을 채소류는 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를 합한 값임

2. 필요량 = 인구수 x 연간 1인당 식품별 수급량(곡류: 137.7kg, 채소류: 142.5kg, 과실류: 42.9kg),
자급률 = 공급량/필요량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 통계청, 농어업조사, 농촌경제연구원(2017) 식품수급표

2) 이슈

-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
 - '14년 '건강한 시민, 행복한 농민, 함께하는 세종시'를 슬로건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비전 선포식'을 수립하여 로컬푸드 전담TF를 구성하였고 이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 2015년 6월 민관 출자법인인 세종로컬푸드(주)를 출범
-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사업모델을 위해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의 다양성, 소비자의 편리성 고려 필요
- 지역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강화와 먹거리 돌봄으로써의 확대 방안 필요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 필요

1) 현황

- 농촌융복합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경영체의 영세성과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과제 대두
- 신규 경영체 발굴·육성 및 기존 경영체를 위한 지원 필요
- 농촌 융복합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촌융복합 산업 규모 확대 필요

- 국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는 21년 2.8조원 규모로 25년까지 4.5조 원으로 확대 할 계획 임
 - 매출액 5억 원 이상 인증업체 비율을 21년 45%에서 25년까지 60%까지 확대
- 네트워크·산업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내 농촌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지역자원 활용, 사업간 연계 등 보완 필요



[그림 5-4]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체계

- 잠재력 있는 신규자원과 융복합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적화된 산업공간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등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2) 이슈

- 세종시 지역자원을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 필요
 - 농촌의 일자리 창출, 계약재배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체험·관광 등 3차산업 중심 경영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 제품 생산을 위한 R&D 지원사업 확대
-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판로 정비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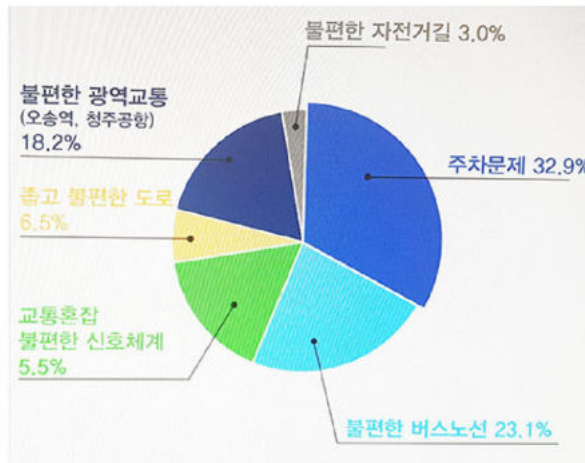
2절 교통

1. 심각한 주차 문제

1) 현황

□ '주차 지옥'이라 불리는 동지역의 부족한 주차 문제

-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대중교통 중심 지향 도시로 설계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됨
-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및 정책 방향 전문가 심포지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주차문제가 32.9%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종시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함¹⁾



[그림 5-5]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및 정책 방향 전문가 심포지움 (2018.11.20.)

1) 세종 포스트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35>

2) 이슈

- 지하 주차장의 주차 시설 부족
- 공영 주차장 안내 시스템 부족 및 적정 위치 공영 주차장 설치 필요
- 주차 단속 시스템 부족

2. 불편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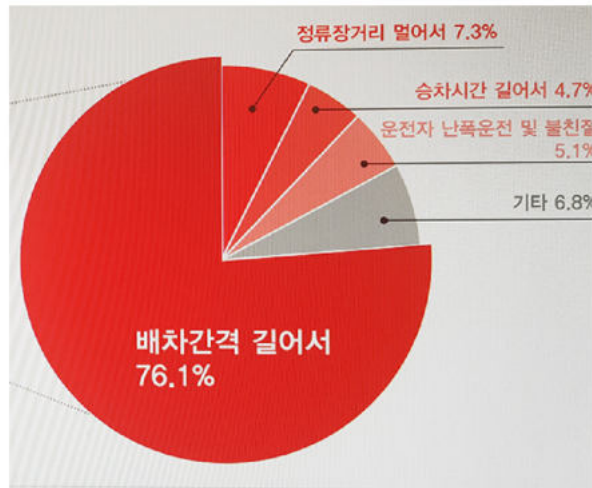
1) 현황

불편한 대중교통

-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도로 차선수가 적으며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폭이 넓게 설계되었음
- 비록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계획되고 설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2018 국가 통계²⁾에 의하면 세종시의 버스 분담률은 10%로서 타 지자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세종시 교통수단 분담률: 승용차 44%, 버스 10%, 자전거 0.8%, 도보 40%
 - 타지자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서울 47%, 부산 31%, 대전 18%
- 20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³⁾에 의하면 세종시민 중 일반 버스/마을버스 이용자는 35.2%였고, 이용 만족도는 「보통」 33.6%, 「만족」 33.2%, 「불만족」 33.2% 순임
- 세종의 소리 자료에 의하면, 분만족 이유로, 「배차간격 김」이 76.1%로 가장 높았으며, 「정류소까지 거리가 멀», 「운전기사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기간 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세종시 시민감동과제 <10호과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https://www.sejong.go.kr/bbs/R3305/list.do>

3) 20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조



[그림 5-6] 대중교통 만족도 불만 요인

자료: 세종의 소리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1>

2) 이슈

- 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 부족
- 대중교통 통행 패턴 분석 필요
- 버스 노선 설계 및 버스 배차 간격 조정 필요

3.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1) 현황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높지만 인프라 접근성은 낮음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25년 연간 신차판매의 50%, '30년 8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추진중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4조(세부 시행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세종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21년 기준 1.1%로 전국 평균치와 보급 목표 초과 달성함
- 2022년 5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에 의하면, 총 2,516대의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 제외)가 등록됨

[표 5-15] 2022년 5월 자동차 등록자료

	비사업용	사용용	계
전기	2,142	165	2,307
수소	209	-	209
총 계	22,151	165	2,516

- 2022년 세종시, 전기·수소차 등 1,010대 보급을 목표로 전년 대비 50% 확대 계획 있음
- 그러나 전기차 충전 시설 접근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짐
 - 서울: 0.92km; 제주: 1.01km; 광주: 1.60km; 대구: 1.78km; 인천: 1.94km; 부산: 1.96km; 대전: 2.39km; 경기(2.77km); 울산: 2.89km; 세종: 3.59km
- 2022년 현재 전체 전기차 충전소 1,131개소, 수소 충전소 2개소 존재



[그림 5-7]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안내

2) 이슈

-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건설 확대 필요
- 단순 충전 인프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필요
- 친환경차 이용자에 대한 통행 패턴 분석 필요

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확대와 지속성 확보 문제

1) 현황

읍면지역 '두루타' 활성화, 동지역 '셔클' 도입

- 세종시는 대중교통취약지역인 읍면지역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⁴⁾으로 2014년부터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2019년은 세종형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가 장군면에서 시범 도입·운영되어 2021년 세종시 읍·면 전 지역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함

동지역 '셔클' 도입

- 2021년 동지역에서도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법」 관련 실증 특례⁵⁾를 허용함에 따라 도심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셔클'이 도입됨

4) 기존 대중교통수단이 지닌 시·공간적 문제(고정 운행시간, 고정노선)를 보완하고자 사용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말함

5) 2020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법」 실증 특례를 적용 받아 세종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



[그림 5-8]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2) 이슈

-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이동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두루타'는 시범도입 후, 읍면지역 전역에 확대되어 운행 중임
 - : 두루타 서비스의 고도화 및 경제적 지속성 확보와 교통취약지역에서 연관된 민원해결이 이슈
- 동지역의 '셔클'은 도입시 1생활권만 운행하였으며, 권역 확대와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성 확보 문제가 있음
 - : 운수사업자(택시업계) 갈등, 실증특례기간이후의 지속성(규제), 경제성(지방비 투입규모)

5. 자율주행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방안 필요

1) 현황

□ 자율주행서비스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세종시는 자율주행 관련하여 자율차 서비스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국토부) 등 다양한 범부처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산업과 자율주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중부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세종시는 모빌리티 분야를 중점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5-9]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운영 현황

2)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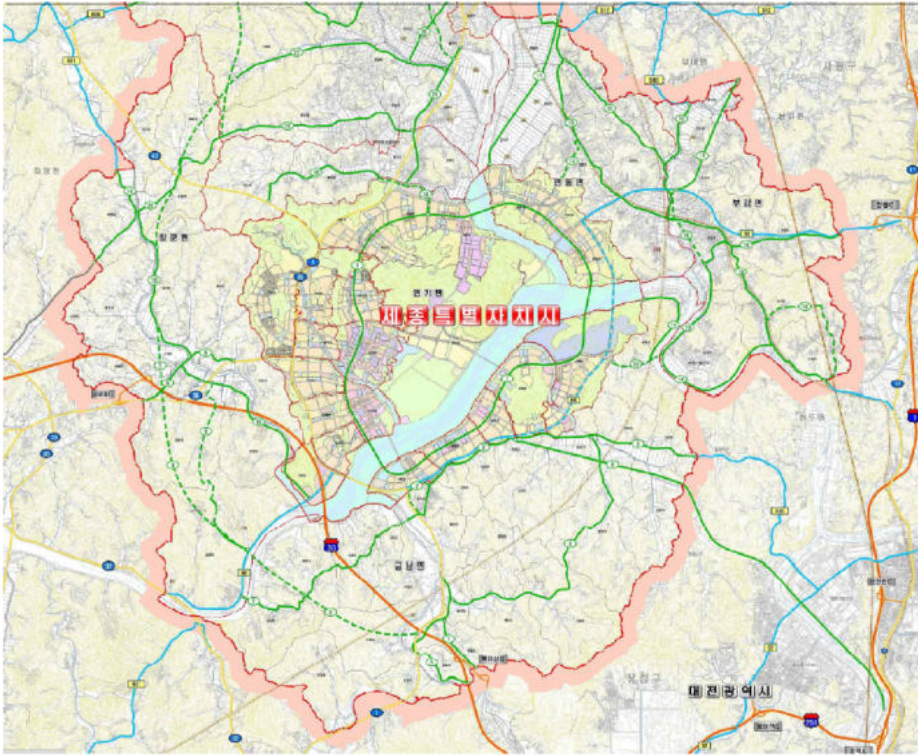
- 세종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기업들도 세종시에 집적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원에서 지원정책(인센티브 등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약함

- 현재 자율주행업체들은 자율주행운영으로는 수입구조가 나오지 않음
: 따라서 국가R&D과제사업 또는 민간기업 자체 투입 예산으로 운영 중임
- 자율주행서비스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
: 관련 조례 제정, 기술발전지원금 지원 등 ('서울시 자율주행비전2030' 사례 참조 : 서울시 적극적 진행중)

6. 광역도로

1) 현황

- 세종시 광역도로망은 고속도로 1개(당진영덕고속도로)와 국도 2개(1호선, 36호선), 지방도 1개(96호선) 그리고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세종고속도로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대전-세종 등 일부 축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세종시 인구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5-10] 세종시 광역도로망 현황

자료 : 세종시(2020),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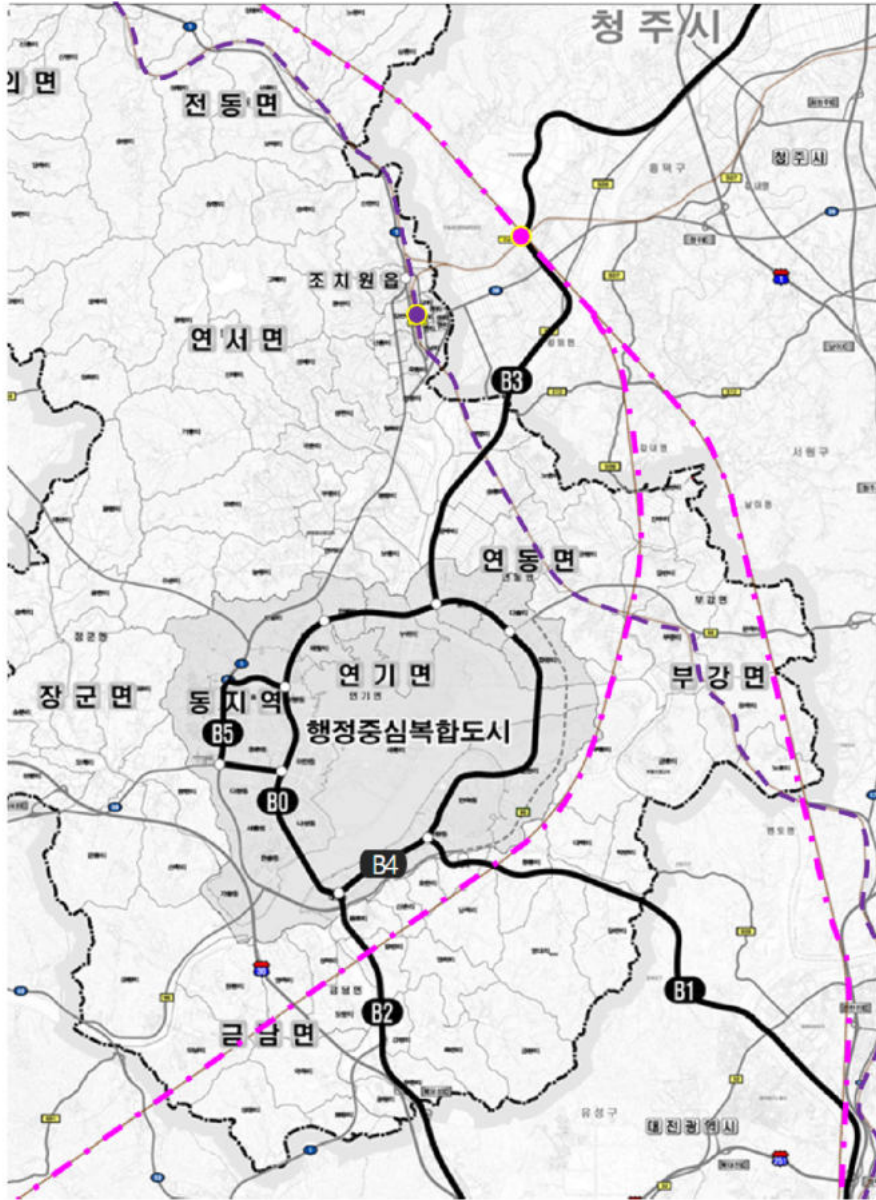
2) 이슈

- 2006년부터 전국을 2시간대에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9개 노선(75.04km)의 광역도로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9개 노선(43.52km)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달성함
-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양호한 광역도로망을 건설하였으나,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대전, 청주, 세종 등 일부 도시와의 교통 혼잡이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내부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광역도로망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세종고속도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개통되지 않아 불편한 측면이 있으며, 서해안 지역과의 고속도로망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7. 광역대중교통

1) 현황

- 세종시 광역대중교통수단은 철도와 광역BRT가 기능 담당
- 철도는 경부선(조치원역)이 있으며, 고속철도(경부 및 호남)는 청주 오송역을 이용하고 있음
- 광역BRT는 대전, 오송을 연결하는 B1, B2, B4 노선과 청주를 연결하는 B3 노선이 있음
 - B1: 오송~세종(정부청사)~대전역
 - B2: 오송~세종(정부청사)~대전(반석)
 - B3: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
 - B4: 오송~세종(국책연구단지)~대전(반석)



[그림 5-11] 세종시 광역대중교통체계 현황

2) 이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부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인프라를 조성함

- 대전을 연결하는 광역BRT B1, B2 노선과 청주를 연결하는 B3 노선, 그리고 내부 순환 도시BRT도로를 건설하는 등 일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광역철도 등 철도교통수단은 전무하여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 관문공항으로 청주공항을 이용하 있으나,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이 많지 않고, 접근성이 다소 미흡한 문제가 있음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세종시 내부에 없어 오송역을 이용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8. 도시교통

1) 현황

- 세종시는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7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분담률(버스 및 철도)은 12.8%에 불과한 실정으로 승용차 위주의 교통분담구조를 가지고 있음

[표 5-16] 세종시 교통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2019년 기준)

구분	전체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통행량 (통행)	576,218	425,349	72,757	1,202	29,385	29,295	18,230
분담률 (%)	100.0	73.8	12.6	0.2	5.1	5.1	3.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21), 2020 국가교통통계(국내편)

2) 이슈

- 세종시는 계획 당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지향하여 도로와 주차장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지 않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중교통 분담률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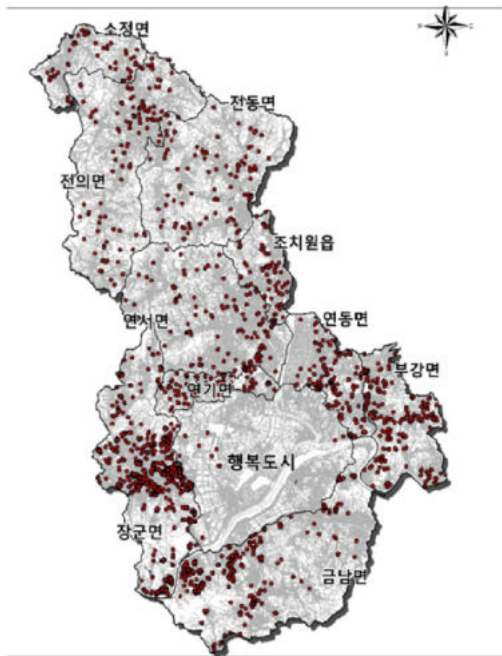
3절 도시계획

1. 비도시지역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계획적 개발·관리 필요

1) 현황

□ 민간의 개발수요 증가

- 2012년~2021년 세종시 개발행위허가는 총 5,095건으로, 장군면 등 행복도시와 인접한 면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됨
-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계획관리 비중 감소(61.6% → 33.2%), 보전관리 비중 증가(20.1% → 50.0%)



[그림 5-12]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분포(2012~2021년)



[그림 5-13]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추이와 읍면별 비교(2012~2021년)

- 기존 비도시지역의 개발이 소규모·개별 건축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행복도시 건설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민간개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규모 사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2) 이슈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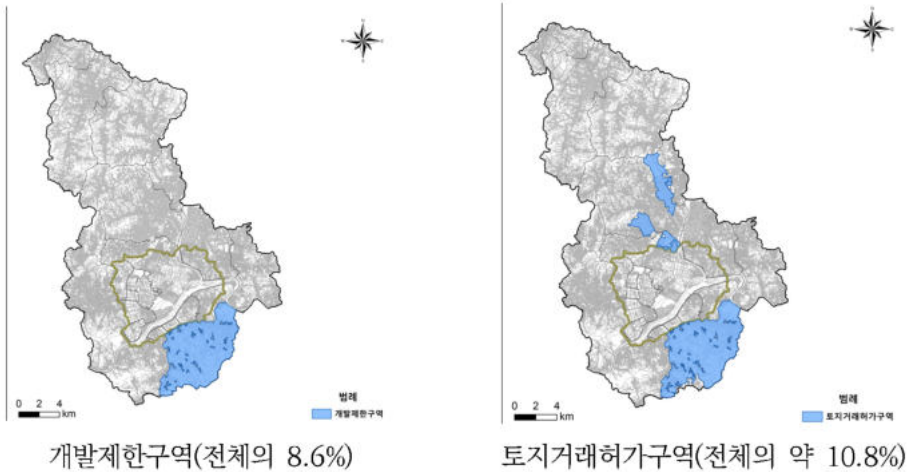
- 행복도시 주변 면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제어·관리토록 하는 관리전략이 필요함
-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변과의 조화,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전략이 필요함: 전략적 주택 공급 + 민간 난개발 방지 + 건전한 세종시 개발 유도

2. 투기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비책 필요

1) 현황

부동산 급등 경험

- 2021년까지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가 상승지역으로 활발한 토지 거래와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경험한 바 있음(외지인 토지소유면적 비중 전국 최고)
- 2022년에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다소 소강상태로 일부 개발관련 규제가 해제되고 있으나,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등 세종시 숙원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수의 부동산 이슈를 보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함



[그림 5-14] 세종시 구역지정 현황

2) 이슈

투기적 토지거래 대비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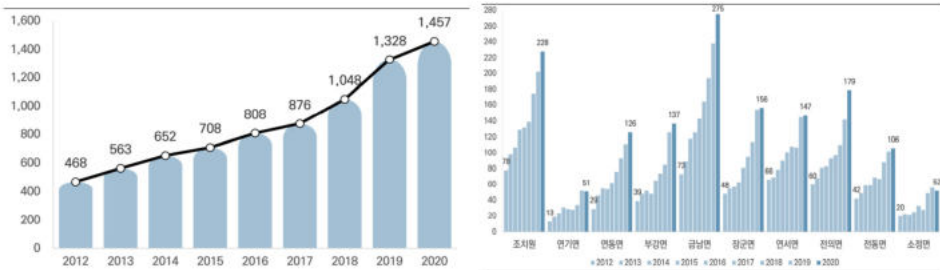
- 토지·부동산거래 관리전략: 토지거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토록 하는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함(세종시 자체 매뉴얼_가이드라인)

3. 읍면지역 빈집 및 노후건축물 증가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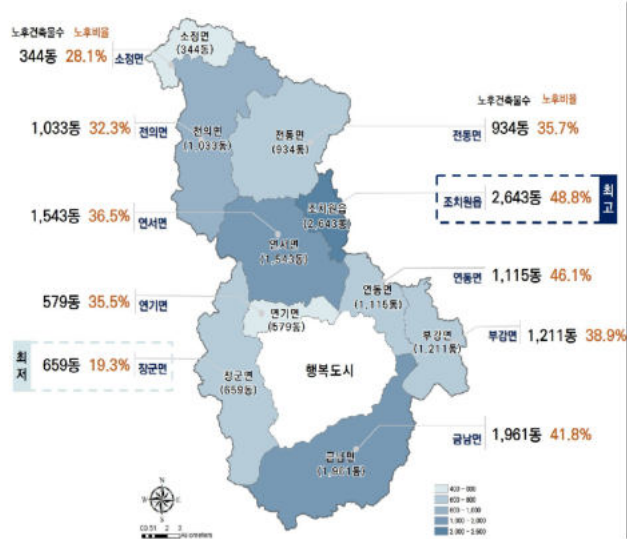
□ 읍면지역 빈집 및 노후건축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효율 야기

- 세종시 빈집은(1년 동안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순수 주거용으로 추정) 2020년 기준 약 1,457호로 추정되었으며 2012년 468호 대비 약 211.3% 증가함
- 2022년 세종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종시 읍면지역의 빈집은 647호로 나타남.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하지만, 빈집이 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주거용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추정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종시 빈집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10개 읍면지역에서 빈집은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주거용 계약호수를 기준으로 주거용 빈집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주거용 계약호수 20,900호 중 7.0%가 빈집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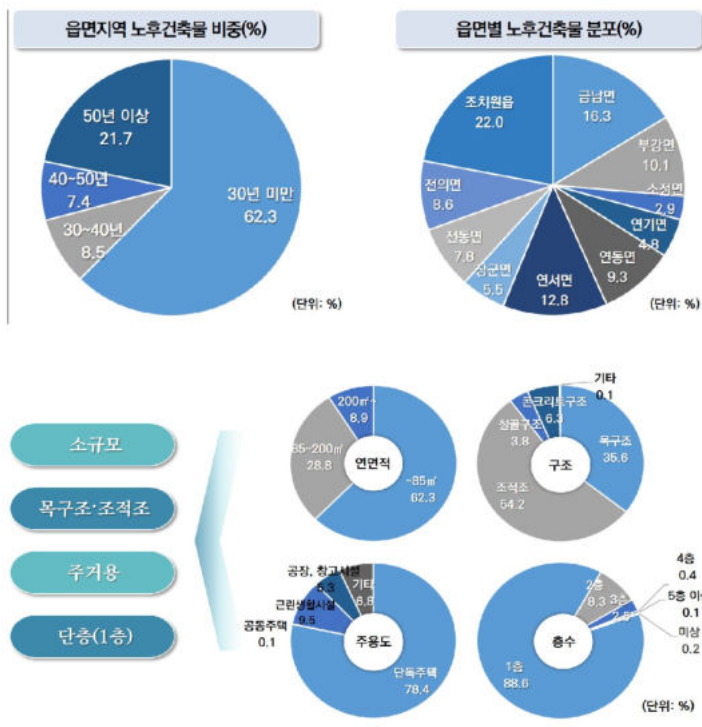


[그림 5-15] 읍·면 지역 빈집 추이

- 건축물 중 37.6%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며, 50년 이상은 21.7%를 차지함. 특히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적절한 안전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5-16] 읍·면 지역 노후건축물 비율



[그림 5-17] 읍·면 지역 유형별 노후건축물

2) 이슈

-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 도시재생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지원 확대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및 농촌의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 확대
-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활용 활성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및 정비 사업 필요

4. 행복도시 공간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대응 필요

1) 현황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유관기관 수요에 대응

-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회 입법기능과 연결된 출판·인쇄 및 컨벤션 관련업체, 연구기관, 언론사(방송사)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의 유입뿐 아니라 대학, 기업 등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종시로 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언론사(방송사)는 17개로,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협약기관의 일부는 본사를 이전하거나 제2본사에 준하는 주요 기능을 이전하며, 이에 따른 출판, 인쇄, 전시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행복도시 내 조성된 오픈스페이스 간 단절

- 환상형으로 계획된 행복도시 내 중앙부 금강 변에 시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주요 녹지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시설: 세종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국회세종의사당, 금남교, 어반아트리움, 전월산·원수산 등
 - 오픈스페이스와 주변의 주요 시설을 세종시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세종시로의 도시계획 및 일부 관리 권한 이관에 따른 부담 가중화

- 2021년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일부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 등의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세종시의 조직대응 역량,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행정수도 완성,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간·경관·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증가하면서 도시 관문경관, 가로(환경), 공공시설물 디자인, 색채, 간판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2) 이슈

- 세종시의 도시관리 역량 강화와 행복청과의 유기적 관계 정립을 위해 효율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수도 완성,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공간·경관·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증가에 따라 도시 관문경관 개선, 주요 가로, 건축물(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함

4절 환경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1)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 증가방지·배출시설의 비정상가동 등 위반사업장 증가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14년 제외)를 나타냈으나 '17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 관리 필요(세종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 대비 0.51% 수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5년 대비 2018년 3.5%가 증가하였으며, 위반사업장 비율은 9.0%에서 14.8%로 증가함

[표 5-1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4	310	12	8	11	66	213
2015	324	16	10	11	74	213
2016	335	15	10	11	78	221
2017	329	15	11	10	78	215
2018	366	14	12	9	86	245
2019	314	14	13	10	82	195
증가율	0.63	4.08	10.48	-1.60	4.63	-1.08

자료 : 세종시 내부자료(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연평균 대기오염도는 초미세먼지를 제외하고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

[표 5-18] 대기질 현황

구 분	이산화질소 NO2 (ppm)	이황산가스 SO2 (ppm)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일산화탄소 CO (ppm/8h)	오존 O3 (ppm/8h)
환경기준	0.03 이하	0.02 이하	50 이하	15 이하	9 이하	0.06 이하
2016	0.022	0.004	45.9	23.1	0.6	0.028
2017	0.020	0.003	46.8	22.8	0.5	0.029
2018	0.018	0.003	40.2	21.3	0.5	0.027
2019	0.019	0.003	43.9	25.9	0.5	0.028

자료 :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2) 이슈

-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현상이 증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에 대한 지속적 증가 예상
- 세종시는 기상·기후학적,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대기가 정체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대책이 요구됨
-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민감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최소화 대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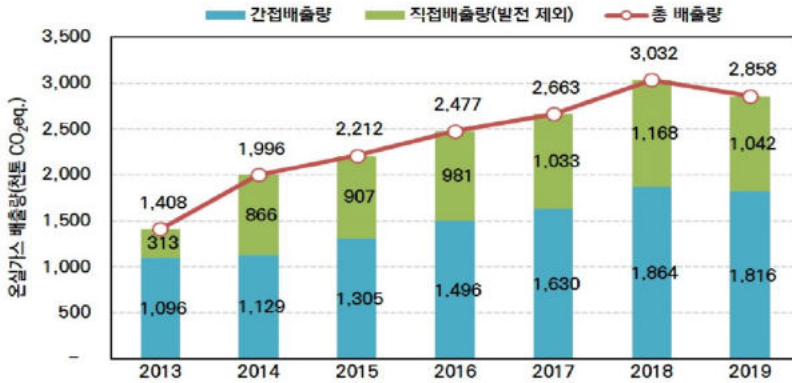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필요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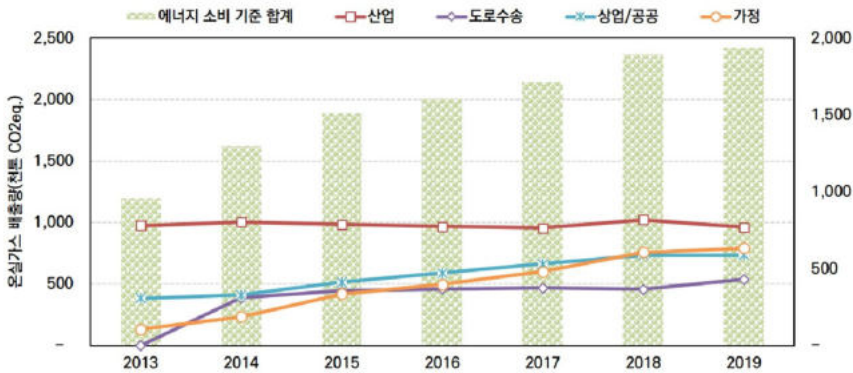
도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 인구증가와 함께 에너지 소비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19년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건물, 수송, 산업 등 분야의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발생량의 경우 지속 증가함

- 에너지소비 기준 건물 부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 수준이며, 도로 수송 7.2%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5-18]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그림 5-19] 에너지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최근 5년간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5.2%의 증가추세로 '19년 기준 부문별 소비현황은 가정·상업, 산업, 수송, 공공·기타 부문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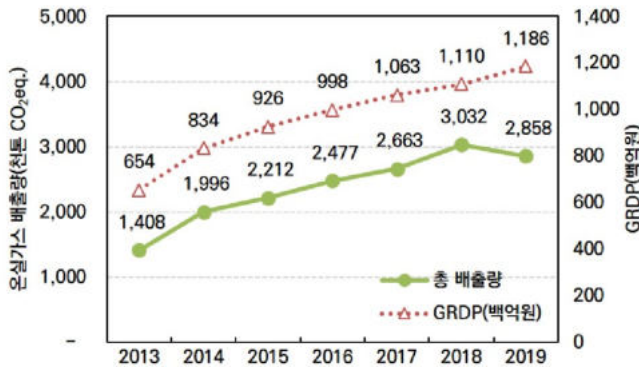
[표 5-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천TOE, %)

구분	합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전국	231,353	142,903	61.8	42,975	18.6	40,088	17.3	5,388	2.3	
세종시	2015	549	249	45.3	120	21.9	142	25.8	38	7.0
	2016	594	259	43.7	125	21.0	169	28.4	41	6.9
	2017	608	222	36.5	129	21.2	191	31.4	66	10.9
	2018	645	230	35.6	127	19.7	233	36.1	55	8.5
	2019	669	228	34.0	186	27.8	236	35.2	20	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2020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 세종시는 2013년 대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15% 증가, GRDP는 70%가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20]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GRDP 추이

2) 이슈

- 2050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이자 경제·사회 전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지역의 역할이 중요
-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3. 하천생태 환경 및 수질오염 문제

1) 현황

- 국가하천(금강, 미호천) 및 지류하천(조천, 용포천 등) 수질오염과 악취·해충에 따른 시민건강 위협
 - 미호천의 경우 금강의 중권역에 위치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환경부 수질 목표 미달지역에 해당하며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에 해당함
 - 「금강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에서 다루는 지류하천 중 미호천은 논산천과 함께 물환경 목표기준 미달성 하천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중권역으로 분류됨
 - 미호천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질 목표기준은 BOD 3.0 이하, T-P 0.10 이하, 수생태계(어류) 건강성은 C등급에 해당함
 -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 기준등급 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1년 평균 수질 기준 T-P의 경우 목표등급을 달성하였으나, BOD 및 수생태계 건강성 목표기준은 달성하지 못함

[표 5-20] 미호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달성 여부

중권역	중권역 대표지점	항목	'17	'18	'19	'20	'21	5년 평균
미호천	미호천10	BOD	4.8	5.1	4.9	3.9	4.1	4.6
		T-P	0.155	0.159	0.132	0.098	0.089	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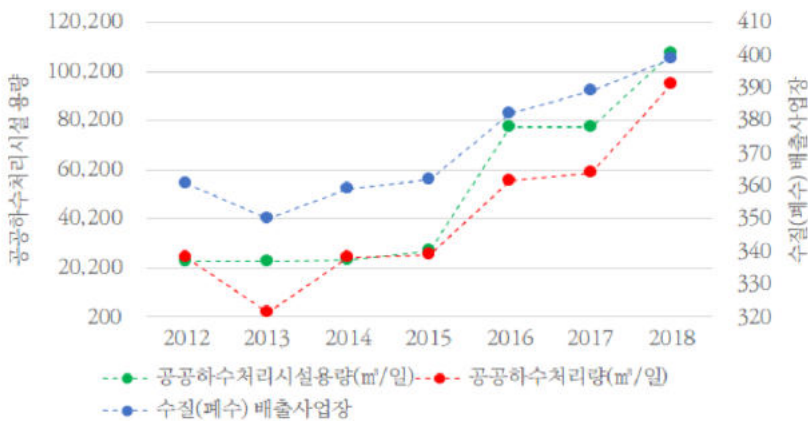
[표 5-21] 미호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달성 여부

중권역	중권역 대표지점	항목	'17	'18	'19	'20	'21
미호천	조천1-2	어류	D	D	C	C	D

[표 5-22] 세종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 수질

단위구역	면적(km ² %)	목표수질(mg/L)		해당지역(읍면동)
		BOD	T-P	
5개 구역	442.9	-	-	-
금본G	2.433(0.55)	2.2	0.062	부강면(등곡리, 노호리)
미호B	2.845(0.64)	4.0	0.089	조치원읍(변암리일부), 연동면(노송리, 예양리)
미호C	217.822(49.18)	4.3	0.098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고등리일부)
금본H	219.410(49.54)	2.9	0.083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동지역
금본I	0.395(0.09)	2.9	0.082	장군면(하봉리일부)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07,750(m³/일)로 94,933(m³/일)의 처리량 대비 88%이며(처리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의 증가율이 높은 상황), 폐수 배출사업장은 399개소가 운영 중임('18년 기준)
-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 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하천수질 오염 및 악취·해충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폐수 배출사업장의 증가로 늘어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



[그림 5-21] 세종시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및 폐수 배출사업장 현황 (2012-2018)

2) 이슈

- 금강수계 본류의 중하류 부에서는 세종보, 공주보 및 백제보가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 전반의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세종시 국가하천 구간의 수질·수생태 관리·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조천, 용포천 등 지류하천에 대한 반복적인 수질오염 문제 및 악취·해충 관련 대책의 수립 필요
- 초기우수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필요, 정밀조사 후 시설 계량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조천을 비롯한 미호천 하류권역의 경우 최근 5년간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수면적을 줄이기 위한 저영향개발 사업의 시행 및 비점 오염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대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

4. 물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유역 물순환 목표 설정 필요

1) 현황

- 개발 이전 대비 불투수율을 포함한 물순환 자료가 전무, 개발 과정에 따른 물수지 변화량 추적 필요
- 세종시는 최근 10년간 개발 중심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시민 생활여건은 크게 증진되었으나,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체계가 크게 왜곡되어 수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 통상적으로 불투수면적율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물순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평균 불투수면적율은 전국 7.9%, 세종시는 12.41%로 나타났음(불투수면적율 25% 이상인 지역은 세부적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필요)
- 세종시 불투수면적율의 경우 2013년도(12.41%) 이후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 없으며, 기존의 단순 배출 및 구조적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표 5-23] 지자체별 물순환계획의 기본방침

기본방침 요소	세 부 내 용	물순환 회복 목표
침수피해가 적은 안전한 지역조성	치수시설의 정비촉진	불투수면의 감소, 홍수피해의 감소, 열환경의 개선
	우수유출저감시설에 의한 분산적 치수대책	
깨끗하고 풍부한 흐름의 창출	양호한 수질의 확보	불투수면의 감소, 하천유량의 증가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 수질개선 및 열환경의 개선
	갈수시 하천유량의 확보	
	지하수함양 및 용천수의 보전·재생	
갈수시나 재해시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물	물이용의 합리화 촉진	수자원 확보
	절수형 사회 시스템의 구축 빗물 및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자연과의 공생	생물의 다양한 서식·생육환경 확보 신규개발지 및 도시기반정비시 생태계 배려	불투수면의 감소, 홍수피해의 감소, 열환경의 개선

2) 이슈

- 「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수립을 통해 물순환 체계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가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물순환계획의 미래상 개념이 부재함
-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명확한 물순환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에 관한 조항들을 통합하여 “(가칭)물순환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전역의 종합적인 물관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세종시는 개발 이전 대비 불투수율을 포함한 현재 물순환 상태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개발 과정에 따른 물수지 변화량의 추적이 필요함

12.4% **세종 불투수면적 현황**
 세종시 불투수면적 비율의 경우 2013년도 이후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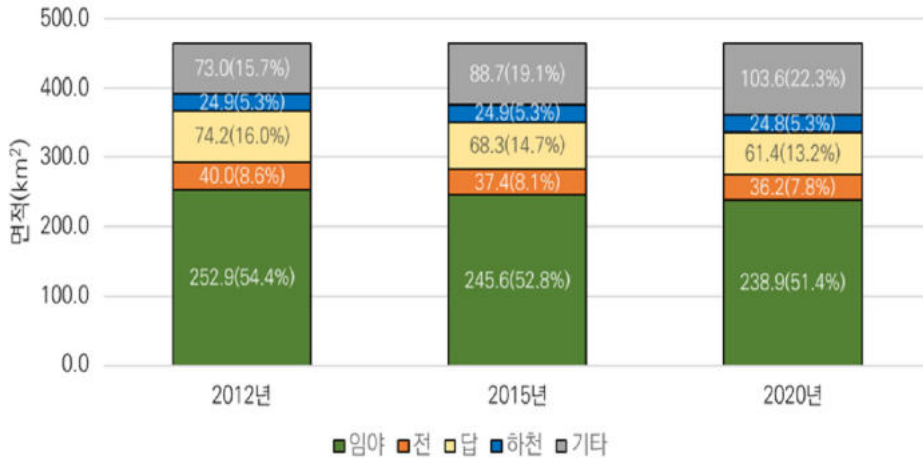
행복도시 구역현황(2012년)

? **지금은?**
 불투수율 25% 이상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필요



행복도시 구역현황(2020년)

[그림 5-22] 세종시 행복도시지역의 유역 변화(예)



[그림 5-23] 세종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절 지방행정

1. 시 특성에 맞는 조직특례 권한 미흡

1) 현황

- 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치조직권 한계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조직권에 대해 법령 적용상 특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크게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5조에 시조례로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인구규모, 면적, 도시의 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8개 이하의 실·국·분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실·국장의 직급도 타 광역시·도와 같이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함

[표 5-24] 세종시법 특례 주요 내용

구 분	조항	주 요 내 용
지위특례	제3조	• 국가의 책무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입법상·행정상 조치에 대한 특례 규정
	제6조	•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음
	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 및 우선적 지원 가능한 특례 규정
자치사무특례	제11조	• 시장 및 교육감은 사무 일부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가능
조직 및 인력특례	제15조, 제16조	•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시 조례로 규정 • 인사교류 방법 및 지원을 시 조례로 규정
재정상 특례	제12조	• 총 세출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지역격차 해소 사업에 투자 및 사업비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
	제2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특례

구 분	조 항	주 요 내 용
	제29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특례
감사상 특례	제21조	•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처리 특례
	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시 조례로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조직권은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그 특례가 매우 제한적이며 적용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해 행정기구와 정원은 특례가 규정되나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규모를 적용한 하향적 특례로 간주됨
- 결과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조직권은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표 5-25] 세종특별자치시 기구 및 정원 근거 법령

구 분	조 항	주 요 내 용
관련 법령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조직 특례) • 「지방자치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별표2]3.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담당 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청으로 임명한다. • [별표2]4.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의 직급기준(감사위원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사무국장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특정직 지방공무원) • [별표2]5. 세종특별자치시 읍장, 면장, 동장의 직급기준 등(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관리: 타 광역과 동일한 획일적 설치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하향조정 • 정원관리: 타 광역과 동일한 획일적 변수 적용

자료 : 금창호(2018:91); 김홍주(2019:118)

2)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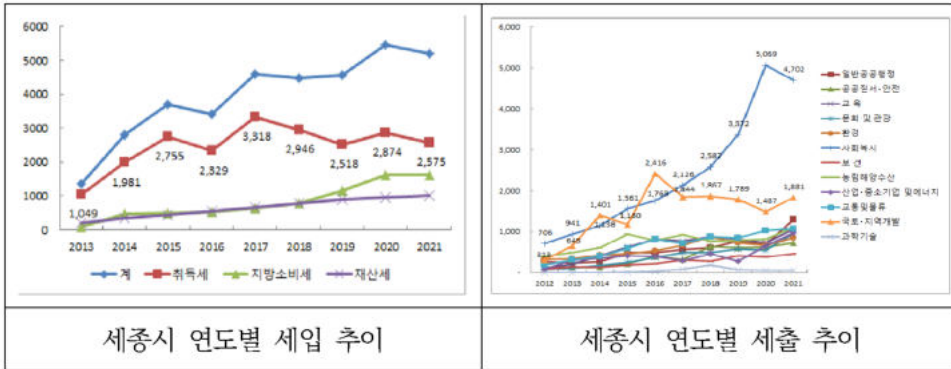
- 행정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대응, 효과적 추진체계가 미흡함(중앙정부의 한정된 인력, 현행기준인건비 제도의 경직성)
- 단층제적 특수성 및 시민주권도시로서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 추진체계 미흡
- 도시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로운 조직권 부재

2.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

1) 현황

취약한 세수기반, 세출증가

- '22년 세종시의 재정규모는 1조 9,213억 원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중은 82%: 18%(기금 포함 2조 3,211억 원). 세종시 출범 당시(2012년), 6,405억 원)에서 '21년 2조 2,346억 원(3차 추경)으로 연평균 16%증가함
- 일반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과거에 비해 자체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 의존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함(보조금 증가에 기인). 지방수입의 정체 내지 감소의 원인은 취득세 증가둔화로 판단되며, 취득세 수입이 늘어나지 못하면 지방세입 증가가 어려운 구조임
-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전 분야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와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보임



[그림 5-24] 세종시의 연도별 세입 및 세출 추이

2) 이슈

- 코로나 19 등 경기부진, 공동주택물량 감소로 인한 지방세입(안정적 기간세 부재) 위축 전망
- 공공시설물 인수대상 증가로 유지관리비의 급증
- 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적 특례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제주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의 지방교부세
- 세외수입의 성장성 및 안정성 저조

6절 여성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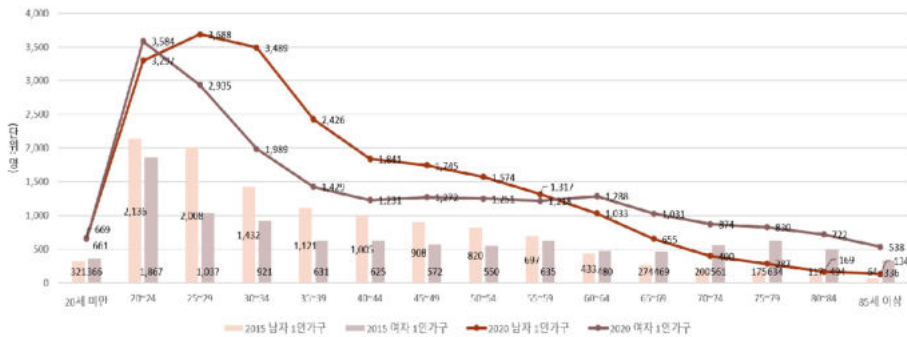
1.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혁신적 사회서비스 개발 및 공급 필요

1) 현황

□ 세종시 1인 가구 증가 추세

○ 세종시의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임

- 세종시 1인 가구의 경우, 남녀 모두 전 연령 세대별로 2015년 대비 2021년 전 연령에 걸쳐 모두 증가함
-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 있어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 1인 가구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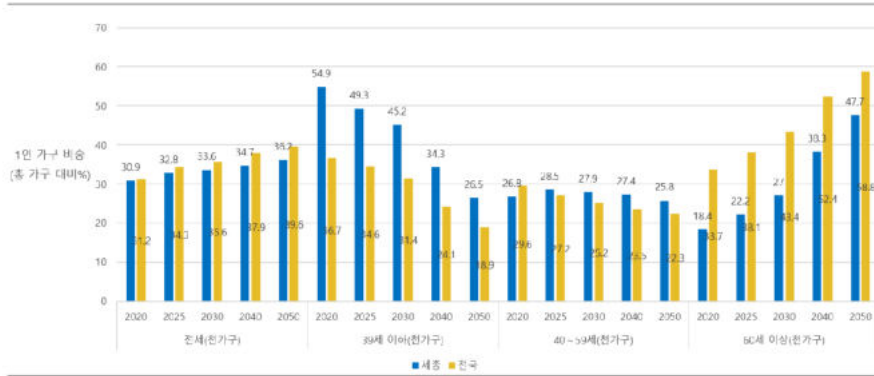


[그림 5-25] 세종시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변화 추이(2019~2020년)

주: 2015년 대비 2020년 1인 가구 증가율의 경우, 5세별 연령 구분을 20세 미만, 20~30대, 40~50대, 60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자료: 통계청(2021), <인구총조사> 자료 재구성

자료 재구성: 최성은 외(2022), <세종시 사회조사로 본 1인 가구 정책 지원 방안> 연구



[그림 5-26] 전국과 세종시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전망(2020~2050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장래가구특별추계: 2020~2050년>, 자료 재구성
 자료 재구성: 최성은 외(2022), <세종시 사회조사로 본 1인 가구 정책 지원 방안> 연구

2) 이슈

-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 1인 가구 관련 사항의 세종시 차원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표 5-26]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인 가구 관련 세부 과제 리스트

국정목표	약 속	세부 과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키워드(검색어: 1인 가구) 검색 결과 재구성

- 시정 4기(최민호 당선인)의 공약 사항 중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의 추진이 필요한 세부 과제 검토 필요

[표 5-27] 세종시 시정4기 공약 중 1인 가구 지원과 연계성이 높은 세부 과제

영역	약속	세부과제
부동산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인 가구용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시중민간임대료와 관리비 절반 수준으로 공급 - 약300세대 도시형생활주택건립
의료·복지	어르신이 편안한 노인친화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가호호 방문 진료서비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스마트시계 공급 어르신들의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모바일 간부제도 시행
행정	시민의 소확행에 세세한 손길이 미치는 선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 반려동물 양육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

2.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 대응 필요

1) 현황

세종시 비경제활동 인구와 그 사유

- 출범 이후부터 세종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2014년 ~ 2019년)
- 15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가사·육아’ > ‘통학’ > ‘기타’ 순으로 나타남

[표 5-28] 세종시 비경제활동 인구나 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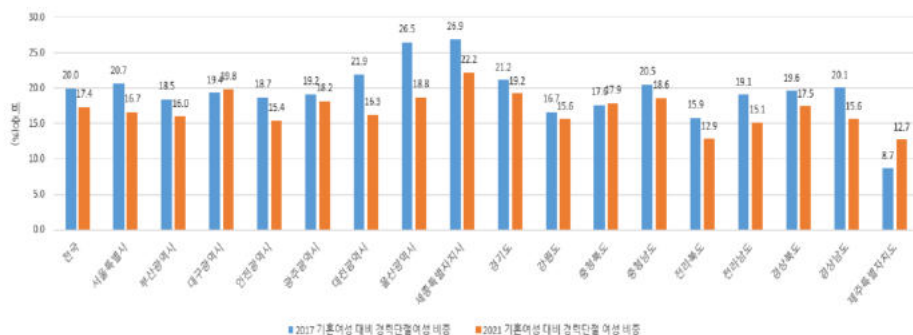
(단위: 천명)

연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반기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기타			
취업자		실업자	가사· 육아	통학*							
2014	111.1	66.6	65.8	0.8	44.6	20.7	16.1	7.8	59.9	59.2	1.1
2015	151.5	92.6	91.5	1.1	58.9	24.3	19.2	15.4	61.1	60.4	1.1
2016	185.8	117.9	115.9	2.0	67.9	30.1	21.6	16.3	63.5	62.4	1.7
2017	214.5	135.0	132.0	3.0	79.5	35.9	25.5	18.1	63.0	61.5	2.2
2018	241.5	153.0	150.0	3.0	88.5	39.5	26.2	22.9	63.3	62.0	2.0
2019	268.0	172.0	168.0	5.0	96.0	42.0	29.0	26.0	64.3	62.5	2.7

주*: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 등을 포함
 자료: 세종통계 홈페이지, 세종통계연보(2020), 04. 노동- 경제활동 인구총괄; 최성은 외(2020),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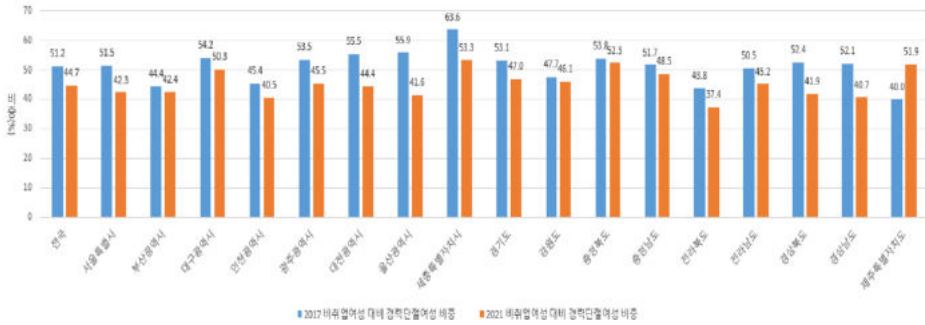
□ 세종시 경력단절 여성 현황

-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2017~2021)」 각 년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 17개 시도 중 1위(2017년, 2021년)를 차지함
- 또한,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 역시, 17개 시도 중 1위 (2017년, 2021년)로 분석됨



[그림 5-27]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2017년 vs. 2021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2014~2021)」 자료 재구성
 자료 재구성: 최성은 외(2022),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 연구>



[그림 5-28]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2017년 vs. 2021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2014~2021)」 자료 재구성

자료 재구성: 최성은 외(2022),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 연구>

2)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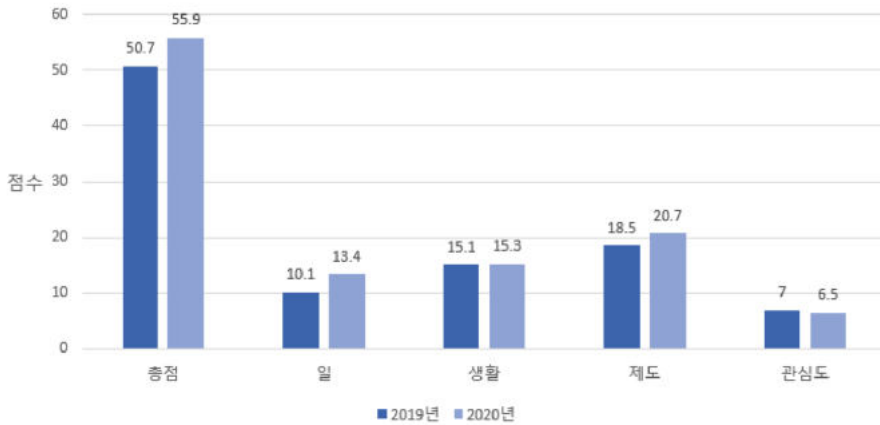
- 세종시는 경력단절 경험을 겪은 여성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보유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세종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임
- 또한, 2022년 6월 8일자로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노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됨
- 전부개정안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주체에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명시되어 법적 의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3. 시민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필요

1) 현황

지역 일·생활 균형 지수를 통해 본 세종시 현황

-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세종시, 2021)



[그림 5-29] 세종시 일·생활 균형 지수 변화(2019~2020)

자료 : 고용노동부(2021), <2020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보고서 재구성; 최성은 외 (2022), 그림 3-1 발췌

2) 이슈

- 세종시민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영역을 첫째, 근로 현장의 근로문화 개선 및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한 정책, 둘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시민 모두의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미래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최성은 외, 2022)
- 세종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제도 실효성 강화
-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됨
- 세종시 공정일터 인증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홍보 및 제도 운영 내실화
- 세종시 일·생활 균형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 세종시 일자리 대책에 있어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강조 해야
- 세종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 검토

4.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아동친화도시로의 발전

1) 현황

□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 2017년 9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4년간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종’을 목표로 삼고 총 57가지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
- 2021년 12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상위단계 인증 획득
 - 2022년 기준, 6대 전략 37개 과제를 추진중에 있음

[표 5-29] 세종시 2022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 추진과제리스트

정 책 과 제	세부 추진과제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5개 사업)	
1-1. 권역별 아동·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조성으로 놀 권리 인프라 확충	1-1-1 권역별 아동·청소년복합문화공간 확충
1-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1-2-1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 활성화
	1-2-2 아동·청소년 교향악단 창단 및 운영
1-3.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전문인력 양성	1-3-1 아동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3-2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
2.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권리보장 기반 구축 (5개 사업)	
2-1. 아동 눈높이 정책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2-1-1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2-1-2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강화
	2-1-3 청소년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2. 아동권리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2-2-1 연령대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강화
	2-2-2 지역 기반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3.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7개 사업)	
3-1. 스마트 교통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 교통사고 제로화	3-1-1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
	3-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1-3 통학안전지킴이 운영
3-2. 촘촘한 아동학대 전달체계 강화	3-2-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3-2-2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정 책 과 제	세부 추진과제
3-3. 성 범죄 예방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조성	3-3-1 아동·청소년 성인권 및 폭력 예방교육
	3-3-2 청소년 성문화체험 행사 운영
4.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8개 사업)	
4-1.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젝트	4-1-1 차별화된 아동 몸 튼튼 프로그램 운영
	4-1-2 아동 맞춤형 마음 튼튼 프로그램 운영
4-2. 믿을 수 있는 세종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4-2-1 아이돌봄사업 활성화
	4-2-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4-2-3 차별화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4-3.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4-3-1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4-3-2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4-3-3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5. 아동의 꿈과 끼가 실현되는 교육환경 조성 (8개 사업)	
5-1.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 강화	5-1-1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운영 활성화
	5-1-2 학교-진로체험센터 연계 강화
	5-1-3 아동·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5-2. 학교밖 다양한 체험 활동 활성화로 자기 계발 지원	5-2-1 복권을 활용한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5-2-2 작은 도서관 아동 프로그램 활성화
5-3.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5-3-1 아동친화적 공공도서관 확충
	5-3-2 세종 e배움터 운영
5-4.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5-4-1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활성화로 아동 원스톱 지원
6.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개 사업)	
6-1. 미세먼지 걱정없는 클린도시 조 성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6-1-1 아동 미세먼지 걱정 NO. 미세먼지 클린존 조성
	6-1-2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6-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환경오염 인식개선 교육	6-2-1 아동 미세먼지 대응교육 운영
	6-2-2 아동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

2) 이슈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응

-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앙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를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진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에 의해 진행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됨
 - 이 중 지자체가 제출하는 것은 자체평가로서,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부정적)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한 자료임
 -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은 자체평가 점검표와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참여가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함
- 그 간 세종시에서 비영리기구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중앙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추진 의도와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모습을 제도 내에서 증명해 낼 필요가 있겠음

7절 문화

1. 문화향유를 위한 인프라·콘텐츠 부족

1) 현황

- 세종시 문화예술 및 여가 공간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
 - 세종시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공공도서관 12개소(지자체 11, 교육청 1), 박물관 10개소(국공립 7개소, 사립 3개소), 미술관 0개소, 생활문화센터 2개소, 문예회관 1개소, 문화의 전당 1개소, 지방문화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2022년 3월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객석 수 1,071석 규모로 '세종 예술의 전당'이 개소되어, 지역 대표 예술공간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세종예술의전당'은 1,070석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단일 공연장 형태로 조성되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 향유권을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될 예정임
 - '세종호수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글 '이응(ㅇ)'을 형상화한 '금강보행교'도 조성되어 있음
 - '국립세종수목원'은 전통정원, 사계절 전시온실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중이며, '세종시 중앙공원'은 계절테마를 반영한 소규모 광장으로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2) 이슈

- 지금까지 세종시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각 지역문화 공간별 특화 방안, 지역 문화공간 간 연계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함

- 금강보행교,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세종전통문화체험관(2022년 8월 말 개소 예정) 등 인접한 지역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별 특화 방안 수립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현재 시각 예술의 전시를 위한 공간은 BRT 작은전시관·박연문화관 1층 전시실·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비롯하여 개인 카페 공간이 있으나, 시 단위의 전시공간은 부재함
- 기조성된 문화공간에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세종시는 앞으로 향토유물박물관(고운동, 2025년 예정), 장욱진 그림마을, 김종서장군역사테마공원, 국립박물관단지의 조성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2. 미약한 콘텐츠산업 기반

1) 현황

콘텐츠산업 전문거점기관 부재에 따른 미약한 산업 기반

- 세종시 콘텐츠산업 기업 현황은 기업체 수 308개소로 전체 0.3%에 불과하며, 2018년 318개소, 2019년 311개소에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음

[표 5-30]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사업체 수(개소)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84	15	149	-	1	3	3	22	5	25	1	308

자료: 2021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 세종시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74,029(백만원)으로 전체 0.1%에 불과하며, 2018년 81,704(백만원), 2019년 92,123(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5-31]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매출액(백만 원)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35,292	664	3,079	-	409	5,405	2,132	17,510	3,116	6,108	314	74,029

자료: 2021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 세종시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1,067명으로 전체 0.2%에 불과하며, 2018년 1,043명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19년 1,382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음

[표 5-32]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종사자 수(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408	60	192	-	3	35	17	238	33	77	4	1,067

자료: 2021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9년 세종시문화재단이 지역콘텐츠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세종시 음악창작소를 유치하였으며, 2021년 세종테크노파크로 지역콘텐츠 거점기관의 역할을 이관함
 -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특화콘텐츠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콘텐츠 산업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2) 이슈

-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물리적 수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는 도시건설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세종시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한국영상대학교 등 콘텐츠산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있으나, 콘텐츠 전문거점기관의 부재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3. 도시건설 과정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결여

1) 현황

- 세종시는 현재 건설 중인 도시로서 완전한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의 구현과 확립이 전제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끄는 목적으로 출범되었으며, 도시정착(2011~2015년), 도시성숙(2016~2020년), 도시완성(2021~2030년)의 3단계 도시 성장 계획에 따라 현재도 건설 중인 지역임
 - 도시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구현과 정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세종시에서도 지역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세종시의 도시정체성은 ‘세종’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시기에서부터 구현·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한글’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한글진흥 조례(2014년)를 제정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한글진흥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자 하였음
 - 시민 인식과 공감의 제고를 위해 공간형 콘텐츠인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글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조형물을 건립하고 있음
 - 세종시에서는 세종학진흥조례를 2019년 제정하여 지역학으로서 ‘세종학’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를 조직하여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세종학 세미나, 세종학 포럼 등의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숨어 있는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기구인 ‘집현전’을 두어 ‘세종의 재발견’이라는 지역학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음

2) 이슈

- 세종시는 '한글'을 활용하여 도시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공감은 크지 않은 상태임
- 세종시 내 한글을 활용한 테마거리인 '한글사랑거리'의 경우
- 지역학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여 대부분 사업의 예산 규모가 매우 적은 상태임
 - 특히 세종시에서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겼으나,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

4. 행정수도 위상에 적합한 관광 랜드마크 부족

1) 현황

-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 위상에 적합한 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함
 - 세종시는 금강보행교·세종 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세종 호수공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 같은 시설은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지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도입이 필요함
 - 이미 세종시는 금강을 중심으로 보행교·중앙공원·수목원·호수공원 등의 여가 시설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금강 문화관광루트(가칭)' 개발과 같은 관광시설의 도입을 제안함

2) 이슈

- 금강은 뛰어난 자연생태 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금강의 심미적 가치와 문화를 연계하고, 금강 주변지역과 융합된 창조적 관광 콘텐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예로부터 지역 간 교류를 위한 나룻배가 다니던 금강 뱃길(나루터)은 지역과 관광객,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창조적 연계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강변 문화관광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기존의 지역 관광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금강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 발굴과 잠재되어 있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하여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된 강변 관광자원으로써 가치 재창출

발전 방향 및 전략

- 1절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거점과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
- 2절 자족 기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 3절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서비스 제공
- 4절 스마트시티 구축
- 5절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도농 불균형 완화
- 6절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환경 서비스 증진
- 7절 조직 특례 및 자원확보
- 8절 1인 가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 9절 지역자원, 인프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6장 발전 방향 및 전략

1절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거점과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

1) 과거에서 현재까지(~2022년) : 행정중심복합도시

-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중에 있음
- 2030년 목표로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2) 현재 이후 단기적 미래(2023년~2030년) : 행정수도 & 미래전략수도

-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완료와 함께 행정수도로써 기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행정수도가 되기 위한 기능
 - 행정기능의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 입법기관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사법기관이 입지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야함
- 행정수도의 개념을 넘어서는 미래전략수도에 대한 정의 필요
 -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거점 역할 수행할 미래전략수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

3) 중장기적 미래(2040년) : 통일 후 남한 수도 & 동북아의 정치행정 수도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해 보면, 통일 이후 세종시는 남한의 수도로서 역할 수행
 - 세종, 대전, 청주가 하나의 광역권으로서 남한의 수도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서울은 통일 한반도의 경제수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

- 장기적으로 세종시는 동북아의 문화 및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4)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존 읍면지역과의 기능, 관계,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기능 확장, 산업공간 배치, 교육의 질 제고, 의료복지 시스템 확충, 문화 기회 확장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장래 다양한 기능 입지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행정, 입법, 사법, 연구기관, 언론·미디어 분야 집적에 더해 추가적인 기능(국제업무, 마이스, 휴양, 산업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공간 마련에 대한 계획 필요
-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30년 이후에는 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충청권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함
- 글로벌 도시로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천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청주공항 확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또한 외국인 정주여건 및 외국인 교육시설 입지에 대한 구상도 필요함

2절 자족 기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전략 1.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 과학기술 기반 미래전략수도 구현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 첨단 ICT 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 세종시 지역 주요 산업(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시티)의 분야별 발전을 모색하면서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역산업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ICT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필요
- 첨단 ICT 산업은 지역 주요 산업 고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직 대중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크다고 알려진 미래지향적 산업(양자산업 등)과도 연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첨단 ICT 산업은 지식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도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구성하면서, 충청권 초광역 산업 협력에 있어서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첨단 ICT 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는, 세종시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투자 추진 필요
- 민선 4기 출범 이후 세종시는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자족경제도시 구현을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첨단 ICT 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산업 관련 핵심 분야

-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신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기존의 지역 주요 산업 특성 및 민선 4기의 시정 비전·미래전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신산업 관련 핵심 분야 제시

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 세종시는 규제자유특구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이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드론실증도시 사업 선정을 통해 드론활용 서비스 실증 또한 시행 중임
-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용화까지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충분한 실증이 요구되기에 세종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모빌리티 소재·부품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신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간주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기존 주요 산업 중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스마트 모빌리티 소재·부품 등), 미래차모빌리티(자율주행 기반 퍼스널 커넥티드 모빌리티 서비스, UAM 기반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물품 배송 및 여객 수송 서비스 등)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산업 분야로 판단됨

②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 세종시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구축된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자연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 화합물을 가공, 발효, 합성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소재⁶⁾)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진행 중이며, 이는 세종시 민선 4기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임
-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3번째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센터가 건립될 경우, 대전의 중이온가속기와 충북 청주의 방사성

6) 온라인 보도기사(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세종시 카이스트와 바이오메디컬 기업 키운다', 2021년 4월 1일, 박희운 기자) 내용 참고하여 작성.

가속기와 함께 중부권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세종시는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복지 허브를 구축하여, 세종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스마트시티 및 지역 의료복지 허브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실증을 진행하면서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경우, 시민들에게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종시의 기존 주요 산업 중, 바이오헬스케어(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의료복지 허브 등), 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 등)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산업 분야로 판단됨

③ 디지털 미디어 산업

-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28년 준공⁷⁾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연계하여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위치할 미디어 단지가 조성될 예정임⁸⁾
- 세종시는 조성 예정인 미디어 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초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미디어 단지 구축 시 메타버스 기반 초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인프라를 미디어 단지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에 시민 대상 문화 콘텐츠 제공, 지역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메타버스 기반 지역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⁹⁾

7) 온라인 보도기사(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국회, 28년 세종으로 집잔다...총사업비 1.4조→3.6조 확대', 2022년 11월 18일, 이승배 기자) 내용 참고하여 작성.

8) 온라인 보도기사(디트NEWS24(<https://www.dtnews24.com>), '미래 세종시 '미디어단지(SMC) 입지' 4곳으로 압축', 2022년 2월 25일, 이희택 기자) 내용 참고하여 작성.

9)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행된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남영식, 2022)' 내용 참고하여 작성.

- 세종시의 기존 주요 산업 중, 실감형콘텐츠(메타버스 기반 체험 인프라 등)가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산업 분야로 판단됨

④ 정보보호 산업

- 세종시는 국가 행정 중심지로 중앙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음
- 또한 세종시의 기존 주요 산업 및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신산업 또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음
- 미래 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변환 필요성 및 세종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실효성 있는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개인 데이터들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의 실증이 안전한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민선 4기 공약에도 이와 관련된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정보보호 산업의 경우 미래의 핵심 기술로 간주되고 있는 양자기술과도 연관성을 가지므로, 향후에는 정보보호 산업 발전 과정에서 양자기술 기반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양자기술의 경우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대전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세종시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전략 2. 산업 육성 및 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

□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통합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 ICT 기술을 활용한 산단 관리 시스템 구축: 입주기업 관리, 기반시설물 관리, 에너지 특화관리
- 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특례지구 도입: 경제자유구역

○ 산업-공간-사람 산업생태계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핵심기업 유치: 입주혜택 제공, 투자유치 거버넌스 및 투자유치 활동 체계 구축
- 첨단연구개발지구 조성 및 활용: 산업기술단지 조성
- 스마트 인력 확보 및 육성: 대학과의 연계, 신산업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재직자 재교육 과정, 산업 트렌드 교육,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화 및 친환경 기반 조성: RE100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방안, 친환경 에너지 전달 및 활용 체계, 친환경 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
-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친환경 R&D 실증 플랫폼 구축, 친환경 기술 상용화 지원 기반 마련
-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 체계 구축: 친환경 산업단지 관련 규제 해소방안, 입주기업 친환경화 지원체계 구축

□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준비된 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재취업 유도: 소상공인 혁신거점 구축 및 현장형 교육훈련, 생계형 창업자의 재취업 유도

○ 로컬상권 조성

- 로컬 브랜딩 및 골목산업화 추진: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한 로컬브랜드 육성, 로컬브랜드와 연계된 전후방 소규모 제조업 육성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및 상권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매출, 공실, 개폐업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에 활용

□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100개 구축(기존 55개 + 신규 45개)
- 북부권: 조치원 일대, 북부권 산업단지 및 대학(고려대, 홍익대) 연계
- 남부권: 4-2 생활권 도시첨단산단,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연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세종테크노파크 본관 내 창업기업 우선지원 공간 확충
- 4-2생활권 공공지식산업센터 내 지원공간 확보

○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 대학, 연구, 창업이 연계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 조성 추진
- SW 중심의 연구개발과 창업,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주거, 기업공간, 대학, 상업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개발 추진
- 국내외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수요에 기반한 수요 맞춤형 개발 및 투자유치 추진

□ 기회발전특구 조성

○ 기회발전특구는 새정부의 신규 사업으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에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업

○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공간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 적용

○ 세종시는 4-2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선제적 대응과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

□ 렛츠런 파크 유치 검토

- 세종시는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
 -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2021년 세수입 1,947억원 발생
-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경마공원은 과천, 제주, 부산경남에 있으며 영천경마장 2022년 착공
- 영천경마공원 개요
 - 규모: 1,452,000m²
 - 1단계: 1,857억원(5,000석 관람대, 경주로, 마사, 동물병원, 수변공원)
 - 2단계: 1,200억원(루지시설, 경마아카데미, 숲속공원, 가족캠핑장, 산책로)
 - 경제적 파급효과: 1조 8,000억원, 7,500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전략 3. D.N.A. 기반 농식품의 스마트 혁신

□ ICT 기술과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의 스마트화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미래식품산업 육성
 - 대체식품, 기능성 식품,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친환경식품 등 식품 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식품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청년창업지원, 민간투자 지원을 통한 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
 -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미래식품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고도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 농업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농업은 농가소득 정체, 곡물자급률 하락,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계획적인 작물생산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활동에 ICT 기술을 결합한 고도화 추진 필요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도입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정체계 구축
 - RE100 지원, 바이오차 보급,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도입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정체계 확립
- 청년 보육, 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 스마트 농업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년농업인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사업 제공

전략 4. 도시와 농촌이 공존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 필요
 - 농민수당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농민수당 관련 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정립 필요
- 농민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의 명확화
 - 농민수당이 실제 공익적 기능에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필요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통한 경제성, 지역성, 관계성 강화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으로 경제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 형성

- 생산자조직화 및 기획생산, 세종시 특성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관계 및 신뢰를 확산 할 수 있는 관계시장 구축
- 싱싱장터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 기반 확대
 - 도농상생을 위해 싱싱장터를 확대하고 신규 출하농가 및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 역량교육 실시
 - 요리체험, 도서관, 놀이터 등 공동체 공간을 통해 누구나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축
- 공공급식의 효율화 및 안정화
 - 식재료 검수와 수발주 분야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학생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식재료 검수체계 구축으로 급식의 안전성 강화
- 지역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급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임산부 및 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에 따른 로컬푸드 농산물을 통한 답례품 제공

□ 세종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의 확산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의 소득문제를 해결 필요
 - 고령농가를 조직화하여 농촌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향상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
- 농업이 가지는 생산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하고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로 연계
 - 농촌 주민 주도로 농식품 유통, 농촌관광, 가공산업 등으로 연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제고
- 세종시 복숭아 축제의 콘텐츠 강화
 - 수확체험, 품평회, 전시행사 등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 강화 필요

-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조치원) 준공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
 - 특색있는 농촌체험·관광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세종시의 농촌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3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 서비스 제공

전략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시스템 개선

지역별로 주차 공간 및 수요 분석

- 상업 시설별, 필요 주차 공간 분석 필요
 - 현재 상업 시설별로 할당된 주차 면수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 면수 파악 필요
 - 주차 회전을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한 주차 공간 분석 필요
 - 해외 사례 검토후, 주차면적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 마련
- CCTV 및 시민 제보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지역 분석
 - 불법 주정차 지역을 바탕으로 주차 공간의 부족 및 여유 공간 분석 필요
 - 불법 주정차 지역과 공영주차장까지의 거리 분석 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차 공간 활성화

- 빅데이터 분석
 - 일자별, 시간별 분석 필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구현
- 최적 주차 공간 입지 분석
 - 불법 주정차 지역 및 주차 공간 분석을 통한 최적 주차 공간 입지 설정
 - 입지 분석 모델을 통한 주차공간 효율화 방안 마련
- 사물인터넷(IoT) 무선차량감지센서를 통한 주차 안내시스템 개발
- 주차 공유 문화 확산 필요 (주거 단지 및 상업 단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권별 버스 통행 패턴 분석

○ 버스 수요 분석

- 교통 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버스 이용자의 통행패턴 분석
- 승하차 지점별 분석, 시간대별 분석, 통행시간별 분석 필요
- 굴곡도 및 중복도 분석을 통한 공급 측면의 분석 필요

○ 버스 배차 간격 분석

- 첨두시간과 비첨두 시간에 따른 버스 배차 간격 분석 필요
- 각 정류장별 버스 정시성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충전 인프라 입지 선정

○ 운전자의 통행 패턴 분석

- 운전의 통행거리 및 주유소 위치를 고려한 통행 패턴 분석 필요
- 평균 충전 시간 및 충전 시간대 분석 필요

○ 입지 분석 모델 적용

- 공유 주차장(아파트 시설 단지내) 을 활용한 충전 시설 활용
- 입지 분석 모델을 활용한 최적의 입지 위치 선정 필요: 단계적인 방법론 필요

전략 2.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버스요금 무료화: 대중교통 개편으로 승용차 이용율을 낮춰 버스 이용율 상향

○ 세종시 지방대중교통계획과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민 맞춤형 버스노선 개편 및 출퇴근시간 버스 증차 추진

- BRT버스 증차로 환승에 따른 시간 절약과 편리성 확보

○ 주차 요금 현실화를 통한 승용차 사용 억제로 교통 체질 개선

○ 대중교통 무료화 기반환경 조성(노선개편, 버스증차 등)

- 시범운영을 위한 제반시스템(교통카드 및 요금정산 등) 구축

□ **교통신호체계 첨단화: 데이터 기반의 신호관리·운영 체계 도입**

- 주요 도로축 신호 연동 및 요일별, 시간별 신호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
 - 비보호좌회전 신호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전수조사
 - 주요교차로(10개소) 및 관내 교차로(700여개소)*에 대한 신호 운영 DB 구축
- 신호체계 전환 및 온라인신호제어 시범운영
 - 변동형(시간별, 요일별) 신호체계 단계별 적용

□ **편리한 버스교통체계 구축**

- 2022년 현재 24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승용차에 비해 통행시간 과다 등 불편 요인이 많아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 매우 낮은 실정
- 승용차와 비교해도 불편하지 않은 신속하고, 편리한 버스교통체계 구축
 - 버스운행간격 및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통행시간 경쟁력 향상 도모
 - 굴절버스, 2층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고급화 및 다양화 추진
 - 교통약자를 위해 가급적 저상버스 운행
 -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운행시간 연장 추진
 - 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으로 탄소저감형 교통체계 구축
 - 부담 없고 편리한 버스요금체계 구축

□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 대중교통에 비해 승용차 이용이 매우 편리한 환경으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함께 추진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 환승주차장 건설 및 셔틀버스 도입으로 도심내부 승용차 통행 억제

- 도심을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로 구축하여 승용차 이용 억제
- 대중교통과 기타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를 위한 MaaS 도입 등
- 승용차 요일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승용차 억제 정책 추진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 현재 1생활권만 운영하고 있는 서클의 확대 필요
- 데이터분석을 이용한 승하차 지점에 따른 공급 측면 강화

○ 탄력 배차 도입

- 출퇴근시에 따른 탄력 배차를 고려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탄력적 배차를 위한 버스 대수 증차 및 버스 기사 증원 필요

○ 급행 시스템 도입

- 수도권 지하철과 비슷하게 데이터 분석후, 급행 버스 도입 고려
- 급행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 버스 무료화 도입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무료화 추진 필요
- 무료화 뿐만 아니라 버스 서비스 향상 및 수요 맞춤형 노선 설계 필요

○ 광역버스 노선 확충

- 세종-청주, 세종-대전간의 통행 서비스 향상 및 세종시 내부 통행 감축을 위하여 광역 급행 버스 도입 필요

전략 3.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및 광역도로 확충

-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조기 개통 및 기능 보완
 -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조기 개통 지원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 고속도로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
 - 대전당진고속도로 청마을IC 신설 추진
 -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당진영덕고속도로 접속에 따라 당진영덕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통행량 분산을 위해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논산 연장 추진

- 동서간 고속도로 확충
 - 남북방향에 비해 미흡한 동서축 고속도로 확충
 - 태안세종고속도로 등 서해안 지역 고속도로 연결성 강화

- 인접도시간 광역도로 확충
 -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대전, 청주, 공주 등과의 지역 간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래 교통혼잡 증가 예상
 - 현재 계획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
 - 청주국제공항, 인접도시 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계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
 - 장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축 및 광역도로의 확충 추진
 - 세종시 내부의 순환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 1호선의 혼잡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도 1호선의 우회도로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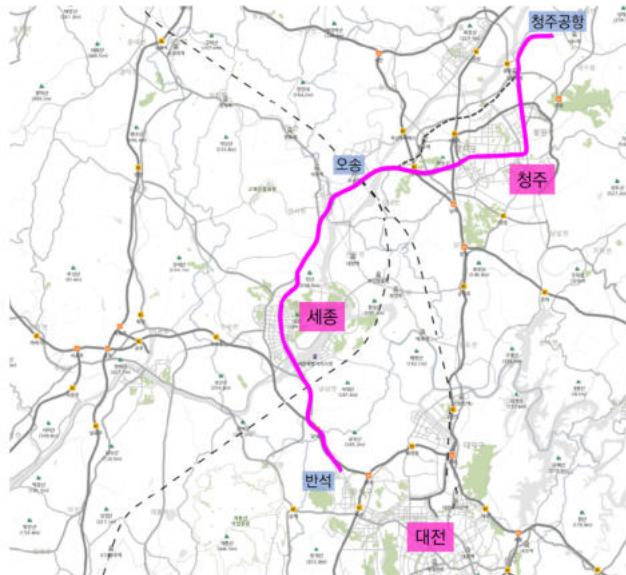
전략 4. 광역철도망 건설

- 국가 간선철도 접근성 강화 추진 및 광역철도 확충
 - KTX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원역 KTX 정차 추진 및 KTX 세종역 건설 추진
 - 국가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

[표 6-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개요

노선명	사업내용	비 고
구 간	반석~세종(정부청사)~ 조치원~청주공항 (49.4km)	오송~청주공항간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청주도심경유 노선을 포함한 대안별 경제성 및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대안으로 검토·추진
사업비	21,022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그림 6-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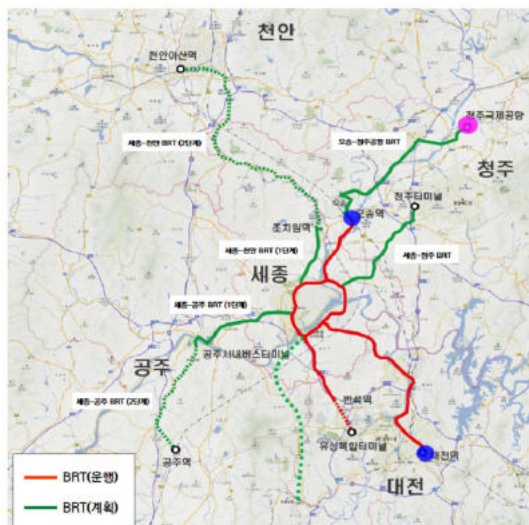
전략 5. 광역BRT 확충

-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BRT 건설로 최소한의 광역대중교통 편리성은 확보하였으나, 공주 등 광역BRT가 없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므로 광역BRT의 확충이 필요함
- 현재 세종-공주, 세종-청주 BRT 등 6개 노선이 계획되었으므로 광역BRT를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

[표 6-2] 대전·세종권 광역BRT 건설 계획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사업비(억원)
단기	세종-공주 BRT (1단계)	세종 - 공주시내	18.5	172
	세종-청주 BRT	세종 - 청주터미널	32.3	58
	오송-청주공항 BRT	오송역 - 청주공항	16.4	583
중장기	세종-천안 BRT (1단계)	세종 - 홍익대	16.0	146
	세종-공주 BRT (2단계)	공주시내 - KTX공주역	18.1	151
	세종-천안 BRT (2단계)	홍익대 - KTX천안아산역	33.5	395

자료 : 국토교통부 대광위(2021),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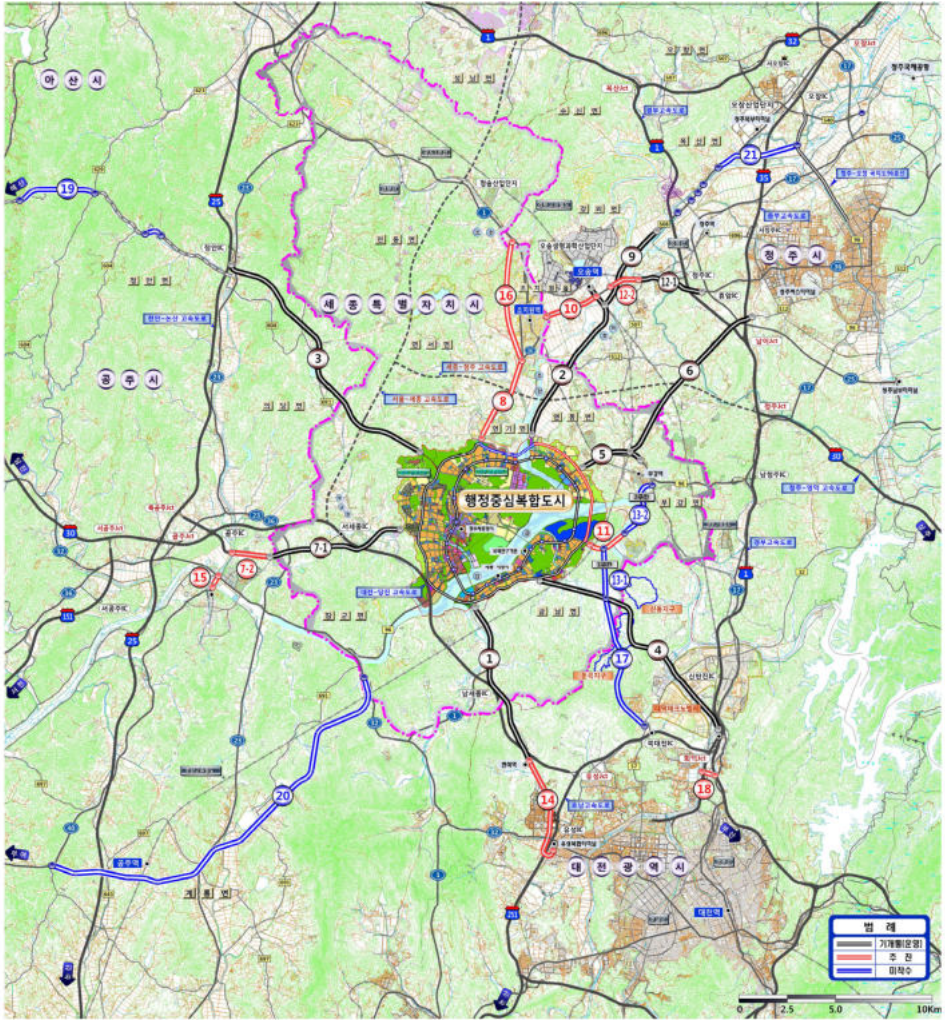


[그림 6-2] 대전·세종권 광역BRT 건설 계획

[표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건설현황 및 추진계획

구분	사 업 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완료시기	비 고	
1	대전 유성(외삼동) 연결도로 확장	8.78	2,276	2012	운영중	
2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9.00	3,133	2012	운영중	
3	정안IC 연결도로 신설	15.26	3,061	2013	운영중	
4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설	14.19	4,362	2015	운영중	
5	남청주IC 연결도로 신설	3.33	740	2016	운영중	
6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9.98	1,673	2016	운영중	
7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9.42	2,103	2020	운영중	
8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4.90	1,075	2023	공사중	
9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4.72	1,407	2019	운영중	
10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2.86	445	2020	운영중	
11	부강역 연결도로 신설	2.34	690	2021	4차로	
12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4.68	1,508	2023	1구간 운영중 2구간 공사중	
13	동측우회도로 신설	1구간	2.81	642	2026	설계중 / 4차로
		2구간	4.73	576		
14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연결도로	8.00	632	2022	설계중 / 8차로	
15	행복도시-공주터미널 연결도로	1.0	240	2026	설계중 / 4차로	
16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	7.99	1,327	2026	설계중 / 4차로	
17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신설	7.34	1,970	2026	설계중 / 4차로	
18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0.80	361	2024	설계중 / 4차로	
19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9.90	-	2028	계획 / 2차로	
20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22.10	-	2028	계획 / 4차로	
21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3.9	-	2027	계획 / 4차로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계획)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3차)

[그림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건설현황 및 추진계획

4절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1. C-ITS 통신인프라 구축

- 기존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대전) 구축('23년)
 - 세종~청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에 연계하여 대전까지 확대
 - 세종시 2차 ITS 기본계획 수립('24년) 후 C-ITS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25년)
 - 중앙정부의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C-ITS 인프라 구축

전략 2.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구축
 - 교통·환경·도로분야의 문제인식·분석·예측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
 -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트윈 활용
 -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22.~'24.)
 - (1단계) 기반마련·시범구축, (2단계) 고도화·3D 데이터 활용, (3단계) 지능화·대민서비스 구축
 -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23.12)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23~'27)

전략 3.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정부부처 집적과 향후 국가시설 입지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 입지가 증가하고 정보보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기부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유치, 인력양성, 사이버보안 훈련장 구축 추진
 - 향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관련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전략 4. 세종형 드론 서비스 기반 마련

□ 드론실증도시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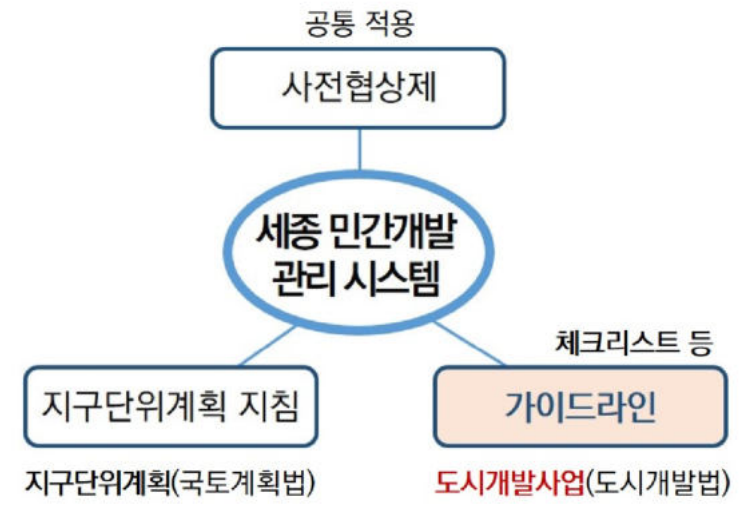
- 드론평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기술 중의 하나인 드론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드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드론 상용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 향후 드론평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을 추진하고,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 신청, 전국 드론레이싱 대회 확대 개최 추진 예정
- 실증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 추진

5절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도농 불균형 완화

전략 1.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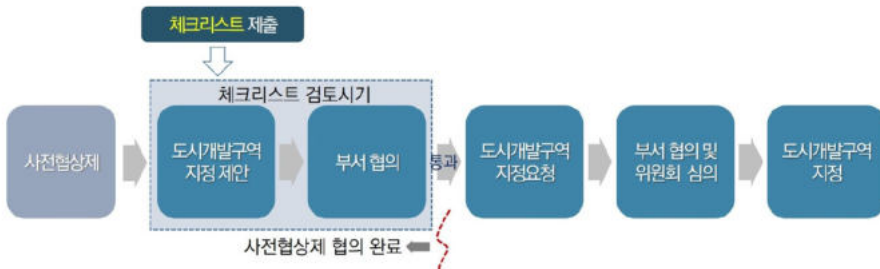
□ 세종시 민간개발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마련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정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종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함
 - 도시 공공성 확보, 주변 지역과의 조화,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민간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자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체크리스트 - 사전협상제 -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의 3개 제도를 연동·운영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함



[그림 6-4] 세종시 민간개발 관리시스템(예)

- 체크리스트의 주요 검토사항: 정책부합 및 지역발전 기여, 사업에 대한 기대와 편익 제공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긍정·부정적 효과
- 진행절차: '민간의 제안 → 사업계획(대상지 등) 적정성 검토 → 사전협상(공공기여율 검토 및 산정) → 지구단위계획 입안 →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사업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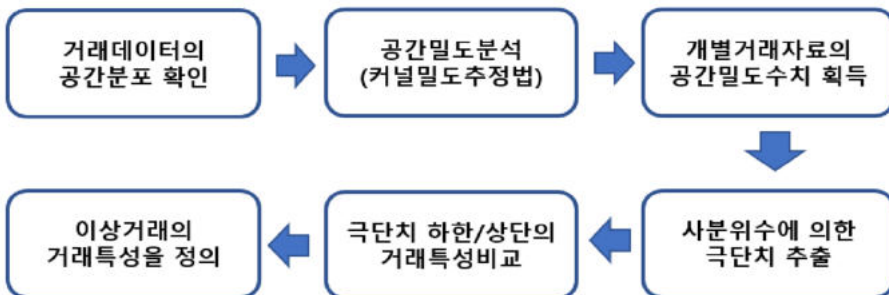


[그림 6-5] 사전협상제와 체크리스트의 도입·운영(예)

전략 2. 토지거래 관리 시스템 구축

□ 토지거래 관리 및 모니터링 전략 마련

- 세종시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세종시 차원에서 대응토록 하는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함
- 담당부서와 관련전문가가 함께 제도 운영의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있는 제도로 활용되도록 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



[그림 6-6] 이상거래 파악을 위한 분석과정(예)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검토는 '1단계(정량분석) + 2단계(정성분석)' 등의 세부과정을 거쳐 주변지역 지가 상승, 투기세력 유입 등 해제시 부작용을 종합 검토하여 구역의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토지거래허가구역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구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되, 향후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함

< 1단계 정량분석 >

-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준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변동률)을 활용한 5개의 정량지표를 토대로 하여 비교함
- (판단기준) 정량지표 5개 중 각 지표의 (A)와 (B)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큰 항목이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지정(유지)', 3개 미만일 경우 '해제'

① (A) 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B) 허가구역 지정 전분기 지가변동률
② (A) 구역 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	(B) 동기 전국 평균 누계 지가변동률
③ (A) 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B) 동기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④ (A) 최근 3개월 누계 거래량	(B) 허가구역 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
⑤ (A)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	(B) 동기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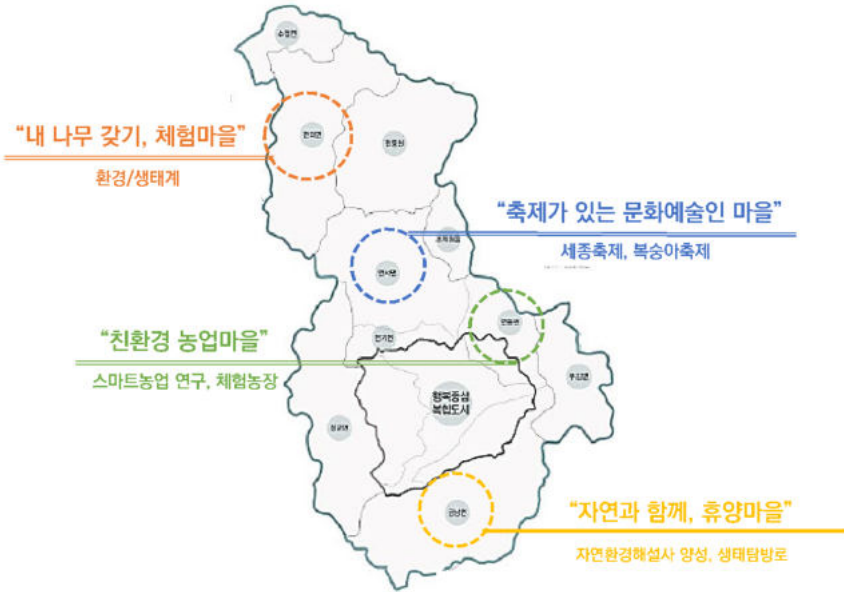
전략 3.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중앙정부 정책기조 대응 :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별 정체성 확립

- 농촌협약 등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세종시 농촌지역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만의 농촌공간 형성의 제도적 틀 없이 단편적 사업과 부문별 계획 중심으로 수립되어, 농촌 공간관리에 제한적
- 따라서 다양한 농촌문제와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세종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지역별 공간구상 및 전략계획이 필요

[기본구상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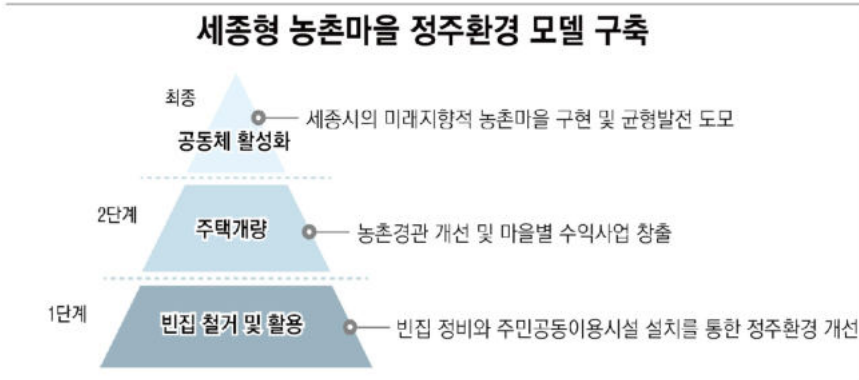
-지역별 정체성 확립으로 동지역과 먼지역의 관계성 강화-



[그림 6-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체성 부여

□ 세종형 정주환경 모델 구축 : 세종미래마을(안)

- 도시(신도심)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불균형 이슈는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신도심인 행복도시와 공존하고 상행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세종시만의 농촌 정주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
 - 기존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시설개선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개별사업을 포괄적(민각자본보조 + 시설비)으로 지원하는 자육적 시범사업조성으로 세종형 모델 구축
 - 2022년 수립한 빈집정비계획을 참고하여 개별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하되, 소규모 마을 정비가 가능한(예: 빈집 3~5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



[그림 6-8] 세종미래마을 모델

전략 4. 행복도시 공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미디어단지(센터) 건립, 공동캠퍼스 조기개원으로 세종시 자족 기능 확대**
 - 세종시는 미디어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단지·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
 - 현재 4-2생에 공동캠퍼스 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4년 5월 완료 예정임. 입주예정인 6개 대학(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등)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필요
 - 공동캠퍼스에서 배출된 청년 인재들이 세종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창업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행복도시 오픈스페이스 연계를 통한 시민 휴식공간 창출**
 - 도심 상업·업무·문화, 배후 주거기능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오픈스페이스 내 각 시설 간 연계 및 시설·공간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그림 6-9] 행복도시 미디어센터(좌) 구상(안) 및 오픈스페이스 연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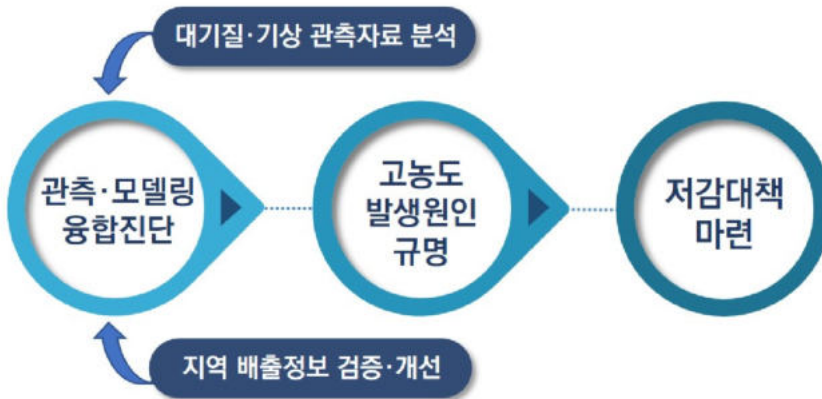
- 세종시 정체성을 반영한 진입경관 조성으로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조성
 - 행정수도, 미래전략, 스마트도시, 세종대왕, 한글 등 세종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진입관분 필요
 - 대전, 공주, 청주, 천안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진입할 때 구별될 수 있는 진입경관 조성 및 상징 조형물 설치로 차별적인 도시이미지 조성 필요

6절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환경 서비스 증진

전략 1. 지역맞춤형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시민건강 보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농도관리 추진체계 구축
 - 과학적 기반의 추진체계는 ① 관측·모델링 융합진단 → ② 고농도 발생원인 규명 → ③ 저감대책 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측·모델링 융합진단 과정에서 대기질 및 기상 관측자료 분석과 지역 배출정보의 검증·개선 등의 과정 수반 필요
 - 과학적 기반의 대기환경 농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오염특성별·지역별 저감대책 추진 필요



출처 : 이윤희 등(2021)

[그림 6-10] 과학적 기반의 농도관리 추진체계

- 읍면지역 미세먼지 2차 생성 전구물질의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 세종시는 특히 읍면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못해 농촌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전구물질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지역별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 미세먼지의 시민건강 영향 DB 구축 및 고도화 관리시스템 구축

-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기초조사 실시 및 DB 구축
 - 시민건강 보호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 관리 및 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
- 환경보건 감시체계 시스템을 구축
 - 환경 및 건강데이터를 시·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환경보건 문제를 진단·평가 후 과학적인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
 -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및 지역 특성의 시간적 추세와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의 규모와 지역별 건강편의 산출을 통해 정책의 우선지역 선정에 활용

□ 대기질-기후변화 대책 수립시 공편익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 대기오염(미세먼지) 감축 계획-기후변화 대응계획-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에 각 계획의 정합성 유지를 넘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조합을 고려
 - 대기질과 기후변화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 대기질 및 기후변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것으로 대책 간의 공편익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시민건강과 생태계의 노출 및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시행

전략 2.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 도시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가속화 및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 (ZEB) 확대
 - 2050년까지 노후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100% 목표 수립
 - 제로에너지빌딩 주거용 60%, 비주거용 30% 감축 목표, 2025년 연면적 1천m² 이상, 2030년 5백m² 이상 건축물 ZEB 의무화
 -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추진

□ 친환경차량 전환 및 개인교통수단(PM) 활성화

- 친환경차량 보급 가속화
 -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친환경차량 정부지원 보조금 규모를 보완할 수 있는 자자체 중심의 구매보조금 확대방안 모색
 - 친환경차 전환 목표에 따른 합리적인 충전인프라 확충
- 통행량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교통수단(PM) 활성화 및 녹색교통망 구축
 - 개인교통수단(PM)을 활용한 MaaS(Mobility-as-a-service) 시스템 구축
 - 간선급행버스(BRT) 확대 및 연계수단 구축

□ 친환경에너지원 다변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수소연료발전시설 조성, 시민주도 세종절전소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문화 확산
 -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참여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 강화

□ **제로웨이스트 순환경제 선도도시 전략 수립**

-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 ‘세종 2030 제로웨이스트 순환경제 도시’ 선언 및 기본계획 수립
 - ‘세종 2030 제로웨이스트 순환경제 도시’ 선언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로웨이스트 순환경제 실천위원회’ 구성
- 탄소중립형 제로웨이스트 실천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시민과 업계가 함께 상생하는 순환경제 모델 창출
 - ‘세종자원순환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자발적 시민운동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체험기회 확산
- 지역 내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 정부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세종지역 발생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 확충

□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 그린인프라 증가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 도시공원 및 도시숲 조성, 조림 및 가로수 심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 기존의 공원녹지 탄소흡수원을 활용하여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수목 식재 등을 통해 흡수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탄소흡수원 보전 및 관리
 - 탄소흡수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적인 탄소 관리 토대 마련

전략 3. 세종시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기능 강화

□ 댐-하천, 본류-지류 합류부에 대한 관리방향 명확화

- 댐-하천, 국가-지방하천 및 지방-소하천 관리 기준 마련
 - 홍수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천을 선정, 해당 하천의 설계빈도를 개선하는 등 홍수 대응력 증대 방안의 수립 필요
 - 하천 등급에 따라 하천 중요도 판단이 아닌, 치수계획의 규모(설계빈도)의 격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본류-지류 합류부 등 종합적인 홍수 대응 규모 향상 방안을 마련 시급
- 소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평가·관리 필요

□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지방하천 제방의 보강·신설

- 하천수위 분석을 통한 제방시설물 여유고 검토
 - 제방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의 경우 돌발호우 및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해당 구간에 증가된 홍수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제방 월류에 따른 극심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방하천과 같은 지자체의 중·소규모의 하천의 경우에는 전체 하천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에 대한 침수흔적도, 홍수범람예상도, 홍수대피지도 작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며, 세종시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정보 생산이 필요함
- 홍수위험지도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비상대응계획 수립 필요
 - 홍수위험지도의 제작·보급 및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족하며,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대피기준개발 및 정보전달체계 등 주민 대피체계가 미흡함
 - 세종시 역시 중소하천유역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홍수에 의한 인명피해를 위한 예방과 최근의 재난관리 방향이 복구 위주에서 사전예측·예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하천 인근의 위험도를 고려한 홍수범람위험구역 작성이 필요함

- 홍수범람위험구역의 작성과정에 재난관리기관 및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민대피 지원체계 등의 개발이 요구됨



[그림 6-11] 조천유역 홍수위험지도(100년 빈도 기준)

자료 : 송양호 등(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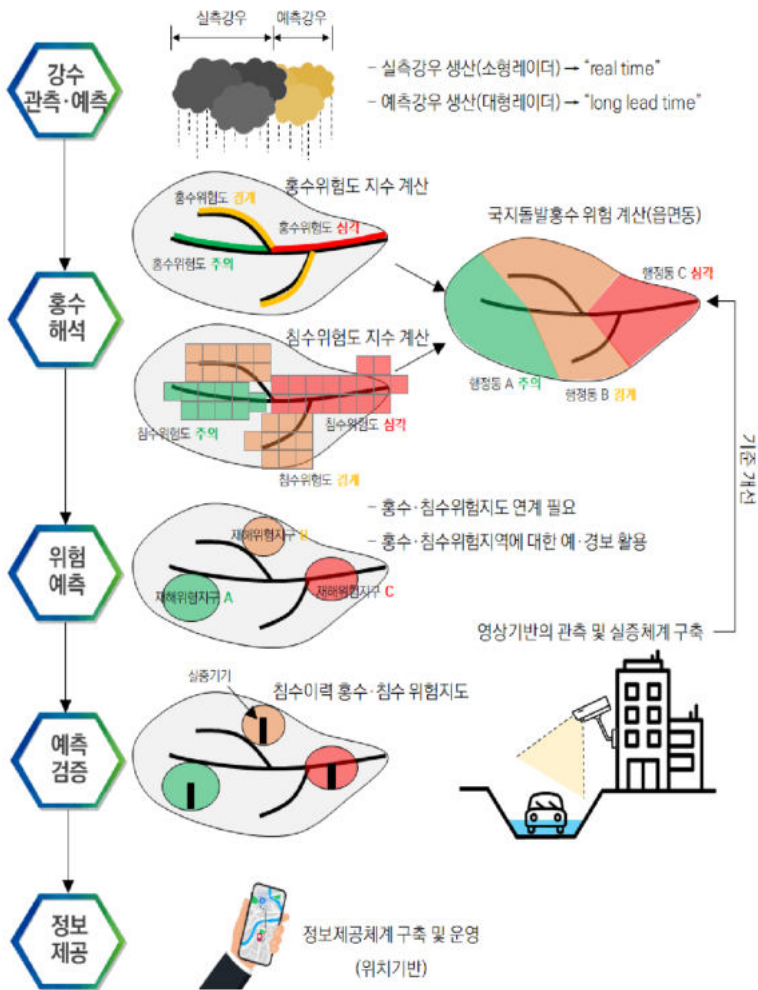
ICT 기반 세종형 스마트홍수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홍수대응 방재시설 첨단화 및 기능 강화

- 스마트 배수문의 설치 확대 및 지능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 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유역단위 홍수량 분담에 따른 하류 지역의 수재해 피해 예방사업의 확대 필요
- 수문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전동으로 개폐되는 작동방식을 자동운전방식으로 개량을 실시, 내수(관망)와 외수(하천)의 유량을 함께 고려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강우·수위·유량) 및 기준 마련 필요

○ 수문 등 시설관리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일원화 및 고도화

- 광역적인 홍수 피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이의 일환으로 수문 등의 조작 상황 등을 일원화하여 감시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방재 대응 능력의 강화 필요
- 서로 다른 시설 관리자 간으로의 수문 등의 조작 상황 등을 공유 일원화하여 감시하는 기기 관리형 수문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 필요
- 방재시설 가동상태 점검 및 보수·보강 이행 실적 평가 체계 마련 필요



[그림 6-12] ICT 기반 세종형 스마트홍수재난관리시스템 구축도(안)

자료 : 송양호 등(2022)

전략 4. 하천의 환경성 회복 및 물복지 로드맵 구축

□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및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가장 중요한 물환경 모니터링의 경우 국가 하천을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량측정망은 대부분 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류하천에 대한 상세자료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물관리 일원화 이후 유역단위 물환경 관리계획을 지향하는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대응을 위해 지류지천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세종시 지류지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하천에서 수질 및 생태 등 환경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세종시 금강 본류 구간, 미호천 및 지류·지천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금강과 미호천 본류 직접 유입지류 및 국가하천의 유입지천 등 조사대상하천을 선정, 이들 지류지천에 대하여 일반현황 조사 및 물환경 통합 모니터링을 통한 세종형 물환경관리 정책 수립의 개선이 필요
 -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통해 세종시 금강 및 충남 전 구간에 대한 주요 지류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세종시 본류는 세종보 지점, 지류하천의 경우 삼성천, 용수천, 대교천 지점에 대해 수질측정망을 운영)
 - 미호천 하류의 경우 세종시와 충청도의 경계지역으로 상류유역의 수질 오염 기여도 분석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
 - 미호천 하류권역(조천, 월하천, 연기천 등)의 주요 수질관리 정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유역으로 지류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도 조사 및 평가 필요



(a) 금강 보 및 본류 수질측정망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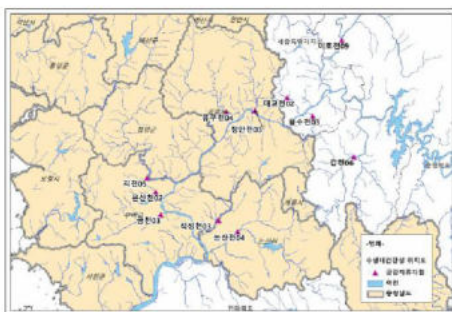
(b) 지류 수질측정망 지점

[그림 6-13] 금강권역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 수생태계 변화 관찰 및 건강성 변화 평가를 위해 금강 본류 및 지류 시·군 하천 양안 총 5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생물 출현종 및 개체수 변화 조사, 수생태 공간성 평가지표 설정 및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종시 지류하천에 대한 공간적 조사 범위가 부족함
 - 세종시 고유종인 흰수마자 이외에도 돌마자, 얼룩동사리, 물개와 같은 서식 고유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세종시 하도 특성에 맞는 안정된 군집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체서식처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함



(a) 생태계 변화관찰 구간



(b) 지류 건강성 조사지점

[그림 6-14] 금강권역 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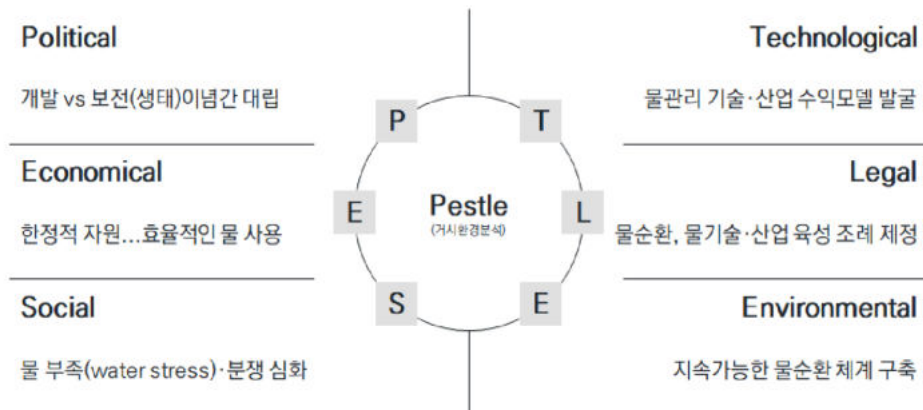
□ **정부정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한 세종시 물복지 로드맵 구축**

-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국내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와
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 실현에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6-15] 세종시 물관련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방안

- 세종시의 물 자급률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빗물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세종시 물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16]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내·외부 환경분석

7절 조직 특례 및 재원확보

전략 1. 조직 특례 확보 방안

□ 행정기구 및 정원 특례, 인사교류 확대

○ 행정기구 및 정원 특례

- 세종시는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를 고려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 증가, 도시의 발전정도에 따른 세종시의 기구와 공무원 정원 수의 증대가 뒷받침 되지 못한 한계
-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으며 본청의 실·국 설치범위와 같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인건비의 산정과 정원규모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 시·도와 동일한 법제적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조직운영에서 다양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기구설치 범위의 제한에 따른 기초사무와 광역사무의 통합처리나, 국회의 분원설치와 같은 신규수요에 대한 대응인력 확보의 곤란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특수성이 반영된 조직운영의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당과 같은 권한에 대해 조례에 근거를 두는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함

○ 인사교류 특례

- 세종시의 인사교류는 2013년 1명에서 2020년 21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는 23명으로

세종시 전체 공무원의 1% 수준으로 특별법상의 목표치 5%에 못미치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의 공무원과 중앙부처간 인사교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전략 2. 재원확보 방안

□ 재정특례 검토

○ 행복도시 특별회계 특례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는 2012년 8,028억원에서 2020년 3,407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중앙부처 청사 건립에 대한 재정수요 감소의 영향이지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자족도시 조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됨
-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투자매력과 교육기반의 강화가 필요한데, 행복도시 특별회계의 증대가 필요함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 2023년까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를 보정하고 있음
- 기준재정수요 보정특례만으로 세종시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가 부족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그럼에도 2013년 이후 지방교부세 지급이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준재정수요의 25%를 보정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균특회계 특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은 2015년 1천1백억원에서 2020년 9백 73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 균특회계에서 세종시 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99%에서 2020년 0.76%로 감소하였음

- 세종시의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 추세에 상응하는 균특회계 특례가 부여되지 않다고 평가됨

○ 종합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성장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지방자치 관련 행·재정제도들은 2층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단층제 형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계하였다면 출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는 출범 전후에 해소하지 못하였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지고 있는 행·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각종 특례를 설계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로섬게임을 하여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8절 1인 가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전략 1.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강화

-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강화
 - 청년 1인 가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오래 머물고 싶은 지역’, 또는 ‘가족을 이루고 싶은 지역’로의 이미지 제고
 - 일자리와 연계된 정주여건 마련, 청년특화마을 운영,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이후의 삶의 터전으로 세종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읍, 면 지역에 청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으며, 주로 원룸 형태에 거주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거주지 주변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가로등 등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전략 2.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 (공약 관련)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기존 홀로사는 노인 지원에 국한되었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전 연령세대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음
 -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정책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전략 3. 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 신설 및 운영

□ (공약 관련) 미래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추진

- 기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중앙부처 또는 비영리기구인 유니세프의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받고 인증받는 구조
-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는 평가기준에 따른 여성·아동친화도시로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발전적인 면모를 보여야 할 시기
-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세종시만의 미래형 인재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교육의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우수한 지역 영재를 발굴하고 선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유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미래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진다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자 인구 유입 전략으로서 병행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전략 4.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확대 실시

□ 평가 기준 맞춤형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선도적 아동친화도시로의 전략 필요

- 아동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는 세종시정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정 전반에 걸친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추진 될 수 있어야 함
- ‘평가’ 기준에 맞춘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아닌, 선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우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만의 노력을 보여야 함

전략 5. 산업단지 조성 및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연계

- 세종시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시도
 -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여성의 구직 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형의 경우, 여성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따라서 조성예정인 국가스마트 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시 그 과정을 일자리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성은 외(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의 도모
 - 산업단지 내 사업체는 소규모 종사자를 가진 중소기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과 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실행이 어려운 형편임
 - 산업단지 내 사업체가 모성보호제도나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대체인력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 차원에서 대체인력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9절 지역자원, 인프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전략 1. 문화향유를 위한 인프라·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및 공연시설

○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 현재 세종예술의전당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00석 규모의 공연장 2개소를 추가조성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역량과 규모를 감안한 공연이 가능하며, 예술공간 활용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시립 단위의 미술관 조성 필요

- 지역 내 시각 예술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 단위의 미술관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정 4기에서는 연동면 장옥진 화백의 생가를 복원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나, 이와는 별도의 신도시 권역 내 미술관 시설 조성이 필요함

지역문화에 기반한 축제 등 콘텐츠 개발

○ 낙화놀이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콘텐츠 개발

- 현재 영평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낙화놀이의 창조적·현대적 기법의 적용을 통해 축제콘텐츠 개발이 필요
- 축제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역사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그림 6-17] 세종예술의전당(좌), 2022년 세종축제 중 낙화놀이(우)

유휴공간 및 상가 공실 활용

○ 읍면지역 유휴공간 활용

- 조치원읍에는 과거 적산가옥 등 지역의 근대 역사성을 담보한 공간들이 있으나, 관리 소홀·관심 부재로 인해 소실되고 있어 이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거점 공간으로의 구현을 제안함

○ 신도시 권역 상가공실 활용

- 신도시 권역의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소극장 거리, 콘텐츠 플레이스 등의 조성 전략을 제안함
-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동지역을 순회하는 상생형문화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전략 2.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의 단계별 설립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점기관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조성 전략

- 콘텐츠 거점기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점기관의 마중물로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같은 추진 전략이 필요함

미디어단지와 연계 방안 수립

- 2027년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의 조성과 함께 미디어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거점기관의 조성전략이 필요함

전략 3. 지속 가능한 IP 발굴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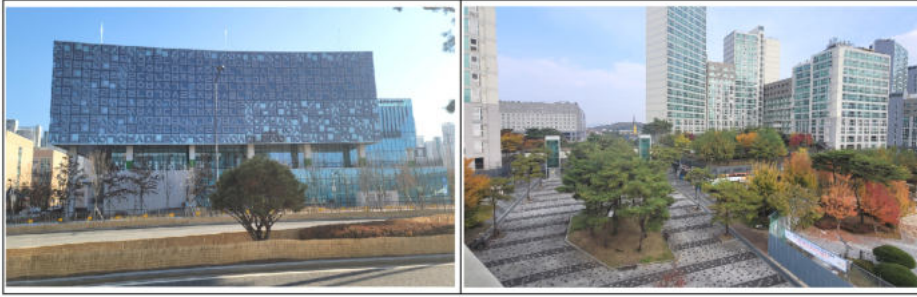
□ 지역 콘텐츠 IP 발굴과 확보 전략

-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사건 등 문화자원 소재의 연구와 함께 활용 가능성에 기반한 IP의 발굴을 제안함
 - IP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지역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대학 프로젝트 및 공모전 등을 통해서 발굴 가능
- 현재 콘텐츠 거점기관인 융합콘텐츠 기업 발굴 부서를 신설하여 장르별 유망 콘텐츠 기업을 발굴과 지원을 수행
 -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을 통해 융합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

전략 4. 한글을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노력

□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위한 노력

- 세종시라는 명칭부여 과정에서 명명된 의미를 살리고, 한글의 교육을 통해 국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필요
 - 시 차원에서는 한글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글문화단지 등 공간형 콘텐츠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정체성의 소재로서 ‘한글’에 대한 인식 환기가 필요
 - 세종시가 한글에 대한 정체성 구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장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6-18]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좌), 한글사랑거리 대상지(우)

전략 5. 지역 문화자원에 관한 관심과 활용방안 수립

□ 시 단위 문화유산 지정과 관심

- 지역 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심층조사를 통해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시 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3건의 문화유산이 시 단위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화놀이·가야금 산조·원수산 산신제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제잔재의 청산과 활용, 독립운동가 맹의섭에 대한 서훈 등에 대한 관심과 선양사업 필요
 - 전의면사무소 전정에 위치하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비석의 알림판 설치, 지역 대표독립운동가인 맹의섭 선생 묘소의 알림판 설치 등 그간 관심 가지지 못했던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



[그림 6-19] 원수산 산신각(좌), 맹의섭 선생 묘소(우)

전략 6. 지역자원의 창조적·현대적 활용

□ 금강을 활용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실천

- 금강 주변의 수변공간과 콘텐츠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입시설 구상,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활력 있는 복합적 친수공간으로 조성
- 친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수상레저체험을 더하여 새로운 수변휴양문화를 창조함
 -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ICT 등 미디어 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적합하고, 지역문화에 특화하는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 금강과 주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상호연계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경쟁력 있는 광역적 관광 매력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6-20] 안동 문보트(좌), 금강 보행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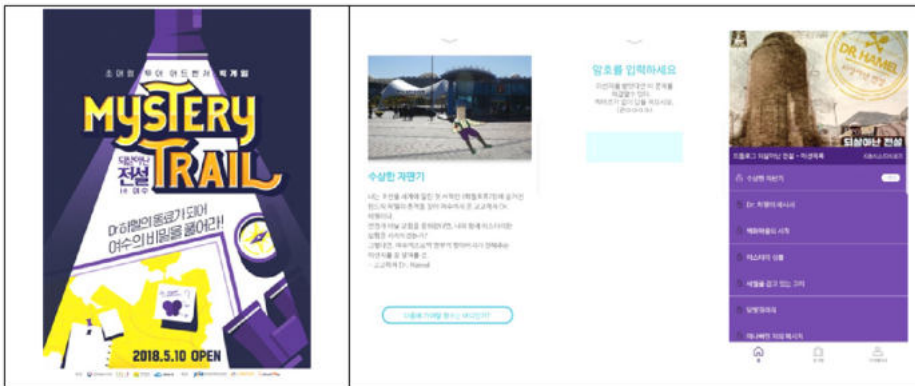
□ 지역 내 문화자원의 연계방안 수립을 통한 관광콘텐츠 구현

- 신도시 권역 내 금강보행교 - 세종시호수공원 - 세종중앙공원 - 전통문화체험관 - 원수산 및 전월산 둘레길 - 은행나무 역사공원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코스 개발 전략
 -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지역민들의 여가 향유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전략 7. ICT의 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구현 전략

□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의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의 도입

- 지역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이야기와 자원을 활용하고, ICT 기술의 도입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 금강보행교, 세종호수공원 등에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의 구현을 통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형성이 필요함



[그림 6-21]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사례_여수 미스테리트레일로드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계부처합동(202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기획재정부(2022),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금창호(2018:91); 김홍주(2019:118)
산업통상자원부(2021), <2020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서울연구원(2020),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2차)’ 연구
관련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서울연구원(2020), <싱가포르의 주차 시스템 정책 및 주차장 운영 현황>
서울연구원(2022), <싱가포르 주택·보건복지, 호치민 경제·관광 우수정책사례>
세종통계 홈페이지, <세종통계연보(2020)>, 04. 노동- 경제활동 인구총괄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20),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21),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세종특별자치시(2022), <미래전략도시 세종>
송양호 등(2022), <세종시 도시하천 유역의 홍수대응기준 수립 연구>
신우재, 이나래, 조준혁(2021), <스마트도시 정책·거버넌스 연구: 스마트도시 해외
사례 싱가포르(Singapore)>, 서울디지털재단
이범규(2022), ‘국가교통 DB자료, <대전시 교통정책 현안과 과제>’, 대전세종정책엑스포
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성은 외(2020),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 연구>
최성은 외(2022),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 연구>
최성은 외(2022), <세종시 사회조사로 본 1인 가구 정책 지원 방안>
한국교통연구원(2021), <2020 국가교통통계(국내편)>
한국교통연구원(2018),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및 정책 방향 전문가 심포지움>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1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
<지역별(도별) 농민수당 시행지침>

ACT Government(2018), *ACT PLANNING STRATEGY 2018*

CEEPC(2020), *Metropolitan Washington 2030 Climate and energy action plan*

City of Ottawa(2019), *City of Ottawa-New Official Plan Preliminary Policy Directions*

City of Ottawa(2020), *Climate Change Master Plan, 2020*

City of Sydney(2013), *The Sydne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ity of Sydney(2019), *City of Sydney Economic Future-Towards a new cycle*

FSO, *Farm structure survey*

FSO(2022), *Agriculture and Food Pocket Statistics*

ING Bank NV(2021), *Singapore Green Plan 2030*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국가정보: 싱가포르

Ottaway Playbook Team(2020), *BUILDING THE SMART CITY OTTAWA, ONTARIO*

Paraná Regional Department(2010), *CIDADES INOVADORAS CURITIBA 2030*

TOBY BRENNAM(2019), *Building a strong green and circular economy for Sydney-Final Report*

Wellington Economic Partnership(2008), *A VISION FOR WELLINGTON - The Vision & Plan for the future that WE want*

Widly Famous(2019), *Wellington Statement of Intent 2021-2024*

통 계

고용노동부(2021), <2020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농촌경제연구원(2017), <식품수급표>
산업통상자원부(2021), <2020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세종통계 홈페이지, <세종통계연보(2020)>, 04. 노동- 경제활동 인구총괄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농어업조사>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2021), <인구총조사>
통계청, <인구통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분류>
통계청 보도자료(2022), <장래가구특별추계: 2020~2050년>
한국교통연구원(2021), <2020 국가교통통계(국내편)>
한국교통연구원(2018),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및 정책 방향 전문가 심포지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부 (2018),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정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1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
행안부(2022), <주민등록인구 현황 재구성>

웹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세종의 소리(<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충전소(<https://ev.or.kr/evmlocal?sido=세종특별자치시>)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왕길환(2019.07.17.). [한-아세안 협력 30년] ④싱가포르 첫 에코타운 '풍골'. <연합 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717089700371)

한국춘(https://hankookchon.com/news/11502?s3=2003-07-01&s4=2021-08-11 &page=31)

최선미(2021.11.23.). 2021년 싱가포르 금융산업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Gbn=403&bbsSn=403&pNttSn=191562)

최선미(2021.11.29.). 2021년 싱가포르 관광산업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1578)

최선미(2021.12.01.). 2021년 싱가포르 IT산업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Gbn=403&bbsSn=403&pNttSn=191575)

AIF(2021.03.12.).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친환경 정책 전면 확대. <KIEP대외경제 정책연구원>(https://bit.ly/3G44sjk)

Town of Wellington(https://www.townofwellington.com/480/Strategic-Plan)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

ISBN 979-11-6075-354-7 93350